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15

#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지수 개발 및 분석 연구

The Development of Jeollabuk-do's Composite Job Creation Index  
and Related Analytical Research

김수은 박세현





Jeonbuk Institute

기획연구

2023-15

#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지수 개발 및 분석 연구

The Development of Jeollabuk-do's Composite Job Creation Index  
and Related Analytical Research

김수은 박세현



##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연구 책임 김수은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 5장  
공동 연구 박세현 | 전문연구원 | 제5장

---

자문위원 김공수 | 군산대 교수  
민왕기 | 노사발전재단 전북사무소 위원  
이강진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관리 코드 : 23GI1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연구목적 및 방법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역일자리정책의 공간이 지역 즉, 기초자치단체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지역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지역일자리는 지역산업정책의 파생수요가 아니라 지역소멸 및 지역인구유출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을 계획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정책 및 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역주도 일자리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를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함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대상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으로, 광역지자체인 전북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보조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범위는 2013년과 2023년으로 하였음
- 연구 방법은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부문별 지수 및 세부 항목지표를 선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였음
-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는 일자리 정책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항목지표는 각각 2개, 3개, 4개 지표를 채택하였음
- 지수별·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AHP분석을 실시하였음

## 2.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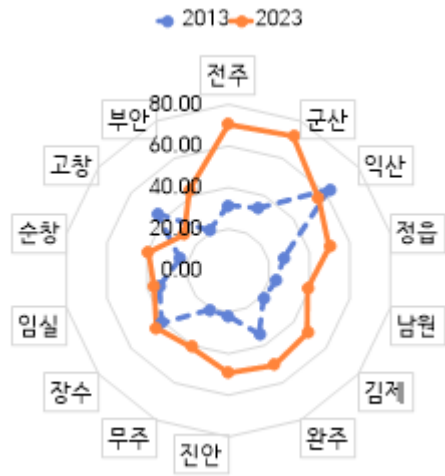
### ■ 연구결과 요약

- 전북지역 일자리 종합지수는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책지수, 양 지수, 질 지수가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질 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다만 순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전국 10위)
-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2023년 일자리 종합지수를 살펴보면 군산, 전주, 익산, 완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전북지역 산업단지, 혁신기관,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우수한 지역임
- 일자리 종합지수 순위가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전주, 군산, 김제, 진안으로, 이는 일자리 정책지수가 급격히 개선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전국 비교〉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전북 시군 비교〉







---

# 차 례

## CONTENTS

---

요 약 ..... i

---

### 제1장 연구 개요

|                                 |   |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3 |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 4 |
| 가. 연구 범위 .....                  | 4 |
| 나. 연구 방법 .....                  | 4 |
| 3. 연구 주요 내용 .....               | 7 |
| 가.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및 지역일자리 현황 ..... | 7 |
| 나. 지역 일자리지수 개발 .....            | 7 |
| 다. 지역 일자리 종합지수 측정 및 분석 .....    | 7 |
| 4. 연구의 기대효과 .....               | 7 |

---

### 제2장 일자리지수 관련 선행연구 검토

|  |    |
|--|----|
| 1. 일자리 정책 현황 .....                     | 11 |
| 가. 정부(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          | 11 |
| 나.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                   | 13 |
| 다. 전라북도 일자리정책 .....                    | 14 |
| 2. 일자리 지수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점 ..... | 17 |
| 가. 국외연구 .....                          | 17 |
| 나. 국내연구 .....                          | 20 |
| 다. 본 연구의 차별점 .....                     | 25 |

제3장 지역일자리지수 개발 및 정의

1. 전북지역 일자리 지수 정의 및 지표 개발 방법 ..... 29

    가. 지역일자리 지수 정의 ..... 29

    나. 지역일자리종합지수 지표개발 방법 ..... 30

2. 일자리 종합지수 체계 ..... 32

3. 지역일자리종합지수 산출 방법 및 분석자료 ..... 35

    가.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산출방법 ..... 35

    나. 지역일자리 세부지표 및 분석자료 ..... 36

제4장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분석

1. 지역일자리 부문별 현황 ..... 41

    가. 일자리 정책 ..... 41

    나. 일자리 양 ..... 46

    다. 일자리 질 ..... 54

    라. 관철은 일자리(Decent Work) ..... 72

    마. 소결 ..... 75

2. 지역일자리종합지수 부문지수별 세부지표 결과 ..... 77

    가. 지역일자리 부문지수 및 지표별 가중치 결과 ..... 77

    나. 일자리정책 ..... 78

    다. 일자리 양 지수 ..... 82

    라. 일자리 질 지표 ..... 88

3. 지역일자리종합지수 분석결과 ..... 98

    가. 일자리 정책지수 ..... 98

    나. 일자리 양 지수 ..... 101

    다. 일자리 질 지수 ..... 104

---

## 차 례

### CONTENTS

---

|                   |     |
|-------------------|-----|
| 라. 일자리 종합지수 ..... | 107 |
| 마. 소결 .....       | 110 |

---

### 제5장 결론

|                      |     |
|----------------------|-----|
| 1. 연구의 요약 .....      | 113 |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 116 |

|            |     |
|------------|-----|
| 참고문헌 ..... | 118 |
|------------|-----|

|                      |     |
|----------------------|-----|
| 영문요약 (Summary) ..... | 120 |
|----------------------|-----|

|          |     |
|----------|-----|
| 부록 ..... | 125 |
|----------|-----|

## 표 차례

### LIST OF TABLES

|   |    |
|---|----|
| [표 1-1] 지역 일자리 구성지수 및 세부지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 5  |
| [표 2-1] 정부(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 11 |
| [표 2-2]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17~'23년)              | 12 |
| [표 2-3] '23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 12 |
| [표 2-4] ILO의 양질의 일자리 측정 지침                      | 17 |
| [표 2-5] OECD 일자리 질 측정 지표                        | 20 |
| [표 2-6] ILO 기준에 따라 분류한 국내 선행연구                  | 22 |
| [표 3-1] 일자리 지수의 구성                              | 29 |
| [표 3-2] 적절한 성과지표 조건(SMART)                      | 30 |
| [표 3-3] 평가의 5가지 주요 준거                           | 30 |
| [표 3-4] 통계품질 요소                                 | 31 |
| [표 3-5] 본 연구에서의 개별지표 선정기준                       | 31 |
| [표 3-6]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체계                           | 34 |
| [표 3-7] 일자리지수 및 구성 지표                           | 37 |
| [표 4-1]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전국 광역 시도)              | 42 |
| [표 4-2]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전북 지자체)                | 43 |
| [표 4-3] 취업자 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전국 광역 시도)           | 44 |
| [표 4-4] 취업자 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전북 지자체)             | 45 |
| [표 4-5] 일자리 규모 (전국 광역 시도)                       | 47 |
| [표 4-6] '15년~'21년 전남과 전북의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 비교 | 47 |
| [표 4-7] 일자리 규모 (전북 지자체)                         | 48 |
| [표 4-8] 일자리 증감 (전국 광역 시도)                       | 49 |
| [표 4-9] 일자리 증감 (전북 지자체)                         | 50 |
| [표 4-10] 고용률 (전국 광역 시도)                         | 52 |
| [표 4-11] 고용률 (전북 지자체)                           | 53 |
| [표 4-12] 고용안정성 (전국 광역 시도)                       | 55 |

---

## 표 차례

### LIST OF TABLES

---

|  |     |
|--|-----|
| [표 4-13] 고용안정성 (전북 지자체) .....                      | 56  |
| [표 4-14] 소득 수준 (전국 광역 시도) .....                    | 58  |
| [표 4-15] 소득 수준 (전북 지자체) .....                      | 59  |
| [표 4-16] 적절한 노동시간을 제공하는 일자리 수 (전국 광역 시도) .....     | 61  |
| [표 4-17] 적절한 노동시간을 제공하는 일자리 수 (전북 지자체) .....       | 62  |
| [표 4-18] 취업자 수 대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전국 광역 시도) .....  | 64  |
| [표 4-19] 취업자 수 대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전북 지자체) .....    | 65  |
| [표 4-20] 취업자 수 대비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전국 광역 시도) ..... | 67  |
| [표 4-21] 취업자 수 대비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전북 지자체) .....   | 68  |
| [표 4-22]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전국 광역 시도) .....     | 70  |
| [표 4-23]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전북 지자체) .....       | 71  |
| [표 4-24] 관참은 일자리 수 (전국 광역 시도) .....                | 73  |
| [표 4-25] 관참은 일자리 수 (전북 지자체) .....                  | 74  |
| [표 4-26] 가중치 평가 결과 .....                           | 77  |
| [표 4-27] 시도별 일자리 정책지수 변화 .....                     | 99  |
| [표 4-28] 전북 시군별 일자리 정책지수 변화 .....                  | 100 |
| [표 4-29] 시도별 일자리 양 지수 비교 .....                     | 102 |
| [표 4-30] 전북 시군별 일자리 양 지수 변화 .....                  | 103 |
| [표 4-31] 시도별 일자리 질 지수 변화 .....                     | 105 |
| [표 4-32] 전북 시군별 일자리 질 지수 변화 .....                  | 106 |
| [표 4-33] 시도별 일자리 종합 지수 변화 .....                    | 108 |
| [표 4-34] 전북 시군별 일자리 종합 지수 변화 .....                 | 109 |

---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  |    |
|--|----|
| [그림 2-1]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                 | 13 |
| [그림 2-2] 민선 8기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계획 .....         | 14 |
| [그림 2-3] 유로파운드 일자리 질 모델 7가지 요소 .....       | 19 |
|  |    |
| [그림 4-1] 2013년 시도별 정책의지 지표 비교 .....        | 78 |
| [그림 4-2] 2023년 시도별 정책의지 지표 비교 .....        | 78 |
| [그림 4-3] 2013년 전북 시군별 정책의지 지표 비교 .....     | 79 |
| [그림 4-4] 2023년 전북 시군별 정책의지 지표 비교 .....     | 79 |
| [그림 4-5] 2013년 시도별 정책노력 지표 비교 .....        | 80 |
| [그림 4-6] 2023년 시도별 정책노력 지표 비교 .....        | 80 |
| [그림 4-7] 2013년 전북 시군별 정책노력 지표 비교 .....     | 81 |
| [그림 4-8] 2023년 전북 시군별 정책노력 지표 비교 .....     | 81 |
| [그림 4-9] 2013년 시도별 일자리 규모 지표 비교 .....      | 82 |
| [그림 4-10] 2023년 시도별 일자리 규모 지표 비교 .....     | 83 |
| [그림 4-11] 201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규모 지표 비교 .....  | 83 |
| [그림 4-12] 202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규모 지표 비교 .....  | 83 |
| [그림 4-13] 2013년 시도별 일자리 증감 지표 비교 .....     | 84 |
| [그림 4-14] 2023년 시도별 일자리 증감 지표 비교 .....     | 84 |
| [그림 4-15] 201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증감 지표 비교 .....  | 85 |
| [그림 4-16] 202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증감 지표 비교 .....  | 85 |
| [그림 4-17] 2013년 시도별 일자리 참여 지표 비교 .....     | 86 |
| [그림 4-18] 2023년 시도별 일자리 참여 지표 비교 .....     | 86 |
| [그림 4-19] 201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참여 지표 비교 .....  | 87 |
| [그림 4-20] 202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참여 지표 비교 .....  | 87 |
| [그림 4-21] 2013년 시도별 일자리 안정성 지표 비교 .....    | 89 |
| [그림 4-22] 2023년 시도별 일자리 안정성 지표 비교 .....    | 89 |
| [그림 4-23] 201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안정성 지표 비교 ..... | 90 |
| [그림 4-24] 202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안정성 지표 비교 ..... | 90 |
| [그림 4-25] 2013년 시도별 임금보상 지표 비교 .....       | 92 |

---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

|           |                            |     |
|-----------|----------------------------|-----|
| [그림 4-26] | 2023년 시도별 임금보상 지표 비교       | 92  |
| [그림 4-27] | 2013년 전북 시군별 임금보상 지표 비교    | 93  |
| [그림 4-28] | 2023년 전북 시군별 임금보상 지표 비교    | 93  |
| [그림 4-29] | 2013년 시도별 노동시간 지표 비교       | 94  |
| [그림 4-30] | 2023년 시도별 노동시간 지표 비교       | 94  |
| [그림 4-31] | 2013년 전북 시군별 노동시간 지표 비교    | 95  |
| [그림 4-32] | 2023년 전북 시군별 노동시간 지표 비교    | 95  |
| [그림 4-33] | 2013년 시도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 비교    | 96  |
| [그림 4-34] | 2022년 시도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 비교    | 96  |
| [그림 4-35] | 2013년 전북 시군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 비교 | 97  |
| [그림 4-36] | 2022년 전북 시군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 비교 | 97  |
| [그림 4-37] | 시도별 일자리 정책지수 비교            | 98  |
| [그림 4-38] | 전북 시군별 일자리 정책지수 비교         | 100 |
| [그림 4-39] | 시도별 일자리 양 지수 비교            | 101 |
| [그림 4-40] | 전북 시군별 일자리 양 지수 비교         | 103 |
| [그림 4-41] | 시도별 일자리 질 지수 비교            | 104 |
| [그림 4-42] | 전북 시군별 일자리 질 지수 비교         | 106 |
| [그림 4-43] |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전국 비교           | 107 |
| [그림 4-44] |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도내 시군 비교        | 1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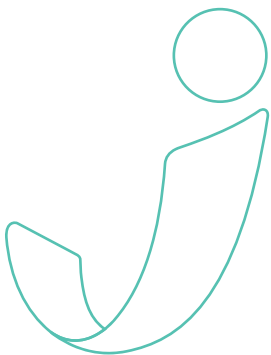




# 제 1 장

##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주요 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 제 1 장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 경제활력 저하 및 청년 역외 유출에 따른 지역 공동화 문제는 지역의 저성장 경제구조 고착화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청년의 유출은 일자리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단순히 일자리 규모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 근무환경의 매력도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그동안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등 정부지역일자리정책 대응 또는 지역산업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는 지역의 일자리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거나 지역산업의 활성화 여부에 종속되는 변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일자리정책을 지역주도로 기획·추진·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일자리를 파생적 수요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자리 지수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일자리 지수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일자리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일자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일자리 종합지수 등이 논의되어오고 있다.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도적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도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시군차원에서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이행하는데 있어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정책 및 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역주도 일자리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종합지수의 객관성, 비교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지수와 세부지표별 중요도를 제시하고 일자리종합지수 결과 분석을 통해 지역차원의 일자리정책에서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 범위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데, 분석대상지역과 분석범위를 의미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연구 대상지역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으로, 광역지자체인 전북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분석범위는 2013년과 2023년으로 지난 10년간 지역일자리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나. 연구 방법

#### 1) 정보조사

연구 방법은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부문별 지수 및 세부 항목지표를 선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문헌조사의 경우 중앙정부 및 전북 일자리 정책 계획과 지역일자리 지수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되는 점과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논의되는 지표를 요약하여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표를 발굴하고, 다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지수와 지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지역일자리 종합지수와 구성지수 및 세부항목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의 시도별, 시군별 지역고용공시제자료, 통계청 인구조사, 사업체조사, 지역고용조사 등의 자료를 획득하였다.

## 2) 전문가 조사 및 자문회의

지수별·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자문회의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1] 지역 일자리 구성지수 및 세부지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 구분   | 내용                           | 비고 |
|------|------------------------------|----|
| 조사목적 | 지역 일자리 구성지수 및 세부지표 선정        |    |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13일 ~ 19일          |    |
| 조사대상 | 도내 일자리정책 관련 전문가, 공무원, 사업수행기관 |    |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
| 조사내용 | 지역일자리 구성지수 및 세부지표간 쌍대비교      |    |

## 3) 일자리 지수 및 지표 분석방법

부문별 일자리의 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각 지표별 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먼저 각 지표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 Methodology)를 사용한다. 선형표준화는 세부항목의 값이 0~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정규화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항목 값과 해당 항목 내 최소점수 간의 차이를 해당 항목 내 최대점수와 최소점수 간의 차이를 조정해 준 값을 의미한다.

측정지표가 일자리의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식(1), 반대의 경우는 식(2)를 통해서 표준화 하였다.

$$Z_{ij} = \frac{z_{ij} - \text{Min}(z_j)}{\text{Max}(z_j) - \text{Min}(z_j)} * 100 \quad \text{식(1)}$$

$$Z_{ij} = \frac{z_{ij} - \text{Max}(z_j)}{\text{Min}(z_j) - \text{Max}(z_j)} * 100 \quad \text{식(2)}$$

(여기서,  $z_{ij}$ 는 지역별( $i$ ) 세부항목( $j$ ) 값,  $Z_{ij}$ 는 세부항목을 정규화한 값)

---

일자리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별 값은 식(1)과 식(2)를 통해서 정규화한 세부항목의 합으로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지역별 일자리 종합지수(RWI: Regional Work Index)는 다음 식(4)와 같다.

$$Y_{ij} = \sum_{j=1}^n p_j Z_{ij}, \quad \text{식(3)}$$

(여기서  $Y_{ij}$ 는 지역별 지표의 평균값,  $p_j$ 는 세부항목의 가중치,  $n$ 은 세부항목의 개수)

$$RWI_i = \sum_{j=1}^N q_j Y_{ij}, \quad \text{식(4)}$$

(여기서  $q_j$ 는 지표별 가중치,  $N$ 은 지표의 개수)

일자리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부문지수와 부문별 하위지표의 중요도는 전문가 대상 조사 및 AHP 방법을 통해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

### 3. 연구 주요 내용

#### 가.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및 지역일자리 현황

- 정부 및 일자리정책 및 지원사업 분석
- 지역 일자리 현황

#### 나. 지역 일자리지수 개발

- 지역일자리 지수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지역일자리 구성지수·하위 지표 선정 및 가중치 판별

#### 다. 지역 일자리 종합지수 측정 및 분석

- 지역일자리 지수별·지표별 중요도 분석
- 지역일자리 지수별·지표별 산출결과 분석
-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분석

### 4.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존 지역일자리 질 지수 개발 관련 연구에서 나아가 지역일자리 지수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함으로써 지역일자리 평가에 종합적, 객관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자리 과정지표인 정책과 결과지표인 양과 질 등 지역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지수를 개발,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시군별 일자리정책 추진과정 및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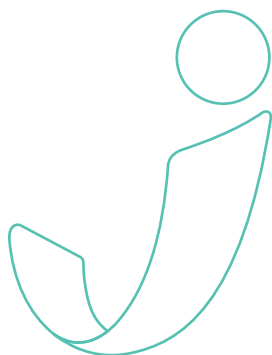




## 제 2 장

### 일자리지수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일자리 정책 현황
2. 일자리 지수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점





## 제 2 장 일자리지수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 일자리 정책 현황

#### 가. 정부(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 업무 비전 : 일자리 기회 확대, 일터문화 혁신

[표 2-1] 정부(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 목표                       | 전략  |
|--------------------------|---|
| 지역중심 일자리 창출              |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하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br>지역·산업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br>지역 고용위기 선제 대응  |
| 4차산업혁명 대응<br>신산업신기술 인력양성 | 신산업·신기술 훈련 확대<br>기업·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br>부처 협업을 통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
| 대상별 일자리정책 강화             | (2030세대) 일자리 체감도 제고<br>(여성)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경력단절 예방<br>(5060세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br>(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강화<br>(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 |
| 국민고용안전망 완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br>훈련 사각지대 없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br>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br>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
| 스마트 일터 조성                | 불필요한 초과근로 줄이기<br>일터혁신을 통한 생산성 높은 일터 조성  |
| 안전한 일터 조성                | 사업장 안전 강화<br>직장 내 갑질 근절   |
| 워라벨 일터 지원                | 일·생활의 조화<br>휴가·휴일 활성화   |

자료 : 고용노동부(2023)

## ■ 2023년 일자리 예산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3,481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3.9% 감소한 규모이며, 24개 부처(청)에서 181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2-2]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17~'23년)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일자리 예산(억 원)        | 159,452         | 180,181         | 212,374         | 254,998         | 305,131         | 315,809         | 303,481         |
| 전년대비 증가율(%)        | (8.0)           | (13.0)          | (17.9)          | (20.1)          | (19.7)          | (3.9)           | (△3.9)          |
| 총지출 대비<br>일자리예산(%) | 4.0<br>[400.5조] | 4.2<br>[428.5조] | 4.5<br>[470.5조] | 5.0<br>[512.3조] | 5.5<br>[558.0조] | 5.2<br>[607.7조] | 4.7<br>[639.0조] |

자료 : 고용노동부(2023)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하였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4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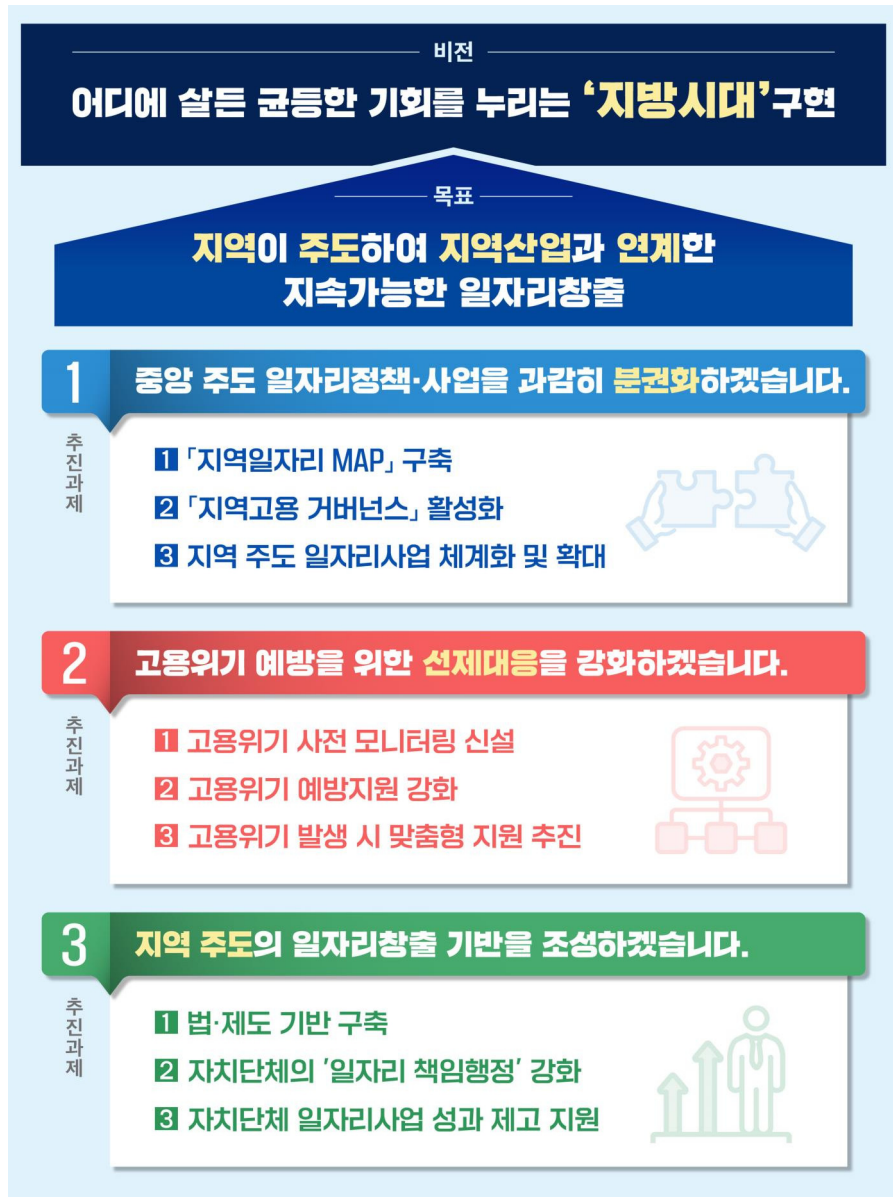
[표 2-3] '23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단위 : 억 원 만 명, %)

| 유 형                    | '22년    | '23년    | 증감      | 유형 비중 |      |
|------------------------|---------|---------|---------|-------|------|
|                        |         |         |         | %     |      |
| 전 체(181개)              | 315,809 | 303,481 | △12,327 | △3.9  | 100  |
| 1. 직접일자리(29개)          | 32,079  | 32,244  | +165    | 0.5   | 10.6 |
| * 직접일자리 인원             | (103)   | (104.4) | +1.4    |       |      |
| 2. 직업훈련(41개)           | 24,785  | 27,301  | +2,516  | 10.1  | 9.0  |
| 3. 고용서비스(36개)          | 18,922  | 17,745  | △1,177  | △6.2  | 5.8  |
| 4. 고용장려금(24개)          | 65,247  | 50,634  | △14,613 | △22.4 | 16.7 |
| 5. 창업지원(26개)           | 28,376  | 31,484  | +3,108  | 11.0  | 10.4 |
|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13개)   | 137,732 | 134,404 | △3,328  | △2.4  | 44.3 |
| 7. 지원고용 및 재활(장애인, 12개) | 8,668   | 9,669   | +1,001  | 11.5  | 3.2  |

자료 : 고용노동부(2023)

## 나.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자료 : 고용노동부(2022)

[그림 2-1]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 다. 전라북도 일자리정책

### ■ 민선8기 전북 일자리 종합계획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은 고용노동부 정책방향에 맞게 일자리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노동시장 및 고용환경 전반에 걸친 전략 수립이러기 보다 고용거버넌스 구축,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창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맞추고 있다.



자료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2023)

[그림 2-2] 민선 8기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계획

■ 부문별 세부실행과제

○ 5대 전략 ▷ 15개 핵심과제 ▷ 78개 실행과제

(단위 : 개, 백만원, 명)

| 전략                | 핵심과제                      | 실행과제  | 연관사업                                  |   | 일자리   |
|-------------------|---------------------------|---|---------------------------------------|---|---|
|                   |                           |   | 사업수                                   | 예산  |   |
| 5                 | 15                        | 78  | 370                                   | 1,364,043   | 177,856   |
| 고용<br>거버넌스<br>초점화 | ① 일자리컨트롤타워 중심<br>현안·성과 관리 | 가. 고용거버넌스 진화<br>나. 노사민정 협력증대  | 1<br>2                                | 643<br>84   | 90<br>9   |
|                   | ② 지방소멸 및<br>고용위기 선제대응     | 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 2                                     | 5,300   | 615   |
|                   | ③ 고용인프라와<br>일자리 질 개선      | 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br>나. 일가정 양립, 워라벨 문화 확산<br>다.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br>라.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br>마. 농어업-농어촌 고용서비스 강화<br>바. 공공기관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br>사. 취업연계 플랫폼 기능 강화<br>아. 비정규직 일자리 질 개선 | 3<br>3<br>1<br>27<br>2<br>2<br>1<br>3 | 1,255<br>36,997<br>28<br>33,886<br>3,480<br>118<br>840<br>691 | 1,294<br>1,133<br>25<br>18,025<br>35<br>196<br>1,440<br>372 |
| 농생명<br>산업<br>고도화  | ① 농생명바이오<br>클러스터 촉진       | 가. 농산업 6차산업화 융복합 일자리 창출<br>나. 바이오 융복합 창조산업 기반 확충<br>다. 식품, 농자재, 반려동물, 곤충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  | 7<br>3<br>5                           | 6,818<br>5,200<br>7,473                                       | 371<br>13<br>94   |
|                   | ② 스마트 친환경<br>농업허브 안착      | 가. 청년영농인 양성<br>나. 신기술장비인력 양성<br>다. 농촌관광 운영능력 제고<br>라. 친환경 영농 지원   | 3<br>4<br>2<br>1                      | 2,431<br>7,274<br>3,081<br>162                                | 68<br>100<br>82<br>30                                       |
|                   | ③ 일손이 모이는<br>농·산·어촌 형성    | 가. 도시민 농산어촌 유치 지원<br>나. 농어업-농어촌 고용서비스 강화<br>다. 농어업분야 공공일자리 창출<br>라. 전문 농업인 육성<br>마. 청년농업인 육성<br>바.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 5<br>2<br>10<br>11<br>3<br>1          | 2,787<br>4,724<br>16,601<br>3,441<br>12,302<br>3,699          | 1,542<br>11,650<br>983<br>4,055<br>399<br>139               |
| 신성장<br>산업<br>도약화  | ① 첨단미래산업<br>선도 육성         | 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br>나. 미래 맞춤형 인재육성 및 취업연계 연구개발 지원<br>다. 전북연구개발특구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br>라. 성장동력 산업 육성<br>마.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br>바.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창출                            | 4<br>7<br>2<br>8<br>2<br>1            | 24,414<br>7,651<br>2,650<br>175,095<br>832<br>600             | 21<br>883<br>65<br>7,299<br>48<br>379                       |

| 전략                | 핵심과제                    | 실행과제   | 연관사업                                      |   | 일자리   |
|-------------------|-------------------------|--|---|---|---|
|                   |                         |  | 사업수                                       | 예산  |   |
| 신성장<br>산업<br>도약화  | ② 뿌리산업 혁신과<br>디지털 대전환   | 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br>나. 탄소소재 상용화 촉진<br>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br>라. 성장동력 산업 육성<br>마. 지역기반형 콘텐츠 산업 육성<br>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인력양성 공급<br>사. 중소기업 성장건인<br>아. 전북 섬유산업 육성  | 4<br>7<br>7<br>8<br>4<br>3<br>14<br>6     | 3,982<br>29,414<br>19,298<br>6,245<br>5,078<br>8,054<br>40,738<br>3,327   | -<br>66<br>89<br>292<br>8<br>197<br>494<br>182            |
|                   | ③ 새만금 산업기반 및<br>금융허브 조성 | 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br>나. 새만금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br>다. 전북 금융산업 육성  | 3<br>1<br>2                               | 5,784<br>-<br>2,000   | 477<br>1,540<br>15  |
| 문화관광<br>산업<br>혁신화 | ① 문화관광콘텐츠<br>생태계 혁신     | 가. 지역기반형 콘텐츠 산업 육성<br>나. 자립가능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br>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br>라. 문화예술분야 공공 일자리 창출<br>마.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br>바.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br>사. 문화재 안전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br>아.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통한 체육일자리 창출<br>자. 전라북도 관광벤처 육성 | 7<br>4<br>3<br>4<br>3<br>1<br>4<br>5<br>1 | 8,376<br>1,940<br>1,051<br>6,944<br>4,218<br>636<br>5,184<br>6,968<br>500 | 102<br>268<br>157<br>201<br>312<br>56<br>149<br>457<br>70 |
|                   | ② 지역 특화로<br>상권 활성화      | 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br>나. 자영업자 창업성공률 제고 지원<br>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br>라. 전북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br>마.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 2<br>5<br>2<br>1<br>3                     | 1,846<br>5,313<br>300<br>450<br>1,199                                     | 114<br>6,308<br>40<br>3<br>287                            |
|                   | ③ 녹색사회적경제<br>자립화 촉진     | 가.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br>나.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br>다.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br>라. 산림문화, 체험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br>마. 탄소중립 실현<br>바. 상수원 및 하천하구 수질보전<br>사.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대상지 확대   | 8<br>3<br>2<br>8<br>5<br>2<br>1           | 4,014<br>13,544<br>5,152<br>2,574<br>2,291<br>2,318<br>73,940             | 92<br>889<br>524<br>107<br>136<br>316<br>100              |
| 일자리<br>매칭<br>신도화  | ① 청년활동 및<br>벤처창업 지원     | 가. 청년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br>나. 청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br>다. 전주기 창업지원<br>라. 전북형 벤처 창업 허브 구축  | 18<br>2<br>8<br>14                        | 68,117<br>3,710<br>2,780<br>36,835  | 9,043<br>330<br>234<br>336                                |
|                   | ② 이력단절 근로자<br>경력 이음     | 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br>나. 신중년 일자리 창출지원<br>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br>라.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확충<br>마. 산림재해 예방 일자리 창출<br>바.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br>사. 도민안전 및 지안 제고   | 6<br>4<br>2<br>4<br>5<br>13<br>1          | 3,917<br>3,922<br>2,539<br>31,581<br>23,562<br>23,635<br>4,248            | 10,209<br>717<br>331<br>2,845<br>1,444<br>984<br>745      |
|                   | ③ 취약계층 소득형<br>일자리 연계    | 가.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br>나.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서비스 지원<br>다. 경력연계형 노인일자리 창출<br>라. 저소득층 일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br>마. 청소년 자립지원<br>바. 성매매 피해자 일자리 지원  | 10<br>9<br>4<br>4<br>1<br>3               | 157,720<br>87,646<br>251,448<br>50,761<br>67<br>839                       | 6,920<br>5,003<br>69,503<br>3,566<br>2<br>17              |



## 2. 일자리 지수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점

### 가. 국외연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양질의 일자리지표 프레임워크는 11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통계적 지표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법적인 지표도 함께 제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모니터링 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일자리 질 모델을 개발하여 5년 주기로 EWCS(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를 통해 정기적으로 근로 조건을 조사하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로파운드의 EWCS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질 모델은 7가지 요소(물리적 환경, 작업 강도, 근무시간의 질, 사회적 환경, 기술과 재량, 전망, 수입)로 구성된다. 유로파운드는 EWCS 조사를 통해 일자리 질 모델의 7가지 요소를 직업별, 성별, 연령별, 나라별로 평균을 비교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ECD는 일자리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각 국가별 3개 요소(임금의 질, 노동시장 안정성, 근로환경의 질)로 구성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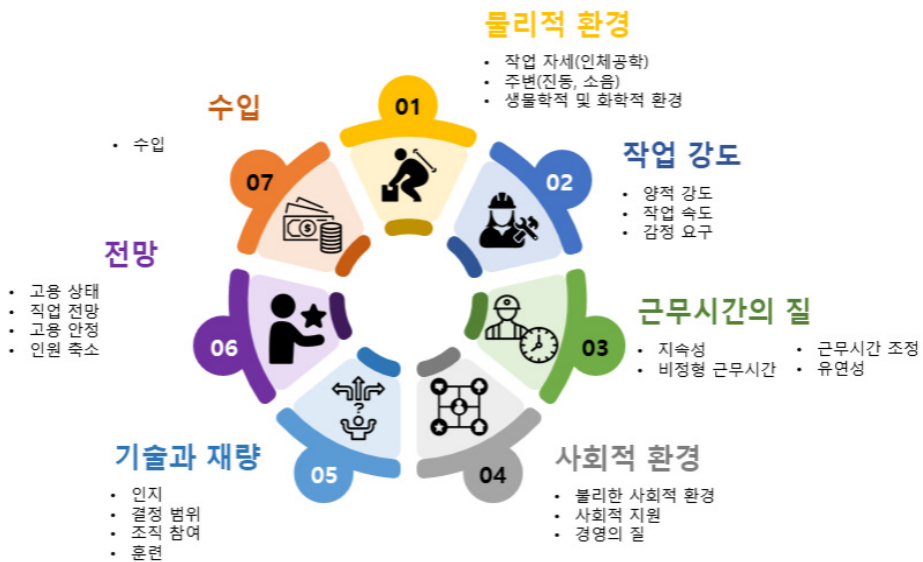
[표 2-4] ILO의 양질의 일자리 측정 지침

| 요소              | 지표  |  |  |
|-----------------|---|--|--|
|                 | 2002년 워킹페이퍼 기준  | 2013년 매뉴얼 기준(추가)   | 법적 지표  |
| 고용 기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활동참가율</li> <li>고용률</li> <li>실업률</li> <li>15세-24세 실업률</li> <li>비농업부문 임금노동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중이 아닌 15세-24세 실업률</li> <li>비공식 고용</li> <li>교육 수준별 실업률</li> <li>고용형태에 따른 고용</li> <li>자기계정 및 가족 고용비율</li> <li>노동저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완전고용 정책</li> <li>실업 보험</li> </ul> |
| 적절한 수입과 생산적인 노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충분한 임금 비율(고용형태에 따라 중간 시급의 1/2 미만, 또는 최저시급 미만 중 더 큰 비율)</li> <li>주요 직종 평균 수입</li> <li>최근 직무교육을 받은 직원(지난 1년/지난 4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빈곤비율</li> <li>저임금(중간 시급의 2/3 미만)</li> <li>평균실질임금</li> <li>중간임금대비 최저임금</li> <li>제조업 임금 지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임금</li> </ul>                       |

| 요소                | 지표   |   |   |
|-------------------|--|---|---|
|                   | 2002년 워킹페이퍼 기준   | 2013년 매뉴얼 기준(추가)  | 법적 지표   |
| 적절 근무 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시간 노동비율(고용형태에 따른 고용률)</li> <li>시간관련 과소고용 비율(기준 시간 미만의 근무자 중 추가 근무 의향 취업자의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시간 노동비율(주당 48시간 이상)</li> <li>보통 근무 시간(표준근무시간 범위)</li> <li>고용인당 연간 근무 시간</li> <li>유급 연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근무시간</li> <li>유급 연차</li> </ul>                      |
| 일, 가정 및 개인 생활의 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교육 연령 이하의 아동을 가진 여성들(20-49세)의 취업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회적/비정상적 시간</li> <li>모성보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휴가(휴가 기간 및 수당 비율 포함)</li> <li>육아휴직</li> </ul>        |
| 철폐해야 할 노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형태에 따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비율</li> <li>임금노동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동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 노동 종사 아동</li> <li>강제 노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노동철폐 정책</li> <li>강제노동철폐 정책</li> </ul>                |
| 고용안 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li> <li>임시 임금노동자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안정한 고용률</li> <li>근속기간</li> <li>생계형 근로자비율</li> <li>실질소득임시근로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계약 종료</li> </ul>                                     |
| 동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직종 분화</li> <li>경영 행정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임금격차</li> <li>비농업부문 임금 고용 여성 비율</li> <li>이주노동자의 부문별/직업별 분포도</li> <li>장애인 고용 측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등한 기회 및 대우</li> <li>동일 노동, 동일 임금</li> </ul>           |
| 안전한 작업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명적 산재비율</li> <li>근로감독관 비율</li> <li>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명적이지 않은 산재율</li> <li>산재로 인한 손실 시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 상해 혜택</li> <li>안전보건 근로 감독</li> </ul>                |
| 사회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사회보장지출(GDP 대비)</li> <li>현금소득보전지출(GDP 대비)</li> <li>현금소득보전 수혜자 비율</li> <li>연금 수혜자 비율(65세 이상)</li> <li>연금 가입자 비율(경제활동인구 대비)</li> <li>평균 연금액(중간 또는 최소 수입 대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의료보험보장비용</li> <li>질병/상해로 인한 병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li> <li>질병/상해로 인한 병가</li> <li>장애로 인한 병가</li> </ul> |
| 사회적 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조가입률</li> <li>단체교섭 적용률</li> <li>파업과 직장폐쇄 빈도</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li> <li>단체교섭권</li> <li>삼자 협의</li> </ul>  |

| 요소                      | 지표  |   |  |
|-------------------------|---|---|--|
|                         | 2002년 워킹페이퍼 기준  | 2013년 매뉴얼 기준(추가)  | 법적 지표  |
|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인당 생산량(PPP기준)</li> <li>고용인당 생산량 성장률</li> <li>인플레이션</li> <li>성인 인구 교육 수준</li> <li>경제부문의 고용 구성</li> <li>비공식 고용</li> <li>소득불평등</li> <li>빈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li> <li>HIV 양성인 근로가능인구 비율</li> <li>노동소득분배</li> <li>1인당 실질GDP 구매결정력</li> <li>산업별 여성 고용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행정</li> </ul> |

자료 : Anker(2002)와, ILO(2013a)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자료 : Eurofound(2021)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2-3] 유로파운드 일자리 질 모델 7가지 요소

[표 2-5] OECD 일자리 질 측정 지표

| 요소       | 주요 지표  |
|----------|--|
| 임금의 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임금</li> </ul>   |
| 노동시장 안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 불안감<sup>1)</sup></li> <li>• 실업률</li> <li>• 실업보험</li> </ul>   |
| 근로환경의 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긴장<sup>2)</sup></li> <li>• (높은 수준의 작업 요구) 신체적 위험 요소, 장시간 근로</li> <li>• (낮은 수준의 작업 요구) 업무 자율성과 교육 기회, 교육 및 학습</li> </ul> |

자료 : OECD(2023)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 나. 국내연구

일자리 지수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로, ILO의 ‘Decent Work’와 EU의 ‘Quality in Work’ 개념을 바탕으로 한 방하남 외(2006)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고용기회, 고용안정, 능력개발, 임금보상, 근로시간, 작업장안전, 고용평등, 일가정양립, 사회적참여, 사회보장 등 9가지 지표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였다.

노용환·신종각(2007)은 기존 양적 고용지표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고용률, 실업률, 평균소득, 상대소득 등을 포함하는 11개 지표를 활용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 후 단일 종합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지표는 연속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고, 새로운 데이터 추가시 과거 지표의 수치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김영민(2014)은 ILO와 EU,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엔 유럽경제위원회)를 참고하여 7가지의 요소(고용기회, 고용안정성, 능력개발

- 
- 1) 실업과 관련된 예상 소득 손실로 정의된다. 실업자가 될 위험, 예상되는 실업기간, 정부가 실업자에게 이전하는 손실에 대한 완화 정도(실업보험)등에 따라 달라진다(OECD, 2023).
  - 2) 직무긴장은 직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비해 더 많은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OECD, 2023). 긴 작업시간, 높은 작업 강도 및 작업 시간 경직성을 포함하는 시간적인 압박감, 위험한 작업이나 고된 작업과 같은 신체적 위험요소를 포함한다(OECD, 2023).

---

발, 임금보상, 근로시간, 작업장 안전, 고용기회)로 구성된 지표를 활용하여 단순가중치 부여 후 표준화하여 일자리 질 지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지수는 통계적으로 적합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김수는 외(2015)는 ILO 기준에 따라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를 선형표준화하여 단순평균을 비교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5)은 노동자 관련 지표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 공적 사회복지지출 및 현금급여지출액, 국제노동협약비준,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단협 적용률, 교섭의 집중/조정 등을 OECD 평균치와 비교하였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순위를 비교하였다.

이순국·정주연(2020)은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에리·문수성(2022)은 코로나 이후의 고용 질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지표를 선형표준화하여 가중치를 부여 후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이 외에도 각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소를 선정하여 지표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심재현 외(2014)는 일자리의 양, 일자리의 질을 요소로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량, 일자리 창출 잠재력, 고용안정성, 근로임금을 순위표준화하여 일자리 지수로 살펴보았고, 이상호(2019)는 지역의 일자리 질 지수를 산출하여 일자리 분포와 공간적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김수진(2022)은 일자리 환경, 일자리 양, 일자리 질과 더불어 일자리 사업 지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역일자리 MAP을 구축하여 각 지표별 수치를 표준화 후 가중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표 2-6] ILO 기준에 따라 분류한 국내 선행연구

| 저자            | 세부 항목   |  |   |  |   |   |   | 연구 방법  |
|---------------|---|--|---|--|---|---|---|--|
|               | 고용기회  | 적절한 수입과 생산적인 노동  | 적절 근무 시간  | 고용안정성  | 동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  | 안전한 작업 환경   | 그 외   |  |
| 방하남 외(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활동참가율</li> <li>고용률</li> <li>비농업부문</li> <li>임금고용비율</li> <li>실업률</li> <li>청년실업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위소득 50%이하</li> <li>고용비율</li> <li>주요 직종 평균소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간 근로비율</li> <li>시간 관련 과소고용 비율</li> <li>주당 평균 근로시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기간 1년 이하의 근로자 비율</li> <li>임시직비율</li> <li>임금근로자 중 공공부문 종사자 비중</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재발생률</li> <li>산재강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평등</li> <li>일가정양립</li> <li>노동참여</li> <li>사회적 보호</li> </ul> | -  |
| 노용환·신종각(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률</li> <li>실업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균소득</li> <li>상대소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과근로시간</li> <li>총근로시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시·일용직 비율</li> <li>이직률</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해율</li> <li>산재보험</li> <li>고용보험</li> </ul> |   | 11개 지표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 후 고용의 질 측정 단일 종합지표 개발 |
| 김영민(20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활동참가율</li> <li>고용률</li> <li>실업률</li> <li>15~29세 실업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li> <li>시간당 실질임금</li> <li>임금불평등 (지니계수)10/90 분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2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li> <li>주당 근로시간</li> <li>40~44시간 근로자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계약기간 1년 이하 근로자 비율</li> <li>임시·일용직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고용비율</li> <li>5급 이상 여성고용비율</li> <li>60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 격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해율</li> <li>산재사망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직 종사자 비율</li> <li>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율</li> </ul>                 | 단순가중치를 부여 후 표준화하여 일자리 질 지수 작성  |

| 저자                 | 세부 항목  |  |  |  |   |   |  | 연구 방법  |
|--------------------|--|--|--|--|---|---|--|--|
|                    | 고용기회   | 적절한 수입과 생산적인 노동  | 적절 근무 시간   | 고용안정성  | 동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  | 안전한 작업 환경   | 그 외  |  |
| 김수은 외(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활동참가율</li> <li>고용률</li> <li>실업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50%) 이상 비중</li> <li>전국 평균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당 적정근로시간 근로자 비율</li> <li>주당 적정근로 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계약기간 1년 이하 근로자 비율</li> <li>임시직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노동참여도</li> <li>고령자의 노동참여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해율</li> <li>산재사망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직 종사자 비율</li> <li>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율</li> <li>사회·경제적 위세가 있는 일자리수 비율</li> </ul>   | 세부항목을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하여 단순평균 비교  |
|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활동참가율</li> <li>고용률</li> <li>실업률</li> <li>청년실업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임금노동자 비율</li> <li>소득불평등(지니계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노동시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시직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임금격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재사망자 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적빈곤율</li> <li>공적사회복지지출</li> <li>공적현금급여지출액 비중</li> <li>국제노동협약비준</li> <li>노동조합조직률</li> <li>임금단협적용률</li> <li>교섭의 집중/조정</li> </ul>                          | 각 지표별 우리나라 수치를 OECD 평균 및 순위 비교   |
| 이순국·정주연(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자 수</li> <li>신규인력채용 비율</li> <li>청년고용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li> <li>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li> <li>근로자 1인당 매출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평균 정규 정상 근로시간</li> <li>초과근로 근로자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정규직 비율</li> <li>고용보험 가입률</li> <li>5년 이상 장기근로자 비율</li> <li>근속연수</li> <li>이직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고용률 격차</li> <li>성별 임금 격차</li> <li>고령노동자 비율</li> <li>장애인 취업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해율</li> <li>산재보험 적용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가입률</li> <li>건강보험가입률</li> <li>노조가입률</li> <li>육아휴직건수</li> <li>의무교육연령 이하 아동들 가진 여성 취업률</li> <li>고령자 근로자 비율</li> <li>전문직 종사자 비율</li> <li>재취업률</li> </ul> | 성과지표의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도내 노동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선별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

| 저자            | 세부 항목   |   |   |  |   |           |  | 연구 방법   |
|---------------|---|---|---|--|---|-----------|--|---|
|               | 고용기회  | 적절한 수입과 생산적인 노동   | 적절 근무 시간  | 고용안정성  | 동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  | 안전한 작업 환경 | 그 외  |   |
| 이예리·문수성(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활동참가율</li> <li>고용률</li> <li>실업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임금 근로자 비율</li> <li>고임금 근로자 비율</li> <li>시간당 평균 실질임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52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li> <li>주 40~44시간 근로자 비율</li> <li>비자발적 일시휴직자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정규직 비율</li> <li>임시·일용직 비율</li> <li>영세 자영업자 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고용률 격차</li> <li>성별 비정규직 비율 격차</li> <li>성별 고숙련 직업 종사자 비율 격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숙련 직업 종사자 비율</li> <li>저숙련 직업 종사자 비율</li> <li>대졸자 비율</li> </ul> | 세부항목을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하여 가중치 부여 및 지역별 비교 |

자료 : 각 문헌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 다. 본 연구의 차별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자리 지수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일자리 지수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일자리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고, 일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들에 대해 선형표준화 하여 평균을 비교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일자리 지수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일자리 지수를 측정하고 지역별로 비교한 연구가 일부 있으며(김을식, 2011; 심재현 외, 2014), 최근에는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 즉 일자리 환경, 일자리사업,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지수를 각각 측정한 연구(김수진 외, 2022)가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일자리 지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선형표준화 후 동일 가중치 적용, 주성분 분석 또는 AHP조사를 통한 지표별 우선순위 및 가중치 적용방식이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량화 했다는 점이다. 즉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구성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지수를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지역일자리 성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과 질, 그리고 지역일자리 정책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는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정책(예산, 달성도), 일자리 양(취업자 수, 고용률 등), 일자리 질(상용일자리 수 등)을 계획서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지역간 객관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자리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양 또는 일자리 질 어느 한쪽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정량화하여 지표화 및 지수화하였다.

둘째, 지역일자리 지수 및 종합지표를 산출함에 있어서 지표별·지수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객관화하고자 하였다. 기술한 바와 같이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동일 가중치 부여, 주성분 분석을 통한 가중치 부여, AHP분석을 통한 가중치 부여방법이 있다. 지표별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임의적이라는 단점이 있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가중치가 임의적이지는 않지만 매년 가중치가 변동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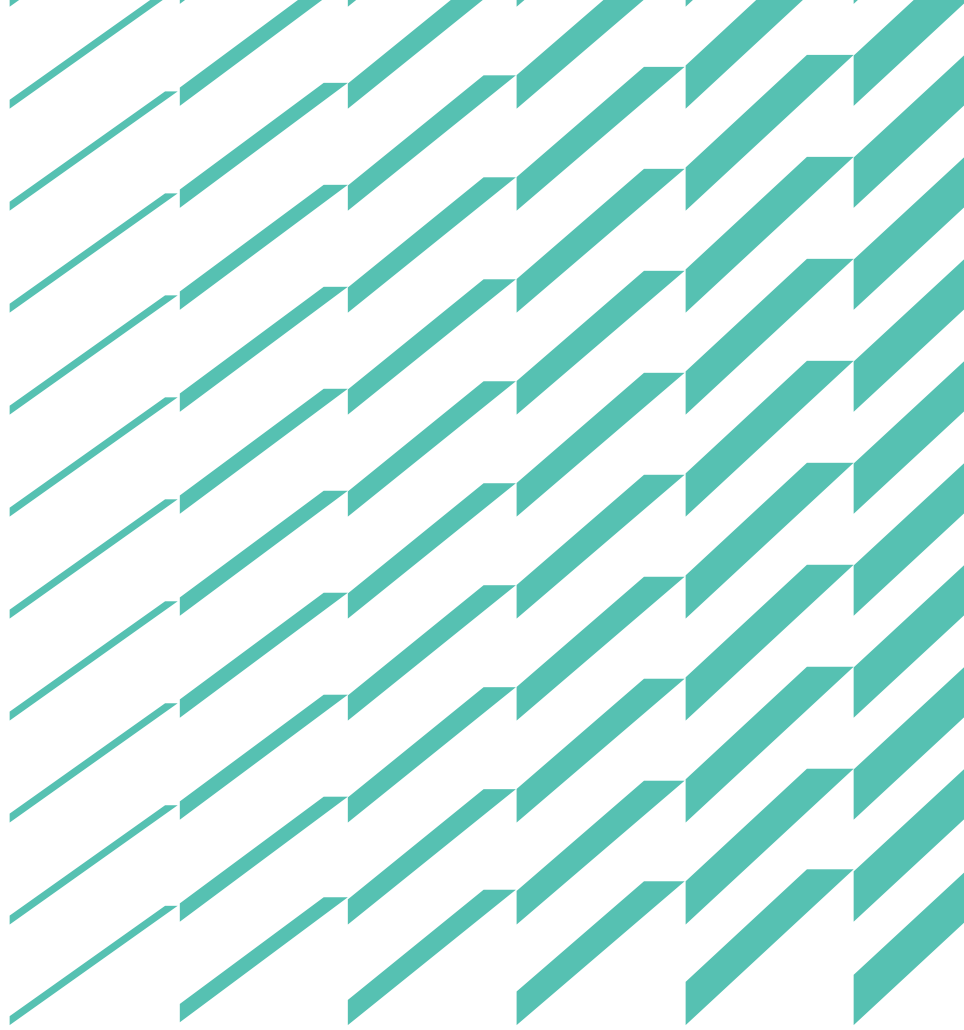
---

있고, 변동성도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AHP를 통한 가중치는 지표에 대한 가중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료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경쟁되는 요소의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

셋째, 본 연구의 일자리종합지수를 지역차원에서 측정하고 적용하여 향후 지역일자리 정책 기획, 추진, 평가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자리 지수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단위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교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일자리정책의 공간이 지역 즉, 기초자치단체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위의 일자리 여건을 파악하여 지역의 실정과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광역지자체 차원을 넘어 기초지자체인 시군별 지역일자리 종합 지수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장

### 지역일자리지수 개발 및 정의

1. 전북지역 일자리 지수 정의 및 지표 개발 방법
2. 일자리 종합지수 체계
3. 지역일자리종합지수 산출 방법 및 분석자료





# 제 3 장 지역일자리지수 개발 및 정의

## 1. 전북지역 일자리 지수 정의 및 지표 개발 방법

### 가. 지역일자리 지수 정의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일자리 종합지수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일자리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일자리의 질적 성장에 대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시도별 비교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지역 일자리를 파악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양적 현황 파악을 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의 질적 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정책이 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와 여건을 파악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즉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일자리 정책을 기획·평가·환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지역일자리를 양적 측면, 질적 측면, 또는 양적·질적 측면 모두 고려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지역일자리목표를 고려한 지역의 관심도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일자리 지수를 정책적 측면, 일자리 현황인 양적 측면, 일자리 수준인 질적 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표 3-1] 일자리 지수의 구성

| 구분       | 부문    | 내용                                   |
|----------|-------|--------------------------------------|
| 일자리 종합지수 | 일자리정책 | 지역 내에서 일자리정책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
|          | 일자리 양 | 지역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있는가?              |
|          | 일자리 질 | 지역의 일자리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

## 나. 지역일자리종합지수 지표개발 방법

지역일자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지수 및 구성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UN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성과지표 요건 및 평가의 준거, OECD 통계 품질요소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적절한 지표가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는 UN GEF(2006)의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d)’ 기준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적절성, 적시성이다. 또한 평가의 5가지 준거로는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성과 또는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이 있다. OECD의 ‘통계품질 요소’에는 정확성, 관련성, 적시성, 접근가능성, 비교가능성, 일관성이 있다.

[표 3-2] 적절한 성과지표 조건(SMART)

| 구분                    | 내용  |
|-----------------------|---|
| 구체성<br>(Specific)     | 성과지표는 특정 목표 달성과 관련된 원하는 성과의 핵심을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포착해야 함   |
| 측정가능성<br>(Measurable) | 성과지표는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이어서 무엇을 측정하는 지에 대해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존재해야 함                   |
| 달성가능성<br>(Achievable) | 성과지표는 개입의 결과로 기대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식별해야 하고, 성과는 현실적이어야 함. 귀인성은 성과가 개입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함                      |
| 적절성<br>(Relevant)     | 성과지표는 실제적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의 수준을 확립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반영해야 함   |
| 적시성<br>(Timed)        | 성과지표는 설정된 기간에 원하는 빈도만큼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척 상태가 추적 되도록 해야 함. 더불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식별이 명료해야 함 |

자료: 김을식(2011)

[표 3-3] 평가의 5가지 주요 준거

| 구분                       | 내용   |
|--------------------------|--|
| 적합성<br>(Relevance)       | 활동이 지방이나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나 조직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
| 효과성<br>(Effectiveness)   | 현재까지의 목표 달성도나 목표달성의 가능성  |
| 효율성<br>(Efficiency)      | 효율성은 투입대비(질적 또는 양적) 산출로 측정   |
| 성과/영향<br>(Result/impact) | 개입에 의한 변화 또는 효과로서, 성과에는 직접적인 프로젝트의 산출(output) 단계에서 중기까지의 결과(outcomes), 장기 영향(impact)이 있음 |
|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또는 보조금) 종료 후에도 활동에 따른 편익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개입의 가능성   |

자료: 김을식(2011)

[표 3-4] 통계품질 요소

| 구분                       | 내용   |
|--------------------------|--|
| 정확성<br>(Accuracy)        | 추정 값과 실제 값의 일치도,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의 최소화                          |
| 관련성<br>(Relevance)       | 이용 목적의 충족도   |
| 적시성<br>(Timeliness)      | 자료 수집부터 공표까지의 시간, 자료 수집 빈도                                 |
| 접근가능성<br>(Accessibility) | 조사 결과 이용의 편리성  |
| 비교가능성<br>(Comparability) | 이질적인 시·공간 자료간의 비교가능성(관련이 없는 모집단에 근거한 통계간의 비교)              |
| 일관성<br>(Coherence)       |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방법에 근거한 동일한 경제·사회현상(동일 또는 유사한 모집단)에 대한 통계간의 비교 |

자료: 김을식(2011)

본 연구에서는 지역고용 및 노동시장의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3가지 선정기준 중에서 구체성, 측정가능성, 적절성, 적시성, 접근가능성, 비교가능성, 일관성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표 3-5] 본 연구에서의 개별지표 선정기준

| 구분                       | 내용   |
|--------------------------|--|
| 구체성<br>(Specific)        | 성과지표는 특정 목표 달성과 관련된 원하는 성과의 핵심을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포착해야 함  |
| 측정가능성<br>(Measurable)    | 성과지표는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이어서 무엇을 측정하는 지에 대해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존재해야 함                  |
| 달성가능성<br>(Achievable)    | 성과지표는 개입의 결과로 기대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식별해야 하고, 성과는 현실적이어야 함. 귀인성은 성과가 개입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함                     |
| 적시성<br>(Timed)           | 성과지표는 설정된 기간에 원하는 빈도만큼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척 상태가 추적되도록 해야 함. 더불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식별이 명료해야 함 |
| 적합성<br>(Relevance)       | 활동이 지방이나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나 조직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
| 접근가능성<br>(Accessibility) | 조사 결과 이용의 편리성  |
| 비교가능성<br>(Comparability) | 이질적인 시·공간 자료간의 비교가능성(관련이 없는 모집단에 근거한 통계간의 비교)  |
| 일관성<br>(Coherence)       |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방법에 근거한 동일한 경제·사회현상(동일 또는 유사한 모집단)에 대한 통계간의 비교   |

---

## 2. 일자리 종합지수 체계

---

지역일자리 지수는 초기에는 일자리의 질적 성장에 대한 측면에서 논의되다가 점차 다양한 관점 즉,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일자리를 평가함에 있어서 각각의 부문에 대한 평가방법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면적 평가 즉 제한적 지표만으로 일자리의 양적, 질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김을식, 2011; 심재현 외, 2014).

이 경우 지역일자리 성과를 단순화하여 지역별 비교가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일자리 성과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일자리를 평가함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 양적, 질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의 의지와 노력 또한 함께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일자리정책 부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된 개별지표 선정기준인 구체성, 측정가능성, 적시성, 적합성, 접근가능성, 비교가능성, 일관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공통지표, 다면적 평가의 필요성, 지표 선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를 지방정부의 일자리정책 부문, 일자리 양 부문, 일자리 질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지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 1) 일자리 양 부문 검토

일자리 양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및 취업자 수 등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국민의 경제활동 패턴을 감안할 때 정확한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김을식 외, 2009; 김을식, 2011). 왜냐하면 경기침체시 취업자가 실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비경제활동인구화 되거나 실업자가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김을식, 2011). 취업자 수는 수준 변수라는 한계로 지역의 일자리 규모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간 비교가 어렵다. 고용률의 경우 이를 측정하는 분모인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김을식, 2011)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고용률에 미치



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기존 연구에서도 양적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용률을 채택하였다.

또한 일자리의 양적 측면은 생산가능 인구대비 취업자 수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수준 및 창출 잠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심재현 외, 2014). 따라서 실제로 일자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향후 일자리 창출의 기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규모와 일자리 증감비율을 채택하였다.

## 2) 일자리 질적 부문 검토

일자리의 질 부문은 주로 고용안정성, 근로임금, 근로시간 등을 측정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고용안정성은 고용 계약을 통해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 중 다른 고용형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로기간과 지위를 보장받는 상용직 종사자 비율을 채택하였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연봉이나 월급으로 측정될 수 있다. 다만 근로 형태별로 월평균 노동기간이 다를 수 있고 월 평균 임금으로 측정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중위임금 수준으로 채택하였다.

근로시간은 근로형태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인 성인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나 단축근무 및 초과근로시간 등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일자리와 연동된 소득분배 구조는 주민의 삶에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용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은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사회보험을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안전망 지표를 채택하였다.

### 3) 일자리 정책 부문 검토

지역노동시장의 성과지표는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로 분류될 수 있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는 일자리 지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일자리 결과를 나타내는 일자리의 양과 질 부문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고 지역노동시장의 성과가 주기적으로 용이하게 측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일자리 지수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과정지표 또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역주도 일자리정책 및 지역의 일자리 계획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역차원에서 지역일자리를 평가할 때 지자체의 정책의지와 노력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지로서 예산비중과 노력도인 일자리목표달성률을 지표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3-6]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체계

| 구분                | 부문        | 구성 지표    | 내용                              |
|-------------------|-----------|----------|---------------------------------|
| 지역<br>일자리<br>종합지수 | 일자리<br>정책 | 지자체별 의지  | 지역에서 일자리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
|                   |           | 노력 수준    | 지역에서 일자리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
|                   | 일자리<br>양  | 일자리규모    | 지역의 노동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
|                   |           | 일자리증감    | 지역에서 일자리가 매년 얼마나 만들어지는가?        |
|                   |           | 고용참여     | 지역인구 중 노동시장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
|                   | 일자리<br>질  | 고용안정성    |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가?                  |
|                   |           | 임금수준     | 충분한 임금보상을 받고 있는가?               |
|                   |           | 적절한 노동시간 |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받고 있는가?              |
|                   |           | 사회안전망    | 노동자는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가?            |

### 3. 지역일자리종합지수 산출 방법 및 분석자료

#### 가.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산출방법

##### 1) 지표의 표준화 및 측정방법

부문별 일자리의 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각 지표별 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먼저 각 지표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 Methodology)를 사용한다. 선형표준화는 세부항목의 값이 0~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정규화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항목 값과 해당 항목 내 최소점수 간의 차이를 해당 항목 내 최대점수와 최소점수 간의 차이를 조정해 준 값을 의미한다.

측정지표가 일자리의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식(1), 반대의 경우는 식(2)를 통해서 표준화 하였다.

$$Z_{ij} = \frac{z_{ij} - \text{Min}(z_j)}{\text{Max}(z_j) - \text{Min}(z_j)} * 100 \quad \text{식(1)}$$

$$Z_{ij} = \frac{z_{ij} - \text{Max}(z_j)}{\text{Min}(z_j) - \text{Max}(z_j)} * 100 \quad \text{식(2)}$$

(여기서,  $z_{ij}$ 는 지역별( $i$ ) 세부항목( $j$ ) 값,  $Z_{ij}$ 는 세부항목을 정규화한 값)

일자리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별 값은 식(1)과 식(2)를 통해서 정규화한 세부항목의 합으로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지역별 일자리 종합지수(RWI: Regional Work Index)는 다음 식(4)와 같다.

$$Y_{ij} = \sum_{j=1}^n p_j Z_{ij}, \quad \text{식(3)}$$

(여기서  $Y_{ij}$ 는 지역별 지표의 평균값,  $p_j$ 는 세부항목의 가중치,  $n$ 은 세부항목의 개수)

$$RWI_i = \sum_{j=1}^N q_j Y_{ij}, \quad \text{식(4)}$$

(여기서  $q_j$ 는 지표별 가중치,  $N$ 은 지표의 개수)

일자리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부문지수와 부문별 하위지표의 중요도는 전문가 대상 조사 및 AHP 방법을 통해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 나. 지역일자리 세부지표 및 분석자료

전라북도의 일자리 관련 지표 현황을 일자리 정책, 일자리 양, 일자리 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자리 정책은 지자체별 의지, 지자체별 노력 수준을 조사하였고, 지자체별 의지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 공시되는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의 비중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지자체별 노력 수준 역시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 공시되는 해당 연도 일자리정책 실행계획의 취업자 수 목표 대비 취업자 수 실적 달성률을 구하였다.

일자리 양은 일자리 규모, 전년도 대비 일자리 증감, 고용률을 구하여 살펴보았다. 일자리의 규모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종사자 수를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자리 증감은 당해 연도 사업체 종사자 수에서 전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를 뺀 후 전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로 나누어 증감률을 구했다. 고용률은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를 추출한 후 해당 연도의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누어 비중을 구하였다.

일자리의 질은 고용안정성, 소득 수준, 적절한 노동시간, 사회안전망(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고용안정성은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로, 앞서 구한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 중 상용직 고용자 수를 구하여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로 나누었다.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을 구한 후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난 3개월 간 해당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은 일자리 수를 파악하였다. 이 후 이를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로 나누어 지역별 비교를 해보았다. 적절한 노동시간은 지난 1주일 동안 상용직으로 근무되는 주 36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일자리 수를 구하여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로 나누었다. 사회안전망은 국민(국민연금통계), 건강(건강보험통계연보), 고용(고용행정통계)의 각 시도별 통계치를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상용직이며 중위소득 150% 이상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적절한 노동시간을 제공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자리 수를 구하여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로 나누어주었다.

[표 3-7] 일자리지수 및 구성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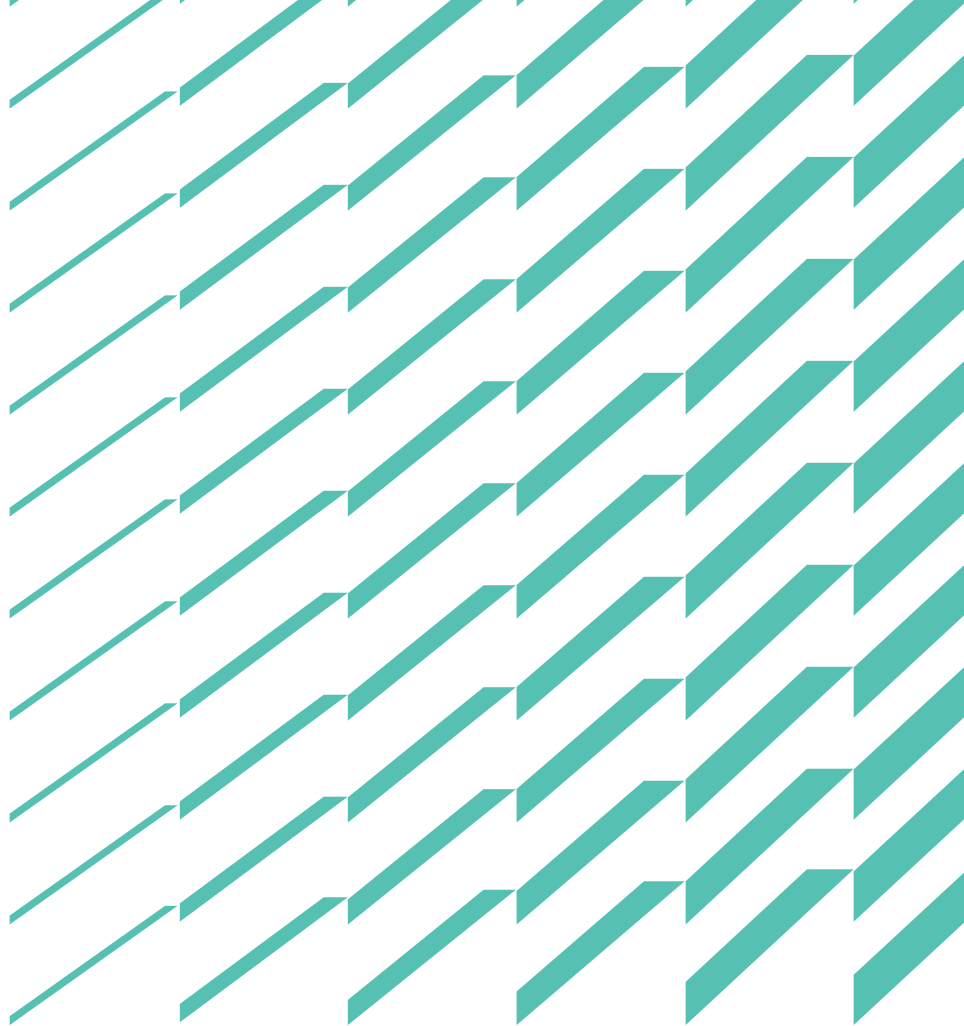
| 부문     | 구성지표     | 세부내용   | 출처                           |
|--------|----------|--|------------------------------|
| 일자리 정책 | 지자체별 의지  | 일자리 예산 ÷ 지역 예산   | 지역정보고용네트워크                   |
|        | 노력 수준    | 취업자 수 실적 ÷ 취업자 수 목표  | 지역정보고용네트워크                   |
| 일자리 양  | 일자리 규모   | 사업체 종사자 수<br>÷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연앙인구   | 전국사업체조사                      |
|        | 일자리 증감   | (당해 연도 사업체 종사자 수-전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br>÷ 전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   | 전국사업체조사                      |
|        | 고용참여     | 고용률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 ÷ 만 18세 이상<br>주민등록연앙인구)  | 경제활동인구조사                     |
| 일자리 질  | 고용 안정성   | 만 18세 이상 상용직 취업자 수<br>÷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   | 지역별고용조사                      |
|        | 임금수준     | 중위소득의 150% 이상 일자리 수<br>÷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  | 지역별고용조사                      |
|        | 적절한 노동시간 | 법정 노동시간(주36시간~52시간) 일자리 수<br>÷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  | 지역별고용조사                      |
|        | 사회 안전망   | 만 18세 이상 취업자 중 사회보험가입자수(국민연금 사업장<br>가입자 수+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고용보험 사용자<br>피보험자수) 평균 비중                                 | -                            |
|        |          | 국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br>건강: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br>고용: 고용보험 사용자 피보험자수 ÷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 | 국민연금통계<br>건강보험통계연보<br>고용행정통계 |

주 1. 4대보험 가입률에 대한 통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각 연금통계를 사용

2. 산재보험통계는 시군자료 입수 어려움으로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제외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와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일자리 종합지수를 각각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도내 시군의 일자리 종합지수의 합이 전북 일자리 종합지수의 값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자리 종합지수를 광역간 비교와 도내 시군간 비교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군자료와 광역시도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 제4장

#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분석

1. 지역일자리 부문별 현황
2. 지역일자리종합지수 부문지수별 세부지표 결과
3. 지역일자리종합지수 분석결과







# 제 4 장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분석

## 1. 지역일자리 부문별 현황

### 가. 일자리 정책

#### 1) 정책의지

##### ■ 전국

지자체별 일자리 정책 및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sup>3)</sup>에 매년 공시되는 연차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일자리정책 실행계획)<sup>4)</sup>과 지방재정365에서 수집 가능한 지역별 예산(당초, 총계, 본청 기준)을 살펴보았다. 2014년과 2023년을 기준 연도로 하였으나 2014년의 경우 지자체별 누락된 자료가 많아 최대한 기준연도에 가까운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년 기준 지역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33.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28.1%), 부산(2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예산 비중 평균이 18.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의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예산 비중이 8.2%로 낮게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014년 총 4조 8,268억 원의 예산 중 4,489억 원(지역예산 대비 9.3% 비중)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국 9위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기준 일자리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의 일자리 예산 비중이 지역 총 예산 4조 6,059억 원 중 3조 4,086억 원(지역예산 대비 74%, 국비 9,082억 원, 지방비 2,981억 원)을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sup>5)</sup>, 그 다음으로 전남이 총 10조 3,381억 원의 예산 중 3조 9,682억 원(지역예산 대비 38.4%)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

3) 자료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https://www.reis.or.kr/>)

4)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5) 울산의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르면 고용률이 전국 16위, 실업률이 전국 13위(청년실업률 전국 17위)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 전북은 8조 8,723억 원의 예산 중 1조 3,64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전국 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년간 일자리 예산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울산의 일자리 예산 비중이 2014년에 비해 45.9%p가 증가하여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 다음으로 전남이 2014년 일자리 예산 비중에 비해 30.4%p가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을 보였다. 반면, 세종의 경우 2015년 일자리 예산이 2,34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23년 기준 64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5%에서 2023년 기준 3.2%로 대폭 하락(-22.3%p) 하였다. 전북의 경우 일자리 예산이 2014년 4,489억 원에서 2023년 1조 3,64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6.1%p 상승하여 전국 5위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4-1]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전국 광역시도)

(단위 : 백만 원)

| 구분 | 2014년                   |                          |                 | 2023년                   |                          |                 | 일자리 예산 비중 변화 |
|----|-------------------------|--------------------------|-----------------|-------------------------|--------------------------|-----------------|--------------|
|    | 일자리 예산 (A)              | 지역예산 (본예산기준) (B)         | 일자리 예산 비중 (A/B) | 일자리 예산 (A)              | 지역예산 (본예산기준) (B)         | 일자리 예산 비중 (A/B) |              |
| 서울 | 2,209,234 <sup>1)</sup> | 24,413,332 <sup>1)</sup> | 9.0%            | 2,199,900 <sup>2)</sup> | 44,219,049 <sup>2)</sup> | 5.0%            | -4.1%p       |
| 부산 | 2,846,077 <sup>3)</sup> | 10,127,528 <sup>3)</sup> | 28.1%           | 2,100,078               | 15,327,743               | 13.7%           | -14.4%p      |
| 대구 | 1,385,707               | 6,020,600                | 23.0%           | 989,654                 | 10,730,765               | 9.2%            | -13.8%p      |
| 인천 | 869,119                 | 7,837,282                | 11.1%           | 1,295,758               | 13,915,675               | 9.3%            | -1.8%p       |
| 광주 | 604,770 <sup>3)</sup>   | 4,060,480 <sup>3)</sup>  | 14.9%           | 1,237,168               | 7,110,179                | 17.4%           | 2.5%p        |
| 대전 | 346,677 <sup>3)</sup>   | 3,854,686 <sup>3)</sup>  | 9.0%            | 460,312                 | 6,561,725                | 7.0%            | -2.0%p       |
| 울산 | 820,738 <sup>4)</sup>   | 2,917,153 <sup>4)</sup>  | 28.1%           | 3,408,615               | 4,605,899                | 74.0%           | 45.9%p       |
| 세종 | 233,969 <sup>4)</sup>   | 917,000 <sup>4)</sup>    | 25.5%           | 64,026                  | 2,002,807                | 3.2%            | -22.3%p      |
| 경기 | 5,300,670               | 15,990,595               | 33.1%           | 4,875,524 <sup>2)</sup> | 33,603,588 <sup>2)</sup> | 14.5%           | -18.6%p      |
| 강원 | 211,004 <sup>4)</sup>   | 4,558,880 <sup>4)</sup>  | 4.6%            | 1,080,965               | 7,523,209                | 14.4%           | 9.7%p        |
| 충북 | 259,997 <sup>4)</sup>   | 3,758,801 <sup>4)</sup>  | 6.9%            | 357,016                 | 6,657,635                | 5.4%            | -1.6%p       |
| 충남 | 366,868 <sup>4)</sup>   | 4,870,991 <sup>4)</sup>  | 7.5%            | 948,355                 | 9,164,288                | 10.3%           | 2.8%p        |
| 전북 | 448,937                 | 4,826,759                | 9.3%            | 1,364,045               | 8,872,347                | 15.4%           | 6.1%p        |
| 전남 | 464,452                 | 5,803,170                | 8.0%            | 3,968,200               | 10,338,111               | 38.4%           | 30.4%p       |
| 경북 | 541,069                 | 6,993,982                | 7.7%            | 928,517                 | 12,082,055               | 7.7%            | -0.1%p       |
| 경남 | 1,187,246               | 6,614,342                | 17.9%           | 2,317,887               | 12,100,784               | 19.2%           | 1.2%p        |
| 제주 | 132,320                 | 3,582,474                | 3.7%            | 769,376                 | 7,063,922                | 10.9%           | 7.2%p        |

자료 : 각 지자체 해당 연도별 일자리정책 실행계획, 지방재정365 회계구분별 세입(총계, 당초) 본청 기준

주 1) 2021년 기준

2) 2022년 기준

3) 부산, 광주, 대전의 일자리 예산 및 지역예산은 2016년 기준

4)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의 일자리 예산 및 지역예산은 2015년 기준

## ■ 전북

전북 지자체별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익산의 일자리 예산 비중이 2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창 16.2%, 임실 15.6%, 완주 5.2%, 부안 5.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의 경우 2014년 전라북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일자리 예산(1,94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비도심권(고창, 임실, 부안 등)의 일자리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2023년 일자리 예산 비중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심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주의 경우 총 2조 4,458억 원의 지역 예산 중 21.8%인 5,332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군산도 지역 예산의 20.5%를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 일자리 늘리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전북 지자체)

(단위 : 백만 원)

| 구분 | 2014년      |                  |                 | 2023년      |                  |                 | 일자리 예산 비중 변화 |
|----|------------|------------------|-----------------|------------|------------------|-----------------|--------------|
|    | 일자리 예산 (A) | 지역예산 (본예산기준) (B) | 일자리 예산 비중 (A/B) | 일자리 예산 (A) | 지역예산 (본예산기준) (B) | 일자리 예산 비중 (A/B) |              |
| 전북 | 448,937    | 4,826,759        | 9.3%            | 1,364,045  | 8,872,347        | 15.4%           | 6.1%p        |
| 전주 | 52,784     | 1,217,419        | 4.3%            | 533,210    | 2,445,821        | 21.8%           | 17.5%p       |
| 군산 | 31,367     | 871,620          | 3.6%            | 335,552    | 1,634,700        | 20.5%           | 16.9%p       |
| 익산 | 194,044    | 868,670          | 22.3%           | 187,876    | 1,672,585        | 11.2%           | -11.1%p      |
| 정읍 | 26,380     | 580,357          | 4.5%            | 114,271    | 1,119,355        | 10.2%           | 5.7%p        |
| 남원 | 15,732     | 497,013          | 3.2%            | 49,242     | 1,026,352        | 4.8%            | 1.6%p        |
| 김제 | 11,599     | 556,548          | 2.1%            | 107,338    | 993,436          | 10.8%           | 8.7%p        |
| 완주 | 32,382     | 565,146          | 5.7%            | 24,503     | 818,697          | 3.0%            | -2.7%p       |
| 진안 | 3,619      | 300,229          | 1.2%            | 53,296     | 518,425          | 10.3%           | 9.1%p        |
| 무주 | 8,200      | 282,360          | 2.9%            | 43,194     | 535,463          | 8.1%            | 5.2%p        |
| 장수 | 11,279     | 251,174          | 4.5%            | 72,987     | 462,173          | 15.8%           | 11.3%p       |
| 임실 | 45,036     | 288,665          | 15.6%           | 9,731      | 526,136          | 1.8%            | -13.8%p      |
| 순창 | 13,989     | 279,503          | 5.0%            | 33,079     | 503,475          | 6.6%            | 1.6%p        |
| 고창 | 66,078     | 408,735          | 16.2%           | 77,205     | 769,770          | 10.0%           | -6.1%p       |
| 부안 | 20,999     | 400,891          | 5.2%            | 62,831     | 753,944          | 8.3%            | 3.1%p        |

자료 : 각 지자체 해당 연도별 일자리정책 실행계획, 지방재정365 회계구분별 세입(총계, 당초) 본청 기준

## 2) 노력 수준

### ■ 전국

2013년 각 광역지자체별 취업자 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을 살펴보면, 전북이 102.3%를 달성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이 102.1%, 경남이 100.4%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실적 달성률을 보면, 경기도가 10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102.9%), 제주(102.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9년간 달성률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이 2020년 91.9%의 취업자 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22년 102.4%의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을 보였다.

[표 4-3] 취업자 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전국 광역시도)

(단위 : 천명)

| 구분 | 2013년               |                     |           | 2022년               |                     |           | 달성률 변화  |
|----|---------------------|---------------------|-----------|---------------------|---------------------|-----------|---------|
|    | 취업자 수 (목표) (A)      | 취업자 수 (실적) (B)      | 달성률 (B/A) | 취업자 수 (목표) (A)      | 취업자 수 (실적) (B)      | 달성률 (B/A) |         |
| 서울 | 5,049 <sup>1)</sup> | 4,640 <sup>1)</sup> | 91.9%     | 409 <sup>2)</sup>   | 419 <sup>2)</sup>   | 102.4%    | 10.5%p  |
| 부산 | 1,670 <sup>3)</sup> | 1,657 <sup>3)</sup> | 99.2%     | 1,476               | 1,468               | 99.5%     | 0.2%p   |
| 대구 | 1,211               | 1,195               | 98.7%     | 1,112               | 1,112               | 100.0%    | 1.3%p   |
| 인천 | 1,450               | 1,442               | 99.4%     | 1,438               | 1,473               | 102.4%    | 3.0%p   |
| 광주 | 755 <sup>3)</sup>   | 740 <sup>3)</sup>   | 98.0%     | 750                 | 677                 | 90.3%     | -7.7%p  |
| 대전 | 780 <sup>3)</sup>   | 777 <sup>3)</sup>   | 99.6%     | 787                 | 719                 | 91.4%     | -8.3%p  |
| 울산 | 557 <sup>4)</sup>   | 546 <sup>4)</sup>   | 98.0%     | 580                 | 516                 | 89.0%     | -9.1%p  |
| 세종 | 68 <sup>4)</sup>    | 68 <sup>4)</sup>    | 100.0%    | 196                 | 197                 | 100.5%    | 0.5%p   |
| 경기 | 6,023               | 5,988               | 99.4%     | 6,950 <sup>5)</sup> | 7,150 <sup>5)</sup> | 102.9%    | 3.5%p   |
| 강원 | 711 <sup>4)</sup>   | 711 <sup>4)</sup>   | 100.0%    | 692                 | 668                 | 96.5%     | -3.5%p  |
| 충북 | 714 <sup>4)</sup>   | 729 <sup>4)</sup>   | 102.1%    | 853                 | 796                 | 93.4%     | -8.7%p  |
| 충남 | 1,161 <sup>4)</sup> | 1,158 <sup>4)</sup> | 99.7%     | 1,216               | 1,032               | 84.9%     | -14.9%p |
| 전북 | 856                 | 876                 | 102.3%    | 954                 | 968                 | 101.5%    | -0.9%p  |
| 전남 | 912                 | 915                 | 100.3%    | 982                 | 1,010               | 102.9%    | 2.5%p   |
| 경북 | 1,390               | 1,386               | 99.7%     | 1,183               | 1,178               | 99.6%     | -0.1%p  |
| 경남 | 1,613               | 1,619               | 100.4%    | 1,561               | 1,485               | 95.1%     | -5.2%p  |
| 제주 | 313                 | 305                 | 97.4%     | 336                 | 345                 | 102.6%    | 5.2%p   |

자료 : 각 지자체 해당 연도별 일자리정책 실행계획

주 1) 2020년 기준

2) 서울은 자료의 부재로 인해 취업자 수 목표 및 실적이 아닌 2022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3) 부산, 광주, 대전의 취업자 수 목표 및 실적은 2015년 기준

4)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의 취업자 수 목표 및 실적은 2014년 기준

5) 2021년 기준

## ■ 전북

전북 지자체별 2013년도 취업자 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을 살펴보면, 이상치를 보이는 장수군의 실적을 제외하고 무주군이 105.2%, 완주군이 105%, 김제시가 104.9%를 보였고, 부안(96.3%), 고창(96.8%), 임실(96.9%)은 비교적 낮은 실적 달성률을 보였다.

2022년의 경우, 진안의 실적 달성률이 105.6%를 보이며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완주가 105.1%, 김제가 102%, 남원이 101.1%를 보였다. 고창의 경우 63.9%의 저조한 실적 달성률을 보였는데, 특히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2013년의 경우 30,200명의 취업자 수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22년은 10,200명이 줄어든 20,000명의 취업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줄어든 취업자 수가 세수 감소의 결과로 이어져 향후 지역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 9년간 취업자 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을 살펴보면, 도심권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가 낮은 수치를 보여 해당 지자체의 달성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취업자 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전북 지자체)

(단위 : 천명)

| 구분 | 2013년           |                |           | 2022년          |                |           | 달성률 변화    |
|----|-----------------|----------------|-----------|----------------|----------------|-----------|-----------|
|    | 취업자 수 (목표) (A)  | 취업자 수 (실적) (B) | 달성률 (B/A) | 취업자 수 (목표) (A) | 취업자 수 (실적) (B) | 달성률 (B/A) |           |
| 전주 | 293             | 291            | 99.5%     | 346            | 308            | 89.0%     | -10.6%p   |
| 군산 | 120             | 124            | 103.1%    | 132            | 131            | 99.4%     | -3.7%p    |
| 익산 | 137             | 138            | 100.3%    | 145            | 146            | 100.7%    | 0.4%p     |
| 정읍 | 53              | 55             | 103.1%    | 59             | 60             | 101.0%    | -2.0%p    |
| 남원 | 44              | 43             | 99.3%     | 44             | 44             | 101.1%    | 1.8%p     |
| 김제 | 44              | 46             | 104.9%    | 45             | 46             | 102.0%    | -2.9%p    |
| 완주 | 38              | 40             | 105.0%    | 51             | 54             | 105.1%    | 0.1%p     |
| 진안 | 2               | 2              | 101.4%    | 14             | 15             | 105.6%    | 4.3%p     |
| 무주 | 14              | 14             | 105.2%    | 15             | 15             | 100.7%    | -4.5%p    |
| 장수 | 1 <sup>1)</sup> | 14             | 1546.2%   | 15             | 14             | 95.2%     | -1450.9%p |
| 임실 | 15              | 15             | 96.9%     | 16             | 15             | 97.5%     | 0.5%p     |
| 순창 | 15              | 15             | 97.4%     | 16             | 16             | 98.7%     | 1.4%p     |
| 고창 | 31              | 30             | 96.8%     | 31             | 20             | 63.9%     | -32.9%p   |
| 부안 | 32              | 31             | 96.3%     | 19             | 20             | 100.5%    | 4.3%p     |

자료 : 각 지자체 해당 연도별 일자리정책 실행계획

주 1) 장수군의 '14년도 연차별 세부계획에 '13년도 취업자 수 목표가 899명으로 기입되어 있어, 이상치로 추정됨

## 나. 일자리 양

### 1) 일자리 규모

#### ■ 전국

시도별 일자리 수(사업체 종사자 수)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의 전국사업체조사(2013년, 2021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일자리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3년, 2021년) 중 만 18세 이상인 인구를 추출하여 일자리 수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2013년 기준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연앙인구(이하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이하 일자리 수)의 전국 평균은 46.8%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규모가 높은 광역시도는 세종(60.8%), 서울(55%), 울산(53.8%), 제주(49.4%)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일자리 규모는 인구 대비 41.4%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천(39.2%), 전남(40.2%) 다음으로 낮은 전국 15위 수준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인구 대비 일자리 규모 평균은 5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 대비 10.2%p가 상승하여 일자리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도 일자리 규모가 높은 광역시도는 서울(69.9%), 충남(60.8%), 충북(60.3%), 제주(58.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일자리 규모가 작은 광역시도는 대구(49.2%), 인천(49.2%), 전북(5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2013년, 2021년 모두 전국 최하위권의 일자리 규모(15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도 전국 최하위권(15위)을 기록하여 지역 인구 및 일자리 정책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하였다.

일자리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의 2021년 일자리 규모(69.9%)가 2013년 일자리 규모(55%) 대비 14.9%p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남이 14.1%p, 충북이 13.3%p, 충남이 13.2%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2013년 전북보다 낮은 40.2%(전국 16위)의 일자리 규모를 보였지만 2021년의 경우 전북보다 높은 54.3%(전국 10위)의 일자리 규모를 보이며 크게 성장하였다. 이는 전남이 일자리 정책을 공격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전남과 전북의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남의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은 18.9%인 반면, 전북은 10.8%에 그쳐 일자리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전북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일자리 규모 (전국 광역시도)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1년        |                          |           | 일자리<br>규모 변화 |
|----|--------------|--------------------------|-----------|--------------|--------------------------|-----------|--------------|
|    | 사업체<br>종사자 수 | 만 18세 이상<br>주민등록<br>연앙인구 | 일자리<br>규모 | 사업체<br>종사자 수 | 만 18세 이상<br>주민등록<br>연앙인구 | 일자리<br>규모 |              |
| 전국 | 19,173,471   | 41,010,081               | 46.8%     | 24,931,600   | 43,744,542               | 57.0%     | 10.2%p       |
| 서울 | 4,585,090    | 8,342,352                | 55.0%     | 5,771,226    | 8,256,014                | 69.9%     | 14.9%p       |
| 부산 | 1,297,862    | 2,927,398                | 44.3%     | 1,544,504    | 2,908,070                | 53.1%     | 8.8%p        |
| 대구 | 849,631      | 2,016,243                | 42.1%     | 1,004,563    | 2,041,950                | 49.2%     | 7.1%p        |
| 인천 | 895,657      | 2,287,011                | 39.2%     | 1,223,448    | 2,484,745                | 49.2%     | 10.1%p       |
| 광주 | 529,113      | 1,141,886                | 46.3%     | 676,261      | 1,201,604                | 56.3%     | 9.9%p        |
| 대전 | 536,181      | 1,204,248                | 44.5%     | 688,457      | 1,226,173                | 56.1%     | 11.6%p       |
| 울산 | 488,627      | 908,622                  | 53.8%     | 543,984      | 940,657                  | 57.8%     | 4.1%p        |
| 세종 | 56,867       | 93,572                   | 60.8%     | 152,974      | 278,574                  | 54.9%     | -5.9%p       |
| 경기 | 4,259,213    | 9,557,553                | 44.6%     | 5,994,570    | 11,230,775               | 53.4%     | 8.8%p        |
| 강원 | 551,181      | 1,251,631                | 44.0%     | 714,310      | 1,322,061                | 54.0%     | 10.0%p       |
| 충북 | 591,509      | 1,258,142                | 47.0%     | 817,324      | 1,354,930                | 60.3%     | 13.3%p       |
| 충남 | 777,843      | 1,633,160                | 47.6%     | 1,082,844    | 1,781,383                | 60.8%     | 13.2%p       |
| 전북 | 624,407      | 1,507,398                | 41.4%     | 791,096      | 1,527,966                | 51.8%     | 10.4%p       |
| 전남 | 623,801      | 1,551,851                | 40.2%     | 856,478      | 1,576,329                | 54.3%     | 14.1%p       |
| 경북 | 1,004,067    | 2,215,423                | 45.3%     | 1,234,314    | 2,260,589                | 54.6%     | 9.3%p        |
| 경남 | 1,275,688    | 2,654,518                | 48.1%     | 1,511,931    | 2,796,992                | 54.1%     | 6.0%p        |
| 제주 | 226,734      | 459,075                  | 49.4%     | 323,316      | 555,734                  | 58.2%     | 8.8%p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MDIS 각 년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년도

[표 4-6] `15년~`21년 전남과 전북의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 비교

(단위 : 백만 원)

| 연도   | 전남        |           |       | 전북        |           |       |
|------|-----------|-----------|-------|-----------|-----------|-------|
|      | 일자리예산     | 지역예산      | 비중    | 일자리예산     | 지역예산      | 비중    |
| 2015 | 562,698   | 6,281,979 | 9.0%  | 449,316   | 5,136,642 | 8.7%  |
| 2016 | 2,733,000 | 6,435,161 | 42.5% | 450,660   | 5,264,362 | 8.6%  |
| 2017 | 390,485   | 6,373,509 | 6.1%  | 405,757   | 5,158,525 | 7.9%  |
| 2018 | 468,114   | 6,750,824 | 6.9%  | 382,029   | 5,620,721 | 6.8%  |
| 2019 | 2,871,676 | 7,369,128 | 39.0% | 719,347   | 6,224,149 | 11.6% |
| 2020 | 2,032,467 | 8,158,795 | 24.9% | 1,165,987 | 6,813,485 | 17.1% |
| 2021 | 329,882   | 9,202,286 | 3.6%  | 1,183,599 | 8,013,828 | 14.8% |
| 평균   | 1,341,189 | 7,224,526 | 18.9% | 679,528   | 6,033,102 | 10.8% |

자료 : 각 지자체 해당 연도별 일자리정책 실행계획, 지방재정365 회계구분별 세입(총계, 당초) 본청 기준

## ■ 전북

전북 지자체별 일자리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완주군(57.9%)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군산(46.2%), 익산(42.5%), 전주(42.4%) 등 도심권 지역에서 일자리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 규모가 가장 작은 지자체는 장수(29.2%), 진안(31.1%), 고창(31.3%) 등 비도심권·초고령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시 단위 지자체의 평균 일자리 규모는 40.2% 인 것에 비해 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일자리 규모는 32.7%로 7.5%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2013년과 동일하게 완주군(79.1%)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임실(63%), 김제(60.2%), 무주(53.6%) 등 비도심권 지자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비도심권 지자체에서 18세 이상 연양인구 자체가 감소한 점도 일정 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 발전에 있어 일자리의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표 4-7] 일자리 규모 (전북 지자체)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1년        |                          |           | 일자리<br>규모 변화 |
|----|--------------|--------------------------|-----------|--------------|--------------------------|-----------|--------------|
|    | 사업체<br>종사자 수 | 만 18세 이상<br>주민등록<br>연양인구 | 일자리<br>규모 | 사업체<br>종사자 수 | 만 18세 이상<br>주민등록<br>연양인구 | 일자리<br>규모 |              |
| 전북 | 624,407      | 1,507,398                | 41.4%     | 791,096      | 1,527,966                | 51.8%     | 10.4%p       |
| 전주 | 215,427      | 507,656                  | 42.4%     | 265,378      | 546,740                  | 48.5%     | 6.1%p        |
| 군산 | 102,159      | 220,947                  | 46.2%     | 116,443      | 223,769                  | 52.0%     | 5.8%p        |
| 익산 | 104,263      | 245,303                  | 42.5%     | 123,241      | 239,121                  | 51.5%     | 9.0%p        |
| 정읍 | 33,981       | 97,385                   | 34.9%     | 47,020       | 93,413                   | 50.3%     | 15.4%p       |
| 남원 | 25,980       | 70,959                   | 36.6%     | 31,403       | 69,372                   | 45.3%     | 8.7%p        |
| 김제 | 29,941       | 77,654                   | 38.6%     | 43,550       | 72,331                   | 60.2%     | 21.7%p       |
| 완주 | 40,418       | 69,841                   | 57.9%     | 61,502       | 77,719                   | 79.1%     | 21.3%p       |
| 진안 | 7,132        | 22,951                   | 31.1%     | 10,752       | 22,582                   | 47.6%     | 16.5%p       |
| 무주 | 7,805        | 21,617                   | 36.1%     | 11,383       | 21,248                   | 53.6%     | 17.5%p       |
| 장수 | 5,801        | 19,847                   | 29.2%     | 9,865        | 19,428                   | 50.8%     | 21.5%p       |
| 임실 | 8,350        | 25,939                   | 32.2%     | 15,318       | 24,305                   | 63.0%     | 30.8%p       |
| 순창 | 8,079        | 25,656                   | 31.5%     | 10,377       | 24,100                   | 43.1%     | 11.6%p       |
| 고창 | 16,066       | 51,409                   | 31.3%     | 22,195       | 47,886                   | 46.3%     | 15.1%p       |
| 부안 | 19,005       | 50,237                   | 37.8%     | 22,669       | 45,955                   | 49.3%     | 11.5%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MDIS 각 년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양인구 각 년도



## 2) 일자리 증감

### ■ 전국

각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를 연도별 비교하여 일자리의 증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년도 대비 2013년도 증감률이 가장 큰 광역시도는 세종시(22.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울산(8.1%), 제주(7.2%), 강원(5.9%)로 나타났다. 전북의 증감률은 3.6%로 전국 9위 수준의 증감률을 보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감률이 가장 큰 광역시도 역시 세종시(9.5%)로 나타났으나, 증감률은 2013년(22.3%)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2020년 대비 2021년 일자리 수가 0.5% 감소하였으며, 이는 향후 인구 감소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일자리 증감 (전국 광역시도)

(단위 : 명)

| 구분 | 2012년~2013년  |              |                  | 2020년~2021년 증감 |              |                  | 일자리<br>증감률 변화 |
|----|--------------|--------------|------------------|----------------|--------------|------------------|---------------|
|    | 2012년<br>(A) | 2013년<br>(B) | 증감률<br>((B-A)/A) | 2020년<br>(C)   | 2021년<br>(D) | 증감률<br>((D-C)/C) |               |
| 전국 | 18,569,354   | 19,173,471   | 3.3%             | 24,813,449     | 24,931,600   | 0.5%             | -2.8%p        |
| 서울 | 4,541,393    | 4,585,090    | 1%               | 5,868,926      | 5,771,226    | -1.7%            | -2.7%p        |
| 부산 | 1,275,945    | 1,297,862    | 1.7%             | 1,537,281      | 1,544,504    | 0.5%             | -1.2%p        |
| 대구 | 833,836      | 849,631      | 1.9%             | 1,010,557      | 1,004,563    | -0.6%            | -2.5%p        |
| 인천 | 871,532      | 895,657      | 2.8%             | 1,208,269      | 1,223,448    | 1.3%             | -1.5%p        |
| 광주 | 519,912      | 529,113      | 1.8%             | 667,435        | 676,261      | 1.3%             | -0.5%p        |
| 대전 | 521,281      | 536,181      | 2.9%             | 691,264        | 688,457      | -0.4%            | -3.3%p        |
| 울산 | 452,130      | 488,627      | 8.1%             | 543,424        | 543,984      | 0.1%             | -8%p          |
| 세종 | 46,512       | 56,867       | 22.3%            | 139,731        | 152,974      | 9.5%             | -12.8%p       |
| 경기 | 4,041,430    | 4,259,213    | 5.4%             | 5,886,850      | 5,994,570    | 1.8%             | -3.6%p        |
| 강원 | 520,559      | 551,181      | 5.9%             | 704,983        | 714,310      | 1.3%             | -4.6%p        |
| 충북 | 569,550      | 591,509      | 3.9%             | 808,018        | 817,324      | 1.2%             | -2.7%p        |
| 충남 | 742,046      | 777,843      | 4.8%             | 1,064,810      | 1,082,844    | 1.7%             | -3.1%p        |
| 전북 | 602,988      | 624,407      | 3.6%             | 794,929        | 791,096      | -0.5%            | -4.1%p        |
| 전남 | 601,963      | 623,801      | 3.6%             | 847,692        | 856,478      | 1%               | -2.6%p        |
| 경북 | 966,347      | 1,004,067    | 3.9%             | 1,225,829      | 1,234,314    | 0.7%             | -3.2%p        |
| 경남 | 1,250,462    | 1,275,688    | 2%               | 1,494,560      | 1,511,931    | 1.2%             | -0.8%p        |
| 제주 | 211,468      | 226,734      | 7.2%             | 318,891        | 323,316      | 1.4%             | -5.8%p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MDIS 각 연도

## ■ 전북

전북의 지자체별 일자리 증감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2013년 일자리 증감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완주군(8.8%)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완주 혁신도시 이전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진안(8.7%), 남원(6%), 부안(5.4%), 익산(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주와 임실은 -2.4%의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였다.

전년 대비 2021년 일자리 증감률을 살펴보면, 임실의 일자리 증감률이 6.2%로 전북 지자체 중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완주가 3.9%, 진안이 3.7%, 정읍이 3.6%의 일자리 수 증가를 보였다.

2013년과 2021년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감률 변화를 살펴보면 임실이 2013년 전년 대비 -2.4%의 일자리 수 감소를 경험한 것에 비해, 2021년 전년 대비 6.2%의 일자리 수 증가를 경험하여 8.6%p의 차이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무주 2.5%p, 정읍 1.8%p 순으로 증감률이 변화하였다.

[표 4-9] 일자리 증감 (전북 지자체)

(단위 : 명)

| 구분 | 2012년~2013년 |           |               | 2020년~2021년 증감 |           |               | 일자리 증감률 변화 |
|----|-------------|-----------|---------------|----------------|-----------|---------------|------------|
|    | 2012년 (A)   | 2013년 (B) | 증감률 ((B-A)/A) | 2020년 (C)      | 2021년 (D) | 증감률 ((D-C)/C) |            |
| 전북 | 602,988     | 624,407   | 3.6%          | 794,929        | 791,096   | -0.5%         | -4.1%p     |
| 전주 | 208,877     | 215,427   | 3.1%          | 271,729        | 265,378   | -2.3%         | -5.4%p     |
| 군산 | 99,184      | 102,159   | 3%            | 117,122        | 116,443   | -0.6%         | -3.6%p     |
| 익산 | 100,404     | 104,263   | 3.8%          | 125,030        | 123,241   | -1.4%         | -5.2%p     |
| 정읍 | 33,385      | 33,981    | 1.8%          | 45,390         | 47,020    | 3.6%          | 1.8%p      |
| 남원 | 24,512      | 25,980    | 6%            | 31,593         | 31,403    | -0.6%         | -6.6%p     |
| 김제 | 28,898      | 29,941    | 3.6%          | 43,659         | 43,550    | -0.2%         | -3.8%p     |
| 완주 | 37,157      | 40,418    | 8.8%          | 59,182         | 61,502    | 3.9%          | -4.9%p     |
| 진안 | 6,560       | 7,132     | 8.7%          | 10,369         | 10,752    | 3.7%          | -5%p       |
| 무주 | 7,994       | 7,805     | -2.4%         | 11,377         | 11,383    | 0.1%          | 2.5%p      |
| 장수 | 5,886       | 5,801     | -1.4%         | 9,968          | 9,865     | -1%           | 0.4%p      |
| 임실 | 8,552       | 8,350     | -2.4%         | 14,418         | 15,318    | 6.2%          | 8.6%p      |
| 순창 | 7,922       | 8,079     | 2%            | 10,363         | 10,377    | 0.1%          | -1.9%p     |
| 고창 | 15,678      | 16,066    | 2.5%          | 22,663         | 22,195    | -2.1%         | -4.6%p     |
| 부안 | 18,032      | 19,005    | 5.4%          | 22,066         | 22,669    | 2.7%          | -2.7%p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MDIS 각 년도

### 3) 고용 참여

#### ■ 전국

각 시도별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취업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 의미하는 취업자의 정의<sup>6)</sup>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주간에 ①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한 자, ③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는 자를 추출하였다. 그 후 이를 앞서 살펴본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눠 각 시도별 고용률을 구하였다.

2013년 기준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국 4,101만 명의 만 18세 이상 인구 중 2,431만 명의 인구가 취업자로 나타났으며, 59.3%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각 시도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충남의 고용률이 6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 67%, 경북 63%, 충북 62.1%, 경남 6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단위에서 고용률(평균 57.8%)이 도 단위의 고용률(평균 62%)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의 경우 강원도(57%)와 더불어 유일하게 도 단위 지자체 중 고용률이 하위에 머무른 지자체(58.7%, 전국 12위)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국이 62.5%의 고용률을 기록하였고, 세종이 가장 높은 70.4%의 고용률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제주 70.3%, 충남 69.1%, 충북 68.6%, 경북 65.3%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용률 하위 지자체는 전북을 제외하고 모두 광역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로 나타났다. 전북은 2013년 고용률 전국 12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2023년 고용률은 한 단계 밖에 상승하지 못한 전국 11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자료가 없었던 세종을 제외하고 충북이 6.6%p, 강원이 6.3%p, 전북이 4.4%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2013년 전국 14위의 고용률(57%)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6계단 상승한 전국 8위의 고용률(63.3%)을 보이며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6)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일을 도와 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통계청, 2023).

[표 4-10] 고용률 (전국 광역시도)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고용률<br>변화 |
|----|-------------------|--------------------------|-------|-------------------|--|-------|-------------------|
|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 만 18세 이상<br>주민등록<br>연앙인구 | 고용률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 만 18세 이상<br>주민등록<br>연앙인구 <sup>1)</sup> | 고용률   |                   |
| 전국 | 24,312,305        | 41,010,081               | 59.3% | 27,652,654        | 44,244,416                             | 62.5% | 3.2%p             |
| 서울 | 4,793,246         | 8,342,352                | 57.5% | 4,989,690         | 8,295,328                              | 60.2% | 2.7%p             |
| 부산 | 1,572,260         | 2,927,398                | 53.7% | 1,609,925         | 2,888,248                              | 55.7% | 2.0%p             |
| 대구 | 1,130,863         | 2,016,243                | 56.1% | 1,151,887         | 2,053,826                              | 56.1% | 0.0%p             |
| 인천 | 1,350,913         | 2,287,011                | 59.1% | 1,603,960         | 2,571,251                              | 62.4% | 3.3%p             |
| 광주 | 678,287           | 1,141,886                | 59.4% | 760,014           | 1,202,062                              | 63.2% | 3.8%p             |
| 대전 | 708,406           | 1,204,248                | 58.8% | 779,695           | 1,236,151                              | 63.1% | 4.2%p             |
| 울산 | 545,156           | 908,622                  | 60.0% | 555,769           | 934,859                                | 59.4% | -0.5%p            |
| 세종 | - <sup>2)</sup>   | 93,572                   | 0.0%  | 210,966           | 299,763                                | 70.4% | 70.4%p            |
| 경기 | 5,771,443         | 9,557,553                | 60.4% | 7,358,507         | 11,565,620                             | 63.6% | 3.2%p             |
| 강원 | 713,250           | 1,251,631                | 57.0% | 845,049           | 1,334,421                              | 63.3% | 6.3%p             |
| 충북 | 781,020           | 1,258,142                | 62.1% | 942,932           | 1,373,905                              | 68.6% | 6.6%p             |
| 충남 | 1,124,909         | 1,633,160                | 68.9% | 1,258,935         | 1,821,354                              | 69.1% | 0.2%p             |
| 전북 | 885,194           | 1,507,398                | 58.7% | 961,120           | 1,521,700                              | 63.2% | 4.4%p             |
| 전남 | 936,938           | 1,551,851                | 60.4% | 1,010,320         | 1,568,516                              | 64.4% | 4.0%p             |
| 경북 | 1,396,498         | 2,215,423                | 63.0% | 1,453,809         | 2,228,043                              | 65.3% | 2.2%p             |
| 경남 | 1,616,268         | 2,654,518                | 60.9% | 1,762,008         | 2,782,883                              | 63.3% | 2.4%p             |
| 제주 | 307,653           | 459,075                  | 67.0% | 398,068           | 566,486                                | 70.3% | 3.3%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년도 저자 가공

주 1) 2023년 11월 기준

2) 2013년 지역별고용조사를 세종시로 구분하여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누락됨

## ■ 전북

전북의 지자체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장수의 고용률이 73.1%를 보이며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주 67%, 남원 62%, 부안 62% 순으로 비도심권 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보고서에서 취업 가능 연령에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아 상당수의 비도심권 노인인구가 취업자 수로 포함된 것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전주(58%), 군산(56.8%), 익산(57%) 등 도심권 지역의 고용률은 전북 평균(58.7%)보다 낮게 나타났다.

2023년의 고용률의 경우, 2013년과 마찬가지로 장수와 무주의 고용률이 각 74%, 7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완주 68.2%, 부안 68%, 고창 67.6%로 나타났다. 역시 도심권(전주, 군산, 익산)의 고용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임실의 경우 비도심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고용률(62.3%)을 나타냈는데, 임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1.8%)도 전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고용률 (전북 지자체)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고용률<br>변화 |
|----|-------------------|--------------------------|-------|-------------------|--|-------|-------------------|
|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 만 18세 이상<br>주민등록<br>연앙인구 | 고용률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 만 18세 이상<br>주민등록<br>연앙인구 <sup>1)</sup> | 고용률   |                   |
| 전북 | 885,194           | 1,507,398                | 58.7% | 961,120           | 1,521,700                              | 63.2% | 4.4%p             |
| 전주 | 294,562           | 507,656                  | 58.0% | 336,998           | 544,683                                | 61.9% | 3.8%p             |
| 군산 | 125,539           | 220,947                  | 56.8% | 132,978           | 223,032                                | 59.6% | 2.8%p             |
| 익산 | 139,801           | 245,303                  | 57.0% | 146,650           | 235,292                                | 62.3% | 5.3%p             |
| 정읍 | 56,358            | 97,385                   | 57.9% | 59,734            | 91,798                                 | 65.1% | 7.2%p             |
| 남원 | 44,003            | 70,959                   | 62.0% | 43,742            | 67,809                                 | 64.5% | 2.5%p             |
| 김제 | 47,436            | 77,654                   | 61.1% | 47,447            | 73,283                                 | 64.7% | 3.7%p             |
| 완주 | 42,198            | 69,841                   | 60.4% | 57,610            | 84,432                                 | 68.2% | 7.8%p             |
| 진안 | 13,983            | 22,951                   | 60.9% | 14,813            | 22,308                                 | 66.4% | 5.5%p             |
| 무주 | 14,493            | 21,617                   | 67.0% | 14,794            | 21,059                                 | 70.2% | 3.2%p             |
| 장수 | 14,502            | 19,847                   | 73.1% | 14,017            | 18,937                                 | 74.0% | 0.9%p             |
| 임실 | 14,878            | 25,939                   | 57.4% | 14,778            | 23,723                                 | 62.3% | 4.9%p             |
| 순창 | 15,012            | 25,656                   | 58.5% | 15,670            | 24,034                                 | 65.2% | 6.7%p             |
| 고창 | 31,293            | 51,409                   | 60.9% | 31,530            | 46,634                                 | 67.6% | 6.7%p             |
| 부안 | 31,135            | 50,237                   | 62.0% | 30,360            | 44,676                                 | 68.0% | 6.0%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년도 저자 기준  
주 1) 2023년 11월 기준

## 다. 일자리 질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중위소득 150% 이상의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 그리고 주 36시간에서 52시간 이하의 적절한 노동시간을 갖춘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라 정의하고 지난 10년간 전국 광역시도와 전라북도 각 지자체의 일자리 질과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 1) 고용안정성

#### ■ 전국

고용안정성은 만 18세 이상 취업자 중 상용직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2013년 전국의 고용안정성 비중은 49.1%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중공업 사업체가 밀집한 울산(59.5%)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기(53.9%), 서울(52.7%), 대전(51.9%)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은 광역시 단위에서 평균 51.7%를 기록하며 높게 나타났고, 도 단위의 고용안정성은 평균 42.6%를 나타내며 광역시에 비해 9.1%p 낮게 나타났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지자체는 전남(33.7%), 제주(37%), 전북(38.7%), 경북(3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3년 기준 일자리의 규모도 전국 최하위(15위) 수준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규모도 작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규모와 질 모두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고용안정성을 살펴보면, 전국의 고용안정성은 2013년 49.1%에 비해 9.1%p 높은 58.2%로 나타났다. 1위에서 9위까지 고용안정성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광역시, 특별자치시로, 행정·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시가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울산이 66.1%, 경기가 63.8%, 서울이 63.6%, 대전이 61.7%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2013년에 이어 여전히 전국 최하위(15위, 46.6%)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국 고용안정성(58.2%) 대비 무려 11.6%p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 단위 지자체 중 충남과 충북은 각 52.4%(전국 12위), 56.1%(전국 10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 지역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자리 규모도 전국 2위,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률 역시 각 전국 3위와 4위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이 지역의 고용정책 등을 면밀히 살펴 일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고용안정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의 고용안정성이 9.1%p 상승하였고, 2013년 자료가 없었던 세종시를 제외하고 충북의 고용안정성이 11.3%p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10.9%p, 제주가 10.1%p, 경기도가 9.9%p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지자체는 경남 4.9%p, 인천 5.5%p, 강원 6.1%p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지난 10년간 고용안정성은 7.9%p 상승하였고 이는 상승률 전국 10위 수준을 보여 고용안정성의 증가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4-12] 고용안정성 (전국 광역 시도)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고용안정성<br>변화 |
|----|------------------------------|-----------------------|--------------------|------------------------------|-----------------------|--------------------|---------------------|
|    | 만 18세 이상<br>상용직<br>취업자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고용<br>안정성<br>(A/B) | 만 18세 이상<br>상용직 취업자<br>수 (C)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D) | 고용<br>안정성<br>(C/D) |                     |
| 전국 | 11,936,042                   | 24,312,305            | 49.1%              | 16,086,092                   | 27,652,654            | 58.2%              | 9.1%p               |
| 서울 | 2,527,474                    | 4,793,246             | 52.7%              | 3,175,103                    | 4,989,690             | 63.6%              | 10.9%p              |
| 부산 | 752,910                      | 1,572,260             | 47.9%              | 926,720                      | 1,609,925             | 57.6%              | 9.7%p               |
| 대구 | 537,495                      | 1,130,863             | 47.5%              | 653,972                      | 1,151,887             | 56.8%              | 9.2%p               |
| 인천 | 695,695                      | 1,350,913             | 51.5%              | 914,982                      | 1,603,960             | 57.0%              | 5.5%p               |
| 광주 | 346,290                      | 678,287               | 51.1%              | 440,500                      | 760,014               | 58.0%              | 6.9%p               |
| 대전 | 367,875                      | 708,406               | 51.9%              | 481,011                      | 779,695               | 61.7%              | 9.8%p               |
| 울산 | 324,637                      | 545,156               | 59.5%              | 367,579                      | 555,769               | 66.1%              | 6.6%p               |
| 세종 | -                            | -                     | -                  | 152,763                      | 210,966               | 72.4%              | 72.4%p              |
| 경기 | 3,113,163                    | 5,771,443             | 53.9%              | 4,694,282                    | 7,358,507             | 63.8%              | 9.9%p               |
| 강원 | 295,517                      | 713,250               | 41.4%              | 401,270                      | 845,049               | 47.5%              | 6.1%p               |
| 충북 | 349,887                      | 781,020               | 44.8%              | 528,541                      | 942,932               | 56.1%              | 11.3%p              |
| 충남 | 513,164                      | 1,124,909             | 45.6%              | 659,590                      | 1,258,935             | 52.4%              | 6.8%p               |
| 전북 | 342,333                      | 885,194               | 38.7%              | 447,769                      | 961,120               | 46.6%              | 7.9%p               |
| 전남 | 315,802                      | 936,938               | 33.7%              | 434,649                      | 1,010,320             | 43.0%              | 9.3%p               |
| 경북 | 550,140                      | 1,396,498             | 39.4%              | 672,324                      | 1,453,809             | 46.2%              | 6.9%p               |
| 경남 | 789,966                      | 1,616,268             | 48.9%              | 947,692                      | 1,762,008             | 53.8%              | 4.9%p               |
| 제주 | 113,692                      | 307,653               | 37.0%              | 187,346                      | 398,068               | 47.1%              | 10.1%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 ■ 전북

전북 지자체별 고용안정성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도심권 지역(전주, 군산, 익산, 완주)의 고용안정성이 평균 42.4%로 월등히 높고,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고용안정성 평균이 23%로 도심권 지역과 비도심권 지역간 고용안정성에 있어 큰 차이(19.4%p)를 나타냈다. 각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국가산단이 위치한 군산이 4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익산이 45.6%, 전주가 45.6%를 나타냈다. 고용안정성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임실(13.9%), 장수(19.8%), 부안(21%), 순창(22.1%)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고용안정성을 살펴보면, 도심권 지역(전주, 군산, 익산, 완주)의 고용안정성의 평균이 50.3%로 2014년 대비 7.9%p가 상승하였고,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도 고용안정성 평균이 27.2%로 2014년 대비 4.2%p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비도심권 지역의 고용안정성 상승폭이 도심권 보다 낮아 도심권과의 고용안정성 비중 격차는 23.1%p 까지 벌어져 비도심권의 고용안정성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고용안정성 (전북 지자체)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고용안정성<br>변화 |
|----|------------------------------|-----------------------|--------------------|------------------------------|-----------------------|--------------------|---------------------|
|    | 만 18세 이상<br>상용직<br>취업자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고용<br>안정성<br>(A/B) | 만 18세 이상<br>상용직<br>취업자 수 (C)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D) | 고용<br>안정성<br>(C/D) |                     |
| 전북 | 342,333                      | 885,194               | 38.7%              | 447,769                      | 961,120               | 46.6%              | 7.9%p               |
| 전주 | 134,357                      | 294,562               | 45.6%              | 197,395                      | 336,998               | 58.6%              | 13.0%p              |
| 군산 | 60,828                       | 125,539               | 48.5%              | 69,540                       | 132,978               | 52.3%              | 3.8%p               |
| 익산 | 63,770                       | 139,801               | 45.6%              | 73,860                       | 146,650               | 50.4%              | 4.8%p               |
| 정읍 | 18,985                       | 56,358                | 33.7%              | 21,673                       | 59,734                | 36.3%              | 2.6%p               |
| 남원 | 11,573                       | 44,003                | 26.3%              | 15,355                       | 43,742                | 35.1%              | 8.8%p               |
| 김제 | 11,570                       | 47,436                | 24.4%              | 13,296                       | 47,447                | 28.0%              | 3.6%p               |
| 완주 | 12,561                       | 42,198                | 29.8%              | 23,005                       | 57,610                | 39.9%              | 10.2%p              |
| 진안 | 3,140                        | 13,983                | 22.5%              | 3,502                        | 14,813                | 23.6%              | 1.2%p               |
| 무주 | 3,248                        | 14,493                | 22.4%              | 3,700                        | 14,794                | 25.0%              | 2.6%p               |
| 장수 | 2,874                        | 14,502                | 19.8%              | 3,289                        | 14,017                | 23.5%              | 3.6%p               |
| 임실 | 2,062                        | 14,878                | 13.9%              | 4,068                        | 14,778                | 27.5%              | 13.7%p              |
| 순창 | 3,325                        | 15,012                | 22.1%              | 3,582                        | 15,670                | 22.9%              | 0.7%p               |
| 고창 | 7,506                        | 31,293                | 24.0%              | 8,169                        | 31,530                | 25.9%              | 1.9%p               |
| 부안 | 6,535                        | 31,135                | 21.0%              | 7,332                        | 30,360                | 24.2%              | 3.2%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 2) 임금수준

### ■ 전국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 수를 알아보기 위해 2013년과 2023년도의 중위소득을 구한 후, 전체 취업자 중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수준이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였다. 2013년의 경우 통계청에서 중위소득이 제공되지 않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의 가계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을 직접 구하였다<sup>7)</sup>. 2023년의 경우 통계청의 기준중위소득(2,077,892원)을 활용하였다.

2013년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간 중위소득 150% (2,599,313원) 이상 급여를 받은 취업자 수(일자리 수)는 1,059만 명으로, 이는 전체 취업자 수(2,431만 명) 대비 43.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중위소득 150% 이상인 일자리의 비율이 같은 조건의 광역도 단위 일자리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위소득 150% 이상인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56.8%), 경북(50.8%), 충남(49.4%), 경남(47.7%), 전북(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중위소득 150% 이상인 일자리의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제주(32.8%), 인천(35.1%), 대구(35.4%), 대전(35.6%)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최근 3개월 간 기준중위소득 150% (3,116,838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취업자 수(일자리 수)는 2013년 대비 373만 명 늘어난 1,433만 명으로 나타났고, 늘어난 일자리 중 대부분(177만 명, 47%)은 수도권(서울, 경기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세종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의 급여를 받는 취업자 수의 비율이 5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남(58.6%), 충남(56.3%), 경북(56.1%), 경남(54.4%)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150% 이상인 일자리의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광주(46%), 부산(47%), 대구(47.5%), 인천(4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013년 전국 5위 수준으로 중위소득 150%를 받는 일자리 수의 비중이 높았지만 2023년에는 전국 9위로 무려 4단계나 하락하였다. 반면 제주의 경우 2013년 중위소득 150% 이상을 받는 일자리 수의 비중이 전국 최하위(32.8%)였지만, 2023년 무려 8계단이나 상승한 전국 8위(52.4%)로 올라서는 성과를 이루었다.

7) 시군구별 근로자 가구이자 가구원이 1명, 취업인원이 1명인 가구의 가중치를 모두 더해 중위수(702,256.5 번째)를 구한 후, 중위번째인 소득(1,732,879원)을 확인함

지난 10년간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중위소득 150%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자료가 없었던 세종을 제외하고 제주가 무려 19.6%p 상승하여 전국의 10년간 비중 차이인 8.2%p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이 12.7%p, 대전이 12.4%p, 대구가 12.1%p로 높게 나타났고, 전북의 경우 지난 10년간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5.1%p 밖에 상승하지 않아, 전국 최하위(15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표 4-14] 소득 수준 (전국 광역시도)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적절 소득<br>제공 일자리<br>비율 변화 |
|----|---|-----------------------|---------------------------|--|-----------------------|---------------------------|----------------------------------|
|    | 중위소득<br>150% 이상<br>일자리 수<br>(A) <sup>1)</sup>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적절한 소득<br>일자리 비율<br>(A/B) | 중위소득<br>150% 이상<br>일자리 수 (A) <sup>2)</sup>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적절한 소득<br>일자리 비율<br>(A/B) |                                  |
| 전국 | 10,593,980                                    | 24,312,305            | 43.6%                     | 14,326,319                                 | 27,652,654            | 51.8%                     | 8.2%p                            |
| 서울 | 2,146,561                                     | 4,793,246             | 44.8%                     | 2,588,198                                  | 4,989,690             | 51.9%                     | 7.1%p                            |
| 부산 | 580,643                                       | 1,572,260             | 36.9%                     | 756,337                                    | 1,609,925             | 47.0%                     | 10.0%p                           |
| 대구 | 400,743                                       | 1,130,863             | 35.4%                     | 547,272                                    | 1,151,887             | 47.5%                     | 12.1%p                           |
| 인천 | 473,752                                       | 1,350,913             | 35.1%                     | 766,933                                    | 1,603,960             | 47.8%                     | 12.7%p                           |
| 광주 | 251,438                                       | 678,287               | 37.1%                     | 349,436                                    | 760,014               | 46.0%                     | 8.9%p                            |
| 대전 | 252,172                                       | 708,406               | 35.6%                     | 374,162                                    | 779,695               | 48.0%                     | 12.4%p                           |
| 울산 | 241,765                                       | 545,156               | 44.3%                     | 299,627                                    | 555,769               | 53.9%                     | 9.6%p                            |
| 세종 | -   | -                     | -                         | 126,422                                    | 210,966               | 59.9%                     | 59.9%p                           |
| 경기 | 2,490,845                                     | 5,771,443             | 43.2%                     | 3,815,200                                  | 7,358,507             | 51.8%                     | 8.7%p                            |
| 강원 | 331,598                                       | 713,250               | 46.5%                     | 412,838                                    | 845,049               | 48.9%                     | 2.4%p                            |
| 충북 | 338,924                                       | 781,020               | 43.4%                     | 505,469                                    | 942,932               | 53.6%                     | 10.2%p                           |
| 충남 | 555,911                                       | 1,124,909             | 49.4%                     | 709,335                                    | 1,258,935             | 56.3%                     | 6.9%p                            |
| 전북 | 416,433                                       | 885,194               | 47.0%                     | 500,836                                    | 961,120               | 52.1%                     | 5.1%p                            |
| 전남 | 532,102                                       | 936,938               | 56.8%                     | 591,602                                    | 1,010,320             | 58.6%                     | 1.8%p                            |
| 경북 | 709,514                                       | 1,396,498             | 50.8%                     | 815,896                                    | 1,453,809             | 56.1%                     | 5.3%p                            |
| 경남 | 770,568                                       | 1,616,268             | 47.7%                     | 958,195                                    | 1,762,008             | 54.4%                     | 6.7%p                            |
| 제주 | 101,012                                       | 307,653               | 32.8%                     | 208,562                                    | 398,068               | 52.4%                     | 19.6%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자 1인 가구 중위소득(1,732,879원) 산출

2) 통계청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원) 활용

## ■ 전북

[표 4-15] 소득 수준 (전북 지자체)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적절 소득<br>제공<br>일자리<br>비율 변화 |
|----|---|-----------------------|---------------------------|---|-----------------------|---------------------------|-------------------------------------|
|    | 중위소득<br>150% 이상<br>일자리 수<br>(A) <sup>1)</sup>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적절한 소득<br>일자리 비율<br>(A/B) | 중위소득<br>150% 이상<br>일자리 수 (A)<br>(A) <sup>2)</sup>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적절한 소득<br>일자리 비율<br>(A/B) |                                     |
| 전북 | 416,433                                       | 885,194               | 47.0%                     | 500,836   | 961,120               | 52.1%                     | 5.1%p                               |
| 전주 | 102,951                                       | 294,562               | 35.0%                     | 161,472   | 336,998               | 47.9%                     | 13.0%p                              |
| 군산 | 47,959  | 125,539               | 38.2%                     | 65,697  | 132,978               | 49.4%                     | 11.2%p                              |
| 익산 | 67,269  | 139,801               | 48.1%                     | 68,773  | 146,650               | 46.9%                     | -1.2%p                              |
| 정읍 | 31,300  | 56,358                | 55.5%                     | 33,574  | 59,734                | 56.2%                     | 0.7%p                               |
| 남원 | 25,254  | 44,003                | 57.4%                     | 24,776  | 43,742                | 56.6%                     | -0.8%p                              |
| 김제 | 28,844  | 47,436                | 60.8%                     | 27,780  | 47,447                | 58.5%                     | -2.3%p                              |
| 완주 | 23,940  | 42,198                | 56.7%                     | 31,218  | 57,610                | 54.2%                     | -2.5%p                              |
| 진안 | 9,455   | 13,983                | 67.6%                     | 9,324   | 14,813                | 62.9%                     | -4.7%p                              |
| 무주 | 9,879   | 14,493                | 68.2%                     | 8,320   | 14,794                | 56.2%                     | -11.9%p                             |
| 장수 | 8,669   | 14,502                | 59.8%                     | 7,008   | 14,017                | 50.0%                     | -9.8%p                              |
| 임실 | 10,535  | 14,878                | 70.8%                     | 9,252   | 14,778                | 62.6%                     | -8.2%p                              |
| 순창 | 10,590  | 15,012                | 70.5%                     | 11,369  | 15,670                | 72.6%                     | 2.0%p                               |
| 고창 | 21,813  | 31,293                | 69.7%                     | 22,545  | 31,530                | 71.5%                     | 1.8%p                               |
| 부안 | 17,975  | 31,135                | 57.7%                     | 19,728  | 30,360                | 65.0%                     | 7.2%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자 1인 가구 중위소득(1,732,879원) 산출

2) 통계청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원) 활용

2013년 기준 전북의 지자체별 중위소득 150% 이상을 제공하는 일자리 수를 살펴보면, 군단위 지자체에서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의 비중(평균 65.1%)이 높게 나타났고, 동일한 조건의 시단위 지자체의 경우, 비중이 49.2%로 낮게 나타났다. 일정 소득 이상을 제공하는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임실(70.8%), 순창(70.5%), 고창(69.7%), 무주(68.2%)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전주(35%), 군산(38.2%), 익산(48.1%) 순으로 도심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을 제공하는 일자리 수는 전북 전체 84,402개가 늘어났고,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76,259개, 90%)은 전주, 군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의 경우 적절한 소득 이상을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여 인구 이탈 가속화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이상의 일자리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순창(72.6%), 고창(71.5%), 부안(65%), 진안(6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준중위소득 이상의 일자리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익산(46.9%), 전주(47.9%), 군산(49.4%), 장수(5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중위소득 150% 이상을 제공하는 일자리 수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주, 군산이 각 13%p, 11.2%p 이상 상승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부안 7.2%p, 순창 2%p, 고창 1.8%p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부권 무주, 장수, 임실의 경우 각 -11.9%p, -9.8%p, -8.2%p 로 감소하여 이들 지역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동시간

#### ■ 전국

적절한 노동시간을 요구하는 일자리 수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 2023년의 취업자 중 상용직에 준하는 노동시간(주 36시간~52시간)을 제공한 사람의 수를 파악하여 보았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노동시간 제공 일자리의 비율은 63.6%로 나타났고, 각 시도별로는 중공업 기업이 밀집한 울산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68.1%, 광주가 67.8%, 경기도가 6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광역시의 적절 노동시간 제공 일자리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대구의 경우만 전국 비중인 63.6% 보다 2.9%p 낮은 60.7%의 비중을 보이며 전국 10위를 나타냈다. 전북의 경우 대구보다 0.1%p 낮은 60.6%를 보이며 전국 11위를 나타냈고, 적절 노동시간 제공 일자리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제주 52.4%, 충남 56.6%, 강원 58.1%, 전남 58.2%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국 기준 적절한 노동시간 제공 일자리 비율은 70.9%로 나타났고, 1위부터 9위까지 적절 노동시간 제공 일자리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광역시권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 이어 울산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기 74.6%, 서울 74.5%, 대전 73.3%, 인천 72.1% 순으로 나타났다.

적절 노동시간 제공 일자리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전남(60%), 강원(61.8%), 제주(61.9%), 전북(64.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적절한 노동시간 제공 일자리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자료가 없었던 세종을 제외하고 대구가 10.4%p 상승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충남이 10.2%, 제주가 9.5%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4.2%p가 상승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국 13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폭의 상승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16] 적절한 노동시간을 제공하는 일자리 수 (전국 광역시도)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적절<br>노동시간<br>제공 일자리<br>비율 변화 |
|----|--------------------------|-----------------------|--------------------------------|--------------------------|-----------------------|--------------------------------|---------------------------------------|
|    | 적절한<br>노동시간<br>일자리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적절한<br>노동시간<br>일자리 비율<br>(A/B) | 적절한<br>노동시간<br>일자리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적절한<br>노동시간<br>일자리 비율<br>(A/B) |                                       |
| 전국 | 15,472,153               | 24,312,305            | 63.6%                          | 19,596,035               | 27,652,654            | 70.9%                          | 7.2%p                                 |
| 서울 | 3,264,616                | 4,793,246             | 68.1%                          | 3,718,821                | 4,989,690             | 74.5%                          | 6.4%p                                 |
| 부산 | 1,007,358                | 1,572,260             | 64.1%                          | 1,146,607                | 1,609,925             | 71.2%                          | 7.2%p                                 |
| 대구 | 685,985                  | 1,130,863             | 60.7%                          | 818,526                  | 1,151,887             | 71.1%                          | 10.4%p                                |
| 인천 | 852,297                  | 1,350,913             | 63.1%                          | 1,157,052                | 1,603,960             | 72.1%                          | 9.0%p                                 |
| 광주 | 459,706                  | 678,287               | 67.8%                          | 541,205                  | 760,014               | 71.2%                          | 3.4%p                                 |
| 대전 | 457,933                  | 708,406               | 64.6%                          | 571,766                  | 779,695               | 73.3%                          | 8.7%p                                 |
| 울산 | 372,078                  | 545,156               | 68.3%                          | 420,050                  | 555,769               | 75.6%                          | 7.3%p                                 |
| 세종 | -                        | -                     | -                              | 147,469                  | 210,966               | 69.9%                          | 69.9%p                                |
| 경기 | 3,789,159                | 5,771,443             | 65.7%                          | 5,489,002                | 7,358,507             | 74.6%                          | 8.9%p                                 |
| 강원 | 414,108                  | 713,250               | 58.1%                          | 522,530                  | 845,049               | 61.8%                          | 3.8%p                                 |
| 충북 | 475,980                  | 781,020               | 60.9%                          | 636,505                  | 942,932               | 67.5%                          | 6.6%p                                 |
| 충남 | 636,518                  | 1,124,909             | 56.6%                          | 840,223                  | 1,258,935             | 66.7%                          | 10.2%p                                |
| 전북 | 536,713                  | 885,194               | 60.6%                          | 623,053                  | 961,120               | 64.8%                          | 4.2%p                                 |
| 전남 | 545,547                  | 936,938               | 58.2%                          | 606,398                  | 1,010,320             | 60.0%                          | 1.8%p                                 |
| 경북 | 813,933                  | 1,396,498             | 58.3%                          | 948,287                  | 1,453,809             | 65.2%                          | 6.9%p                                 |
| 경남 | 999,079                  | 1,616,268             | 61.8%                          | 1,162,092                | 1,762,008             | 66.0%                          | 4.1%p                                 |
| 제주 | 161,144                  | 307,653               | 52.4%                          | 246,448                  | 398,068               | 61.9%                          | 9.5%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 ■ 전북

전북 지자체별 적절한 노동시간을 제공하는 일자리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익산이 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산 64.9%, 전주 64.5%로 도심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적절 노동시간 제공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전주가 7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산(69.5%), 익산(68.3%), 완주(66.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적절 노동시간 제공 일자리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임실이 8.9%p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완주(8.7%p), 진안(8.1%p), 전주(7.3%p) 순으로 나타났다. 고창, 김제, 장수, 순창, 정읍의 경우 적절 노동시간 제공 일자리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여 일자리 질이 더욱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7] 적절한 노동시간을 제공하는 일자리 수 (전북 지자체)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적절<br>노동시간<br>제공 일자리<br>비율 변화 |
|----|--------------------------|-----------------------|--------------------------------|--------------------------|-----------------------|--------------------------------|---------------------------------------|
|    | 적절한<br>노동시간<br>일자리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적절한<br>노동시간<br>일자리 비율<br>(A/B) | 적절한<br>노동시간<br>일자리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적절한<br>노동시간<br>일자리 비율<br>(A/B) |                                       |
| 전북 | 536,713                  | 885,194               | 60.6%                          | 623,053                  | 961,120               | 64.8%                          | 4.2%p                                 |
| 전주 | 189,853                  | 294,562               | 64.5%                          | 241,654                  | 336,998               | 71.7%                          | 7.3%p                                 |
| 군산 | 81,429                   | 125,539               | 64.9%                          | 92,434                   | 132,978               | 69.5%                          | 4.6%p                                 |
| 익산 | 90,938                   | 139,801               | 65.0%                          | 100,134                  | 146,650               | 68.3%                          | 3.2%p                                 |
| 정읍 | 30,935                   | 56,358                | 54.9%                          | 31,844                   | 59,734                | 53.3%                          | -1.6%p                                |
| 남원 | 23,924                   | 44,003                | 54.4%                          | 24,451                   | 43,742                | 55.9%                          | 1.5%p                                 |
| 김제 | 26,257                   | 47,436                | 55.4%                          | 24,313                   | 47,447                | 51.2%                          | -4.1%p                                |
| 완주 | 24,534                   | 42,198                | 58.1%                          | 38,490                   | 57,610                | 66.8%                          | 8.7%p                                 |
| 진안 | 7,038                    | 13,983                | 50.3%                          | 8,659                    | 14,813                | 58.5%                          | 8.1%p                                 |
| 무주 | 7,138                    | 14,493                | 49.3%                          | 8,250                    | 14,794                | 55.8%                          | 6.5%p                                 |
| 장수 | 6,874                    | 14,502                | 47.4%                          | 6,242                    | 14,017                | 44.5%                          | -2.9%p                                |
| 임실 | 7,724                    | 14,878                | 51.9%                          | 8,991                    | 14,778                | 60.8%                          | 8.9%p                                 |
| 순창 | 7,411                    | 15,012                | 49.4%                          | 7,467                    | 15,670                | 47.6%                          | -1.7%p                                |
| 고창 | 18,219                   | 31,293                | 58.2%                          | 14,873                   | 31,530                | 47.2%                          | -11.0%p                               |
| 부안 | 14,439                   | 31,135                | 46.4%                          | 15,251                   | 30,360                | 50.2%                          | 3.9%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 4) 사회적 안전망

##### 가) 취업자 수 대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취업자 수 대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는 2013년과 2022년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기존에는 상반기 지역고용조사 자료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당 문항이 누락되어 자료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보험 자료를 분절적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만 18세 이상 전체 취업자와 4대보험 가입자가 중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2013년의 경우 앞서 구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 만 18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광역시도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률(추정)을 구하였다. 국민연금통계에서 2023년 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아 2022년 공표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 만 18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를 추가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 ■ 전국

2013년 기준 전국 취업자의 국민연금 추정 가입률은 49.1%이며, 서울의 가입률이 83.2%<sup>8)</sup>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울산(50.5%), 경기(45.7%), 경남(44.5%), 대전(42.3%)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32%)의 경우 전국에서 전남(30.7%) 다음으로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2022년 기준 전국 취업자의 국민연금 추정 가입률은 2013년 49.1% 대비 5.3%p 상승한 54.4%를 기록하였다. 역시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93.2%)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울산(50.9%), 대전(50.5%), 경기(50.3%)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013년 전국 15위(32%) 수준을 보이던 가입률이 2022년 전국 최하위인 17위(37.3%)로 나타나 취업자와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년간 국민연금 가입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남이 11.9%p 상승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10.1%p, 제주가 9.2%p, 대전이 8.2%p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

8) 서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대인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취업자의 수가 대부분(4,356,537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수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을 추정해도 비슷한 수치(86.9%)로 나타났다.

의 경우 2013년 전국 16위의 가입률을 기록하였지만, 2022년의 경우 6계단 상승한 전국 10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충북과 충남도 2013년 각 7위, 10위에서 2022년 5위, 6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던 울산의 가입률 증감이 0.4%p 로 더디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남 0.4%p, 경북 4.1%p, 인천 4.1%p 로 나타났다.

[표 4-18] 취업자 수 대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전국 광역시도)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2년                    |                       |                      | 10년간<br>국민연금<br>가입 비율<br>변화 |
|----|--------------------------|-----------------------|----------------------|--------------------------|-----------------------|----------------------|-----------------------------|
|    | 국민연금<br>사업장<br>가입자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국민연금<br>가입률<br>(A/B) | 국민연금<br>사업장<br>가입자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국민연금<br>가입률<br>(A/B) |                             |
| 전국 | 11,935,759               | 24,312,305            | 49.1%                | 14,785,761               | 27,187,212            | 54.4%                | 5.3%p                       |
| 서울 | 3,986,280                | 4,793,246             | 83.2%                | 4,554,053                | 4,884,651             | 93.2%                | 10.1%p                      |
| 부산 | 625,894                  | 1,572,260             | 39.8%                | 728,037                  | 1,591,089             | 45.8%                | 5.9%p                       |
| 대구 | 402,610                  | 1,130,863             | 35.6%                | 490,745                  | 1,156,705             | 42.4%                | 6.8%p                       |
| 인천 | 518,788                  | 1,350,913             | 38.4%                | 658,039                  | 1,549,631             | 42.5%                | 4.1%p                       |
| 광주 | 240,692                  | 678,287               | 35.5%                | 308,509                  | 747,837               | 41.3%                | 5.8%p                       |
| 대전 | 299,644                  | 708,406               | 42.3%                | 384,212                  | 760,824               | 50.5%                | 8.2%p                       |
| 울산 | 275,186                  | 545,156               | 50.5%                | 280,818                  | 552,009               | 50.9%                | 0.4%p                       |
| 세종 | 32,480                   | -                     | -                    | 77,375                   | 200,948               | 38.5%                | -                           |
| 경기 | 2,636,523                | 5,771,443             | 45.7%                | 3,627,096                | 7,217,593             | 50.3%                | 4.6%p                       |
| 강원 | 232,278                  | 713,250               | 32.6%                | 326,542                  | 830,628               | 39.3%                | 6.7%p                       |
| 충북 | 310,326                  | 781,020               | 39.7%                | 420,415                  | 914,932               | 46.0%                | 6.2%p                       |
| 충남 | 431,696                  | 1,124,909             | 38.4%                | 572,184                  | 1,247,389             | 45.9%                | 7.5%p                       |
| 전북 | 283,573                  | 885,194               | 32.0%                | 356,925                  | 956,822               | 37.3%                | 5.3%p                       |
| 전남 | 287,391                  | 936,938               | 30.7%                | 428,653                  | 1,007,996             | 42.5%                | 11.9%p                      |
| 경북 | 551,481                  | 1,396,498             | 39.5%                | 633,016                  | 1,453,609             | 43.5%                | 4.1%p                       |
| 경남 | 719,290                  | 1,616,268             | 44.5%                | 776,079                  | 1,728,136             | 44.9%                | 0.4%p                       |
| 제주 | 101,627                  | 307,653               | 33.0%                | 163,063                  | 386,415               | 42.2%                | 9.2%p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주 1) 전체 취업자 수는 만 18세 이상으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60세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 전북

전북 지자체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정치는 2013년 기준 완주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군산이 40.6%, 익산이 35.1%, 김제가 32.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 추정치가 낮은 지자체는 장수가 17.4%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고창 19.3%, 부안 20.1%, 무주 21.7%, 순창 21.9%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완주의 국민연금 가입률 추정치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김제가 44.4%, 군산 43.1%, 익산 39.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 추정치가 낮은 지자체는 역시 장수가 21.9%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고창이 25.7%, 부안이 25.8% 순으로 나타났다. 장수, 고창, 부안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질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가입률을 제고시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취업자 수 대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전북 지자체)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2년                    |                                     |                      | 10년간<br>국민연금<br>가입 비율<br>변화 |
|----|--------------------------|-------------------------------------|----------------------|--------------------------|-------------------------------------|----------------------|-----------------------------|
|    | 국민연금<br>사업장<br>가입자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sup>1)</sup> | 국민연금<br>가입률<br>(A/B) | 국민연금<br>사업장<br>가입자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sup>1)</sup> | 국민연금<br>가입률<br>(A/B) |                             |
| 전북 | 283,573                  | 885,194                             | 32.0%                | 356,925                  | 956,822                             | 37.3%                | 5.3%p                       |
| 전주 | 91,248                   | 294,562                             | 31.0%                | 125,374                  | 347,307                             | 36.1%                | 5.1%p                       |
| 군산 | 50,958                   | 125,539                             | 40.6%                | 55,317                   | 128,414                             | 43.1%                | 2.5%p                       |
| 익산 | 49,058                   | 139,801                             | 35.1%                | 56,457                   | 142,101                             | 39.7%                | 4.6%p                       |
| 정읍 | 16,084                   | 56,358                              | 28.5%                | 18,928                   | 59,509                              | 31.8%                | 3.3%p                       |
| 남원 | 11,910                   | 44,003                              | 27.1%                | 13,589                   | 45,885                              | 29.6%                | 2.5%p                       |
| 김제 | 15,292                   | 47,436                              | 32.2%                | 20,081                   | 45,262                              | 44.4%                | 12.1%p                      |
| 완주 | 20,719                   | 42,198                              | 49.1%                | 30,977                   | 51,394                              | 60.3%                | 11.2%p                      |
| 진안 | 3,265                    | 13,983                              | 23.3%                | 4,023                    | 14,620                              | 27.5%                | 4.2%p                       |
| 무주 | 3,144                    | 14,493                              | 21.7%                | 4,210                    | 14,857                              | 28.3%                | 6.6%p                       |
| 장수 | 2,528                    | 14,502                              | 17.4%                | 3,209                    | 14,634                              | 21.9%                | 4.5%p                       |
| 임실 | 3,790                    | 14,878                              | 25.5%                | 4,739                    | 15,460                              | 30.7%                | 5.2%p                       |
| 순창 | 3,283                    | 15,012                              | 21.9%                | 4,207                    | 16,040                              | 26.2%                | 4.4%p                       |
| 고창 | 6,036                    | 31,293                              | 19.3%                | 8,072                    | 31,386                              | 25.7%                | 6.4%p                       |
| 부안 | 6,258                    | 31,135                              | 20.1%                | 7,742                    | 29,952                              | 25.8%                | 5.7%p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지자체 기공

주 1) 전체 취업자 수는 만 18세 이상으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60세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나) 취업자 수 대비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 ■ 전국

사회안전망 중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013년과 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직장 가입자 수를 추출하였다<sup>9)</sup>. 2013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비중은 전국 기준 60.1%로 나타났으며, 광역시권 지자체의 가입자 수 비중이 62.4%, 광역도 지자체의 가입자 수 비중이 52.7%로 차이를 나타냈다. 각 시도별로는 울산이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65.1%), 경기(64.9%), 인천(6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전남(44.6%), 제주(47.1%), 경북(48.7%), 충남(49.5%), 전북(51%)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비중은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광역 지자체의 가입자 수 비중이 평균 75%로 높게 나타났고, 광역도 지자체의 가입자 수 비중은 63.5%로 나타나, 격차가 2013년 9.7%p에서 2022년 11.5%p 까지 벌어졌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세종(81.8%)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79.8%), 울산(77.3%), 경기(77.3%), 인천(75.1%)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전남(56.4%), 경북(57.5%), 전북(60.2%), 제주(61.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9년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직장 가입자 수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취업자 수 데이터가 없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서울이 14.6%p가 상승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14.5%p), 대구(13.5%p), 충남(12.9%p), 경기(12.4%p)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직장 가입자 수 비율의 증감이 가장 낮았던 지자체는 경남(8.5%p)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8.8%p), 전북(9.2%p), 강원(9.5%p)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013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의 비중이 전국 12위였지만 2022년 기준 3단계 하락한 전국 15위를 기록하여 취업자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과 취업자의 건강보험 가입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일자리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직장 가입자 수만 추출하였다.

[표 4-20] 취업자 수 대비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전국 광역시도)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2년                   |                       |                        | 건강보험<br>가입 비율<br>변화 |
|----|-------------------------|-----------------------|------------------------|-------------------------|-----------------------|------------------------|---------------------|
|    | 건강보험<br>직장<br>가입자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건강보험<br>가입 비율<br>(A/B) | 건강보험<br>직장<br>가입자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건강보험<br>가입 비율<br>(A/B) |                     |
| 전국 | 14,606,113              | 24,312,305            | 60.1%                  | 19,593,873              | 27,187,212            | 72.1%                  | 12.0%p              |
| 서울 | 3,121,349               | 4,793,246             | 65.1%                  | 3,895,558               | 4,884,651             | 79.8%                  | 14.6%p              |
| 부산 | 972,430                 | 1,572,260             | 61.8%                  | 1,175,858               | 1,591,089             | 73.9%                  | 12.1%p              |
| 대구 | 661,338                 | 1,130,863             | 58.5%                  | 833,170                 | 1,156,705             | 72.0%                  | 13.5%p              |
| 인천 | 853,244                 | 1,350,913             | 63.2%                  | 1,164,392               | 1,549,631             | 75.1%                  | 12.0%p              |
| 광주 | 397,288                 | 678,287               | 58.6%                  | 524,993                 | 747,837               | 70.2%                  | 11.6%p              |
| 대전 | 437,380                 | 708,406               | 61.7%                  | 553,387                 | 760,824               | 72.7%                  | 11.0%p              |
| 울산 | 369,073                 | 545,156               | 67.7%                  | 426,814                 | 552,009               | 77.3%                  | 9.6%p               |
| 세종 | 35,867                  | -                     | -                      | 164,357                 | 200,948               | 81.8%                  | 81.8%p              |
| 경기 | 3,747,795               | 5,771,443             | 64.9%                  | 5,578,877               | 7,217,593             | 77.3%                  | 12.4%p              |
| 강원 | 388,953                 | 713,250               | 54.5%                  | 532,043                 | 830,628               | 64.1%                  | 9.5%p               |
| 충북 | 439,260                 | 781,020               | 56.2%                  | 605,874                 | 914,932               | 66.2%                  | 10.0%p              |
| 충남 | 556,798                 | 1,124,909             | 49.5%                  | 777,740                 | 1,247,389             | 62.3%                  | 12.9%p              |
| 전북 | 451,024                 | 885,194               | 51.0%                  | 575,618                 | 956,822               | 60.2%                  | 9.2%p               |
| 전남 | 418,304                 | 936,938               | 44.6%                  | 568,311                 | 1,007,996             | 56.4%                  | 11.7%p              |
| 경북 | 679,598                 | 1,396,498             | 48.7%                  | 835,888                 | 1,453,609             | 57.5%                  | 8.8%p               |
| 경남 | 931,578                 | 1,616,268             | 57.6%                  | 1,143,014               | 1,728,136             | 66.1%                  | 8.5%p               |
| 제주 | 144,834                 | 307,653               | 47.1%                  | 237,979                 | 386,415               | 61.6%                  | 14.5%p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 ■ 전북

전북 지자체별 취업자 수 대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역시 시단위에서 취업자 수 대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의 비율이 2013년 기준 평균 48.9%로 높았고, 동기간 군단위에서의 비율은 평균 35.2%로 13.7%p의 차이를 보였다. 취업자 수 대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주(59.6%), 군산(58.5%), 익산(56%), 완주(46.6%)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장수(27.9%), 고창(31.9%), 무주(32.1%)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은 군산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주(68.7%), 익산(63.6%), 완주(57.5%)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장수(35.4%), 고창(39%), 부안(4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1] 취업자 수 대비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 (전북 지자체)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2년                   |                       |                      | 10년간<br>건강보험<br>가입률 변화 |
|----|-------------------------|-----------------------|----------------------|-------------------------|-----------------------|----------------------|------------------------|
|    | 건강보험<br>직장<br>가입자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건강보험<br>가입률<br>(A/B) | 건강보험<br>직장<br>가입자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건강보험<br>가입률<br>(A/B) |                        |
| 전북 | 451,024                 | 885,194               | 51.0%                | 575,618                 | 956,822               | 60.2%                | 9.2%p                  |
| 전주 | 175,447                 | 294,562               | 59.6%                | 238,765                 | 347,307               | 68.7%                | 9.2%p                  |
| 군산 | 73,421                  | 125,539               | 58.5%                | 88,925                  | 128,414               | 69.2%                | 10.8%p                 |
| 익산 | 78,280                  | 139,801               | 56.0%                | 90,306                  | 142,101               | 63.6%                | 7.6%p                  |
| 정읍 | 23,889                  | 56,358                | 42.4%                | 29,519                  | 59,509                | 49.6%                | 7.2%p                  |
| 남원 | 17,471                  | 44,003                | 39.7%                | 21,266                  | 45,885                | 46.3%                | 6.6%p                  |
| 김제 | 17,549                  | 47,436                | 37.0%                | 22,271                  | 45,262                | 49.2%                | 12.2%p                 |
| 완주 | 19,678                  | 42,198                | 46.6%                | 29,553                  | 51,394                | 57.5%                | 10.9%p                 |
| 진안 | 4,726                   | 13,983                | 33.8%                | 6,087                   | 14,620                | 41.6%                | 7.8%p                  |
| 무주 | 4,654                   | 14,493                | 32.1%                | 6,262                   | 14,857                | 42.1%                | 10.0%p                 |
| 장수 | 4,039                   | 14,502                | 27.9%                | 5,179                   | 14,634                | 35.4%                | 7.5%p                  |
| 임실 | 5,366                   | 14,878                | 36.1%                | 6,469                   | 15,460                | 41.8%                | 5.8%p                  |
| 순창 | 5,916                   | 15,012                | 39.4%                | 6,756                   | 16,040                | 42.1%                | 2.7%p                  |
| 고창 | 9,996                   | 31,293                | 31.9%                | 12,236                  | 31,386                | 39.0%                | 7.0%p                  |
| 부안 | 10,592                  | 31,135                | 34.0%                | 12,024                  | 29,952                | 40.1%                | 6.1%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 다)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과 같이 생계가 위협을 받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재취업 알선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고용노동부, 2023). 고용보험 가입현황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 2013년, 2023년 고용보험 상용자 피보험자 수(자영업 제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추출한 만 18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도 2013년, 2023년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 ■ 전국

2013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상용자 피보험자 수의 비율은 전국 47.5%로 나타났고,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0.5%, 울산이 54.2%, 대전이 43.9%, 경남이 43.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상용자 피보험자 수의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제주(31.1%), 전남(31.7%), 강원(32.7%), 전북(33.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비율 역시 서울이 93%로 월등히 높았고, 울산이 59.4%, 대전이 54.6%, 경기가 48.7%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지자체(52.8%)와 광역도 지자체(45.3%) 간 평균 비율 차이는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가입률 변화도 광역시 지자체와 광역도 지자체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023년 기준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비중이 낮은 지자체로는 세종이 38.5%, 제주가 40.1%, 광주가 41.7%, 인천이 42.3%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세종시를 제외하고 서울의 비중이 12.5%p나 상승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이 12.4%p, 대전이 10.7%p, 대구가 10.2%p, 충남이 10.1%p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변화량이 낮은 지자체는 경남 4.6%p, 울산 5.2%p, 인천 6.1%p, 경기 6.3%p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013년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 비중이 전국 13위 수준에서 2023년 한 계단 상승한 전국 12위를 기록하였으며, 변화량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2]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전국 광역시도)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고용보험<br>가입률 변화 |
|----|-------------------------|-----------------------|----------------------|-------------------------|-----------------------|----------------------|------------------------|
|    | 고용보험<br>상용자<br>피보험자수(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고용보험<br>가입률<br>(A/B) | 고용보험<br>상용자<br>피보험자수(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고용보험<br>가입률<br>(A/B) |                        |
| 전국 | 11,542,065              | 24,312,305            | 47.5%                | 15,281,692              | 27,652,654            | 55.3%                | 7.8%p                  |
| 서울 | 3,860,858               | 4,793,246             | 80.5%                | 4,641,030               | 4,989,690             | 93.0%                | 12.5%p                 |
| 부산 | 626,539                 | 1,572,260             | 39.8%                | 776,110                 | 1,609,925             | 48.2%                | 8.4%p                  |
| 대구 | 386,193                 | 1,130,863             | 34.2%                | 510,607                 | 1,151,887             | 44.3%                | 10.2%p                 |
| 인천 | 488,228                 | 1,350,913             | 36.1%                | 677,925                 | 1,603,960             | 42.3%                | 6.1%p                  |
| 광주 | 227,895                 | 678,287               | 33.6%                | 317,298                 | 760,014               | 41.7%                | 8.2%p                  |
| 대전 | 310,657                 | 708,406               | 43.9%                | 425,379                 | 779,695               | 54.6%                | 10.7%p                 |
| 울산 | 295,436                 | 545,156               | 54.2%                | 330,298                 | 555,769               | 59.4%                | 5.2%p                  |
| 세종 | 35,682                  | -                     | -                    | 81,220                  | 210,966               | 38.5%                | 38.5%p                 |
| 경기 | 2,443,929               | 5,771,443             | 42.3%                | 3,580,587               | 7,358,507             | 48.7%                | 6.3%p                  |
| 강원 | 233,212                 | 713,250               | 32.7%                | 360,743                 | 845,049               | 42.7%                | 10.0%p                 |
| 충북 | 302,926                 | 781,020               | 38.8%                | 445,927                 | 942,932               | 47.3%                | 8.5%p                  |
| 충남 | 421,322                 | 1,124,909             | 37.5%                | 599,221                 | 1,258,935             | 47.6%                | 10.1%p                 |
| 전북 | 295,510                 | 885,194               | 33.4%                | 412,364                 | 961,120               | 42.9%                | 9.5%p                  |
| 전남 | 297,175                 | 936,938               | 31.7%                | 445,447                 | 1,010,320             | 44.1%                | 12.4%p                 |
| 경북 | 523,547                 | 1,396,498             | 37.5%                | 676,325                 | 1,453,809             | 46.5%                | 9.0%p                  |
| 경남 | 697,145                 | 1,616,268             | 43.1%                | 841,420                 | 1,762,008             | 47.8%                | 4.6%p                  |
| 제주 | 95,811                  | 307,653               | 31.1%                | 159,791                 | 398,068               | 40.1%                | 9.0%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 ■ 전북

전북 지자체별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완주의 비중이 63.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군산 43.5%, 익산 35.4%, 김제 32.5%, 전주 30.9% 등 역시 도심권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비도심권(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의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비율의 평균은 22.8%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장수의 비율은 19%를 나타내며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비율은 완주가 70.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김제(50.4%), 군산(49.2%), 익산(43.3%), 전주(40.3%)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장수가 29%, 고창이 31%, 부안이 32.5%, 순창이 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전북 지자체)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고용보험<br>가입률 변화 |
|----|-------------------------|-----------------------|----------------------|-------------------------|-----------------------|----------------------|------------------------|
|    | 고용보험<br>상용자<br>피보험자수(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고용보험<br>가입률<br>(A/B) | 고용보험<br>상용자<br>피보험자수(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고용보험<br>가입률<br>(A/B) |                        |
| 전북 | 295,510                 | 885,194               | 33.4%                | 412,364                 | 961,120               | 42.9%                | 9.5%p                  |
| 전주 | 91,103                  | 294,562               | 30.9%                | 135,903                 | 336,998               | 40.3%                | 9.4%p                  |
| 군산 | 54,648                  | 125,539               | 43.5%                | 65,421                  | 132,978               | 49.2%                | 5.7%p                  |
| 익산 | 49,425                  | 139,801               | 35.4%                | 63,497                  | 146,650               | 43.3%                | 7.9%p                  |
| 정읍 | 16,278                  | 56,358                | 28.9%                | 22,596                  | 59,734                | 37.8%                | 8.9%p                  |
| 남원 | 11,577                  | 44,003                | 26.3%                | 15,432                  | 43,742                | 35.3%                | 9.0%p                  |
| 김제 | 15,400                  | 47,436                | 32.5%                | 23,900                  | 47,447                | 50.4%                | 17.9%p                 |
| 완주 | 26,644                  | 42,198                | 63.1%                | 40,616                  | 57,610                | 70.5%                | 7.4%p                  |
| 진안 | 3,509                   | 13,983                | 25.1%                | 5,062                   | 14,813                | 34.2%                | 9.1%p                  |
| 무주 | 3,307                   | 14,493                | 22.8%                | 5,173                   | 14,794                | 35.0%                | 12.2%p                 |
| 장수 | 2,752                   | 14,502                | 19.0%                | 4,062                   | 14,017                | 29.0%                | 10.0%p                 |
| 임실 | 4,062                   | 14,878                | 27.3%                | 5,883                   | 14,778                | 39.8%                | 12.5%p                 |
| 순창 | 3,383                   | 15,012                | 22.5%                | 5,166                   | 15,670                | 33.0%                | 10.4%p                 |
| 고창 | 6,779                   | 31,293                | 21.7%                | 9,786                   | 31,530                | 31.0%                | 9.4%p                  |
| 부안 | 6,643                   | 31,135                | 21.3%                | 9,867                   | 30,360                | 32.5%                | 11.2%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

## 라.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앞서 살펴본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직 중 중위소득 150% 이상의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 그리고 주 36시간에서 52시간 이하의 적절한 노동시간을 갖춘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라 정의하고 통계청의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이를 추출하여 지난 10년간 전국 광역시도와 전라북도 각 지자체의 괜찮은 일자리 수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 1) 전국

2013년 기준 상용직이자 중위소득 150% 이상의 소득을 제공하며 주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의 적절한 노동시간을 갖춘 일자리의 비중은 중공업 기업이 밀집한 울산(31.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27.8%), 경기(24.6%), 광주(23.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제주(10.7%), 전남(15.1%), 전북(15.2%)로, 광주를 제외한 호남·제주권에서 낮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36.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울산(32.8%), 서울(29.6%), 경기(27.5%) 순으로 2013년과 비슷하게 울산과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났다. 반면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낮게 나타난 지자체는 제주(14.3%), 강원(15.9%), 전남(16.1%), 전북(16.4%) 순으로 역시 2013년과 마찬가지로 호남·제주권에서 질 좋은 일자리의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괜찮은 일자리 수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혁신기관 등이 이전한 충북이 4.3%p가 상승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제주(3.5%p), 충남(3.4%p), 경기(3%p)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지난 10년간 괜찮은 일자리 수 비중이 2.4%p 감소하여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전국의 순위도 2013년 4위에서 5계단이나 하락한 9위에 머물렀다. 전북과 전남 모두 괜찮은 일자리 수 비중 변화가 하위권(각 14위, 15위)에 위치한 가운데 광주마저 괜찮은 일자리 수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라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24] 관철은 일자리 수 (전국 광역시도)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관철은<br>일자리 수<br>비중 변화 |
|----|------------------|-----------------------|--------------------------|------------------|-----------------------|--------------------------|-------------------------------|
|    | 관철은<br>일자리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관철은<br>일자리 수<br>비중 (A/B) | 관철은<br>일자리 수 (A) | 만 18세 이상<br>취업자 수 (B) | 관철은<br>일자리 수<br>비중 (A/B) |                               |
| 전국 | 5,330,390        | 24,312,305            | 21.9%                    | 6,651,473        | 27,652,654            | 24.1%                    | 2.1%p                         |
| 서울 | 1,332,272        | 4,793,246             | 27.8%                    | 1,478,826        | 4,989,690             | 29.6%                    | 1.8%p                         |
| 부산 | 291,096          | 1,572,260             | 18.5%                    | 336,466          | 1,609,925             | 20.9%                    | 2.4%p                         |
| 대구 | 193,540          | 1,130,863             | 17.1%                    | 230,409          | 1,151,887             | 20.0%                    | 2.9%p                         |
| 인천 | 279,325          | 1,350,913             | 20.7%                    | 372,264          | 1,603,960             | 23.2%                    | 2.5%p                         |
| 광주 | 158,837          | 678,287               | 23.4%                    | 159,517          | 760,014               | 21.0%                    | -2.4%p                        |
| 대전 | 161,715          | 708,406               | 22.8%                    | 188,892          | 779,695               | 24.2%                    | 1.4%p                         |
| 울산 | 169,808          | 545,156               | 31.1%                    | 182,227          | 555,769               | 32.8%                    | 1.6%p                         |
| 세종 | -                | -                     | -                        | 77,769           | 210,966               | 36.9%                    | 36.9%p                        |
| 경기 | 1,418,154        | 5,771,443             | 24.6%                    | 2,027,154        | 7,358,507             | 27.5%                    | 3.0%p                         |
| 강원 | 115,530          | 713,250               | 16.2%                    | 133,956          | 845,049               | 15.9%                    | -0.3%p                        |
| 충북 | 136,099          | 781,020               | 17.4%                    | 204,742          | 942,932               | 21.7%                    | 4.3%p                         |
| 충남 | 205,068          | 1,124,909             | 18.2%                    | 272,699          | 1,258,935             | 21.7%                    | 3.4%p                         |
| 전북 | 134,507          | 885,194               | 15.2%                    | 157,182          | 961,120               | 16.4%                    | 1.2%p                         |
| 전남 | 141,429          | 936,938               | 15.1%                    | 162,602          | 1,010,320             | 16.1%                    | 1.0%p                         |
| 경북 | 217,721          | 1,396,498             | 15.6%                    | 245,055          | 1,453,809             | 16.9%                    | 1.3%p                         |
| 경남 | 342,245          | 1,616,268             | 21.2%                    | 364,950          | 1,762,008             | 20.7%                    | -0.5%p                        |
| 제주 | 33,044           | 307,653               | 10.7%                    | 56,762           | 398,068               | 14.3%                    | 3.5%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 2) 전북

전북 지자체별 관참은 일자리 수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관참은 일자리 수는 시단위 지자체의 평균이 14.2%로 군단위 지자체의 평균인 7.5% 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심권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023년 군단위 지자체에서의 관참은 일자리 수 비중의 감소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다. 군단위 지자체의 관참은 일자리 수 비중 평균은 2013년 수치에 비해 1.3%p 감소한 6.2%로 나타났고, 시단위 지자체의 관참은 일자리 수 비중 평균은 0.1% 증가한 14.3%로 나타났다. 전주와 임실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관참은 일자리 수 비중이 감소하였고, 특히 무주, 진안, 고창의 관참은 일자리 수 비중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표 4-25] 관참은 일자리 수 (전북 지자체)

(단위 : 명)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10년간<br>관참은<br>일자리 수<br>비중 변화 |
|----|---------------|--------------------|--------------------|---------------|--------------------|--------------------|-------------------------------|
|    | 관참은 일자리 수 (A) |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 (B) | 관참은 일자리 수 비중 (A/B) | 관참은 일자리 수 (A) | 만 18세 이상 취업자 수 (B) | 관참은 일자리 수 비중 (A/B) |                               |
| 전북 | 134,507       | 885,194            | 15.2%              | 157,182       | 961,120            | 16.4%              | 1.2%p                         |
| 전주 | 57,330        | 294,562            | 19.5%              | 79,775        | 336,998            | 23.7%              | 4.2%p                         |
| 군산 | 24,843        | 125,539            | 19.8%              | 25,519        | 132,978            | 19.2%              | -0.6%p                        |
| 익산 | 22,821        | 139,801            | 16.3%              | 23,411        | 146,650            | 16.0%              | -0.4%p                        |
| 정읍 | 6,470         | 56,358             | 11.5%              | 6,157         | 59,734             | 10.3%              | -1.2%p                        |
| 남원 | 4,047         | 44,003             | 9.2%               | 3,627         | 43,742             | 8.3%               | -0.9%p                        |
| 김제 | 4,101         | 47,436             | 8.6%               | 3,972         | 47,447             | 8.4%               | -0.3%p                        |
| 완주 | 5,626         | 42,198             | 13.3%              | 7,208         | 57,610             | 12.5%              | -0.8%p                        |
| 진안 | 929           | 13,983             | 6.6%               | 446           | 14,813             | 3.0%               | -3.6%p                        |
| 무주 | 1,175         | 14,493             | 8.1%               | 653           | 14,794             | 4.4%               | -3.7%p                        |
| 장수 | 661           | 14,502             | 4.6%               | 557           | 14,017             | 4.0%               | -0.6%p                        |
| 임실 | 834           | 14,878             | 5.6%               | 1,104         | 14,778             | 7.5%               | 1.9%p                         |
| 순창 | 955           | 15,012             | 6.4%               | 927           | 15,670             | 5.9%               | -0.5%p                        |
| 고창 | 2,969         | 31,293             | 9.5%               | 2,199         | 31,530             | 7.0%               | -2.5%p                        |
| 부안 | 1,745         | 31,135             | 5.6%               | 1,629         | 30,360             | 5.4%               | -0.2%p                        |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 마. 소결

본 절에서는 전라북도의 일자리 관련 지표 현황을 일자리 정책, 일자리 양, 일자리 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내용을 정리하며, 지난 9~10년간 지자체별 성과를 비교해보기 위해 각 지표별 순위 변동 수준을 알아보았다.

먼저 전국 지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정책의 지자체별 의지에서 2014년에 비해 2023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자체는 전남으로, 지역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무려 10계단이 상승하였다. 일자리 노력 수준(실적 달성률)을 가장 많이 끌어 올린 지자체는 서울과 제주로, 각 13계단씩 상승하였다.

일자리 양은 일자리 규모, 일자리 증감, 고용참여(고용률)를 구하여 살펴보고, 일자리 규모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자체는 전남으로, 2013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 기준 전국 10위를 기록하여 6계단 상승하였다.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감 순위 변동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지자체는 광주로, 2013년 15위에서 2021년 10계단이 상승한 5위로 랭크되었다. 고용참여(고용률)의 전국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자체는 강원으로, 2013년 14위에서 2023년 8위로 6계단 상승하였다.

일자리 질은 고용안정성, 소득수준, 적절한 노동시간, 사회안전망, 괜찮은 일자리로 나누어 살펴보고, 고용안정성은 부산, 충북, 제주가 각 한 계단씩 상승하였고, 소득수준의 경우 제주가 2013년 전국 최하위인 16위에서 2023년 8위로 무려 8계단의 상승을 이루었다. 적절한 노동시간의 경우 충남이 2013년 15위에서 2023년 11위로 4계단이 상승했고, 취업자 수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전남이 2013년 전국 최하위인 16위에서 2022년 10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취업자 수 대비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제주만 2013년 전국 15위에서 2022년 전국 14위로 한 계단 상승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전남이 2013년 15위에서 2023년 11위로 4계단 상승하였다. 괜찮은 일자리 수의 경우 충북이 2013년 10위에서 2023년 7위로 3계단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전북의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자체별 의지는 전주, 군산, 진안이 모두 2014년에 비해 2023년에 8계단이 상승하였고, 일자리 노력 수준(실적 달성률)의 경우 남원이 2013년에 비해 2022년 6계단의 상승을 이뤄냈으며, 일자리 규모의 경우 임실이 2013년에 비해 2021년 8계단의 상승을 이뤄냈다. 일자리 증감 순위 변동의 경우 역시 임실이 2013년 전북 13위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전북 1위로 급상승하였다.

---

고용참여(고용률)의 완주가 2013년 8위에서 2023년 3위로 5계단이 상승하였고,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고용안정성의 경우 임실이 2013년 14위에서 2023년 8위로 6계단이 상승하였다. 소득 수준의 경우 부안이 2013년 전북 8위에서 2023년 3위로 5계단이 상승하였고, 적절한 노동시간의 경우 진안, 무주가 각 4단계씩 상승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의 경우 김제, 무주가 2단계씩 상승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의 경우 무주가 4단계 상승하였다. 고용보험의 경우 김제가 2단계 상승하였고, 관철은 일자리 비율의 경우 임실이 4단계 상승을 보였다.

전북의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양, 일자리 질의 수준은 전국 대비 하위권에 속하며, 거의 모든 지표에서 지난 연도와 비교했을 때 전국 순위가 하락하였다. 전북 지자체의 경우도 도심권보다 비도심권 군단위의 지자체에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비도심권 지역의 일자리 정책에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지역일자리종합지수 부문지수별 세부지표 결과

### 가. 지역일자리 부문지수 및 지표별 가중치 결과

#### 1) 조사대상 집단

지역 일자리 종합지수를 산출에 필요한 지수별·지표별 가중치를 평가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 별 쌍대비교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 지역일자리 전문가, 담당 공무원, 일자리사업 운영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총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개 부문별 구성지표에 따른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쌍대비교는 Saaty 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였다.

#### 2) 가중치 산정 결과

가중치 산정 결과 평가자들은 지역일 자리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자리 질, 일자리 양의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정책의 하위 지표인 정책의지와 정책노력 중에서는 정책의지가 정책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양 지수의 하위지표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일자리창출력을 나타내는 일자리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고용률, 일자리 창출잠재력인 일자리 증감률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질 지수의 하위지표에 대한 평가는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임금수준, 노동시간, 안전망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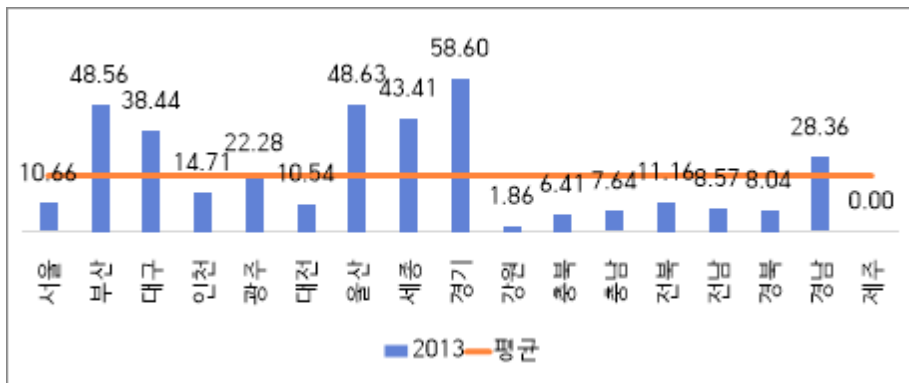
[표 4-26] 가중치 평가 결과

| 구분           | 가중치          | C.I   | C.R   |
|--------------|--------------|-------|-------|
| <b>일자리정책</b> | <b>0.530</b> | -     | -     |
| 정책의지         | 0.586        | 0.060 | 0.067 |
| 정책노력         | 0.414        |       |       |
| <b>일자리 양</b> | <b>0.110</b> | -     | -     |
| 일자리 규모       | 0.457        | 0.007 | 0.012 |
| 일자리 증감       | 0.267        |       |       |
| 고용참여         | 0.276        |       |       |
| <b>일자리 질</b> | <b>0.360</b> | -     | -     |
| 안정성          | 0.482        | 0.024 | 0.057 |
| 임금수준         | 0.297        |       |       |
| 노동시간         | 0.141        |       |       |
| 안전망          | 0.081        |       |       |

## 나. 일자리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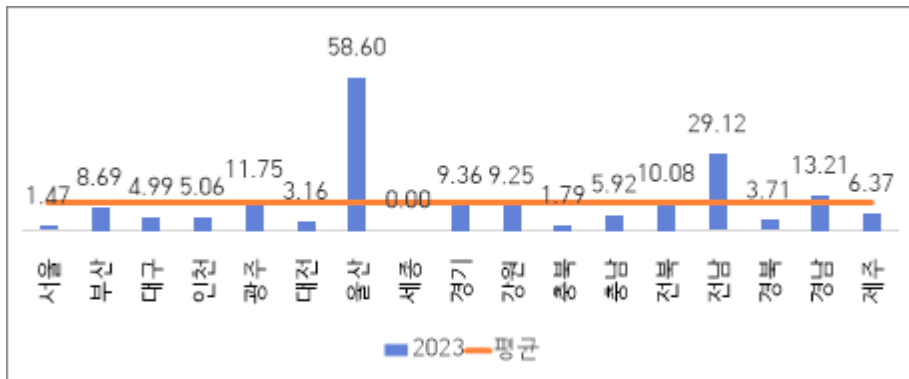
### 1) 정책의지

한 지역의 일자리예산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지역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2013년 시도별 정책의지 지표를 비교하면 경기, 울산, 부산 순이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경남으로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2013년 시도별 정책의지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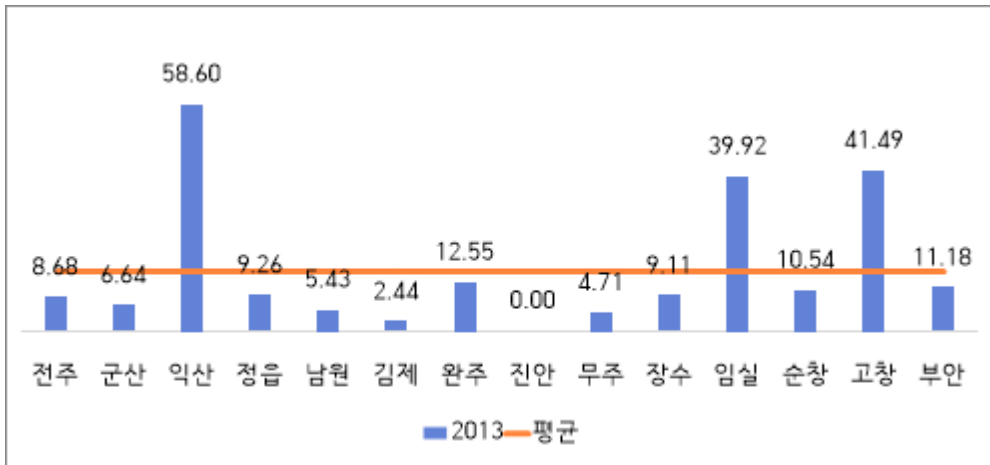
2023년 시도별 일자리 정책의지 지표를 살펴보면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남과 경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예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광주, 울산, 전남, 경남 4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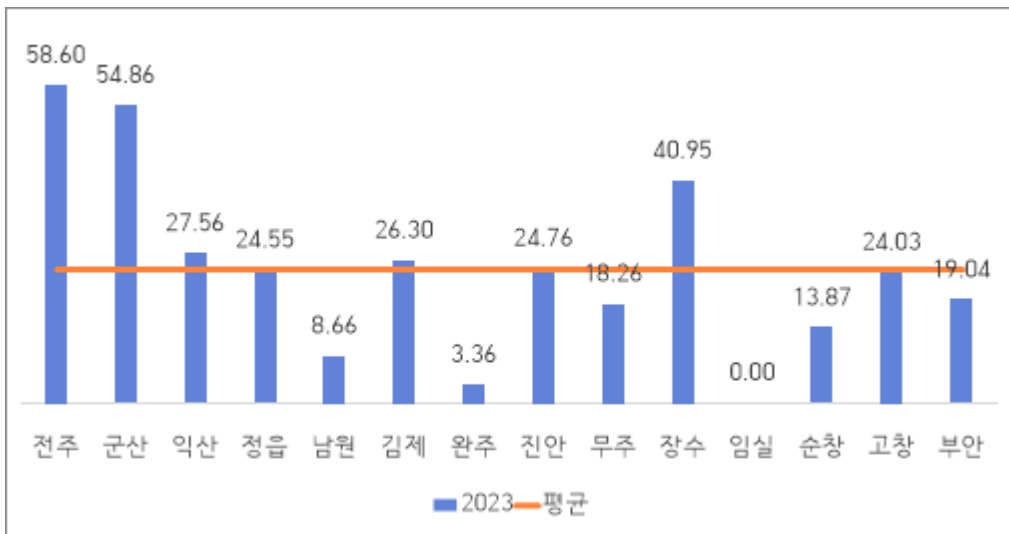
[그림 4-2] 2023년 시도별 정책의지 지표 비교

2013년 전북지역 시군별 일자리 정책의지 지표를 살펴보면 익산, 고창, 임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개 지역만이 도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 중 일자리 정책의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이며, 군산, 장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진안, 장수 등 14개 시군 중에서 6개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2013년 전북 시군별 정책의지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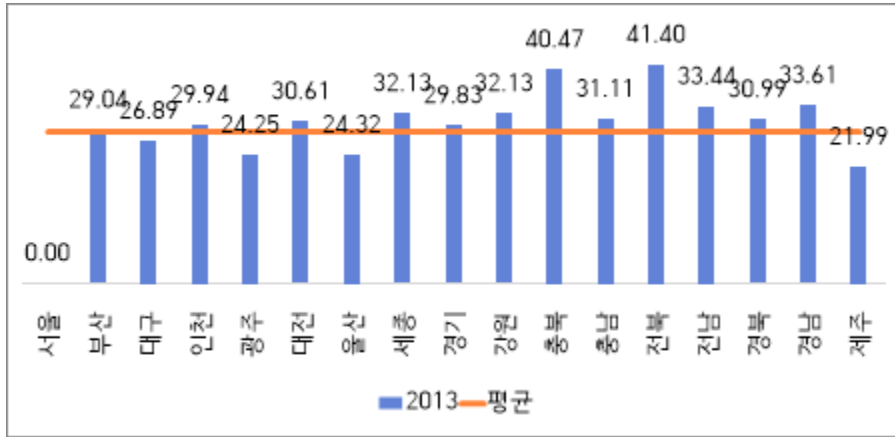
[그림 4-4] 2023년 전북 시군별 정책의지 지표 비교

## 2) 정책노력

지역 일자리정책의 정량적 목표 달성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정책노력 지표로 측정하였다.

먼저 시도별 일자리 정책노력 지표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전북, 충북,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제주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3년에는 경기, 전남, 제주 순으로 정책노력 지표가 높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2013년 시도별 정책노력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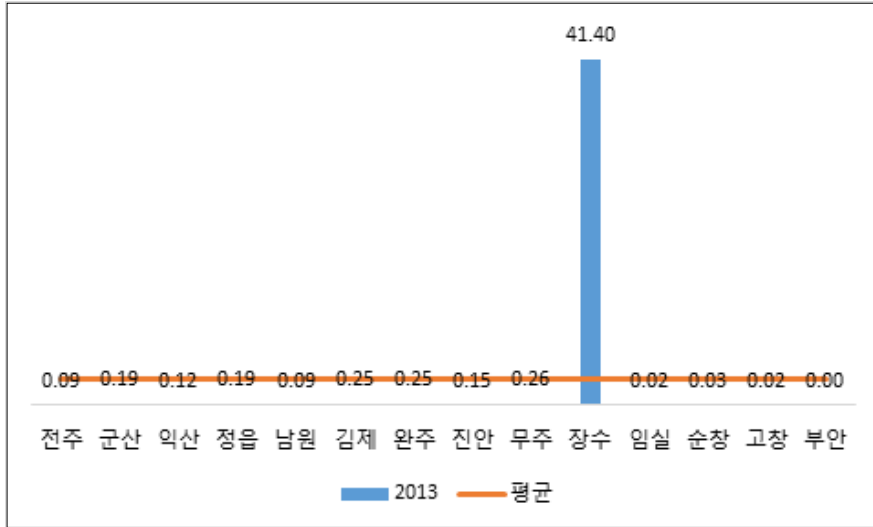


[그림 4-6] 2023년 시도별 정책노력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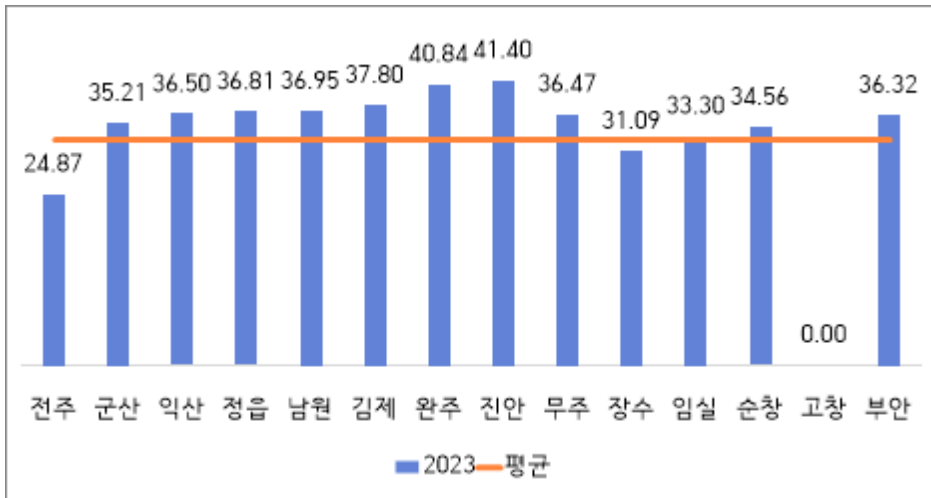


2013년 전북지역 14개 시군별 정책노력 지표를 살펴보면 장수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14개 시군 대부분 정책노력 지표가 높아졌는데, 진안, 완주, 김제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은 전주, 장수, 고창을 제외한 1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2013년 전북 시군별 정책노력 지표 비교



[그림 4-8] 2023년 전북 시군별 정책노력 지표 비교

## 다. 일자리 양 지수

### 1) 일자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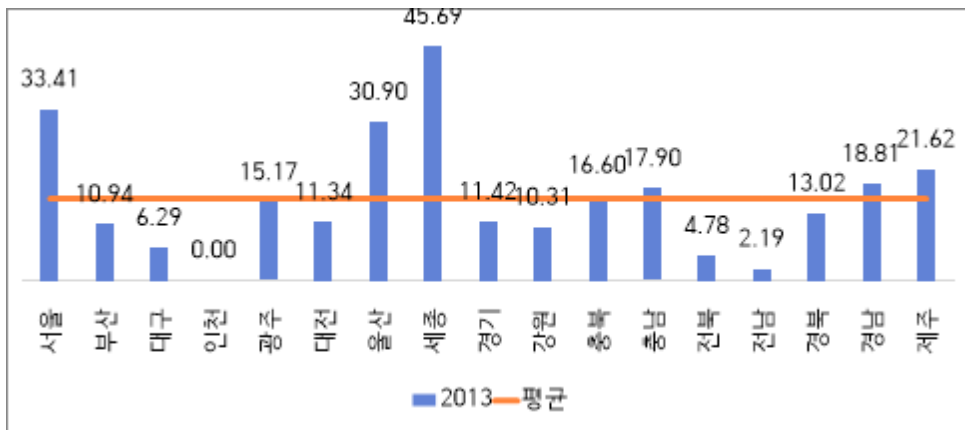
시도별 일자리 규모 지표를 비교해보면 2013년에는 세종이 가장 높고, 서울, 울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서울지역의 일자리 규모 지표가 가장 높고, 충남, 충북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등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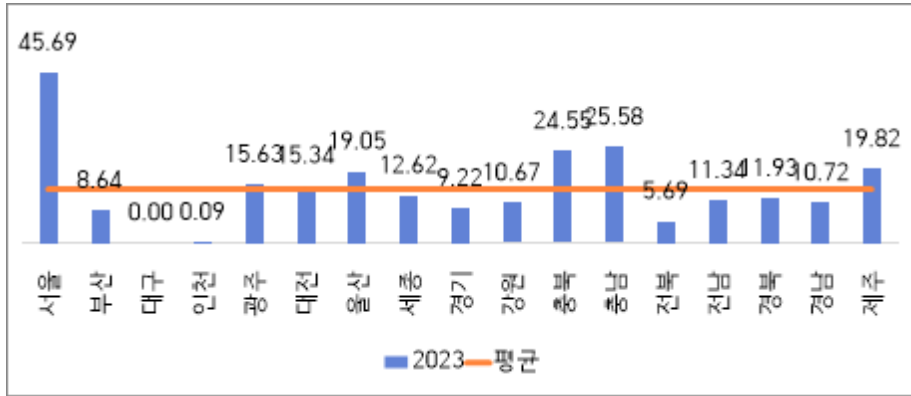
전북지역은 일자리 규모 지표가 2013년, 2023년 모두 전국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시군별 일자리 규모 지표를 비교해보면 2013년에는 완주군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운데, 군산과 익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역 평균치보다 높은 시군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부안 등 6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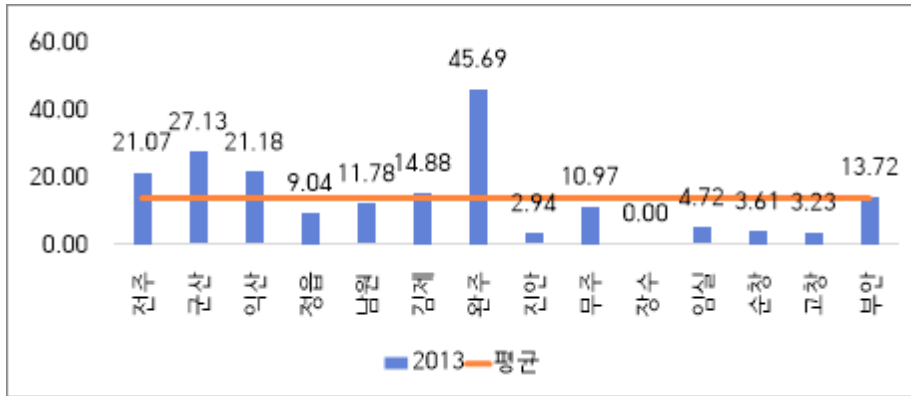
2023년 역시 완주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임실, 김제 순이며, 이들 3개 지역과 무주군의 경우 전북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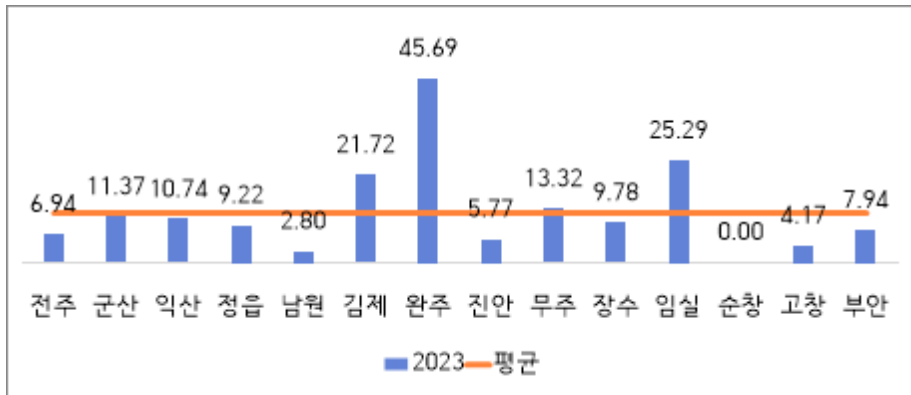
[그림 4-9] 2013년 시도별 일자리 규모 지표 비교



[그림 4-10] 2023년 시도별 일자리 규모 지표 비교



[그림 4-11] 201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규모 지표 비교



[그림 4-12] 202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규모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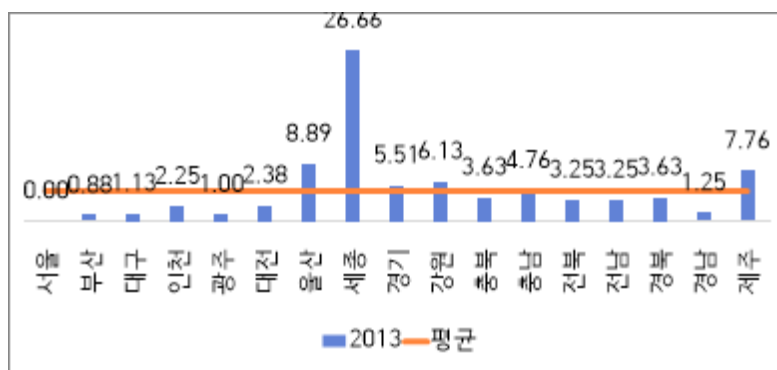
## 2) 일자리 증감

2013년 시도별 일자리 증감 지표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가장 높고, 울산과 제주가 각각 그 뒤를 잇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제주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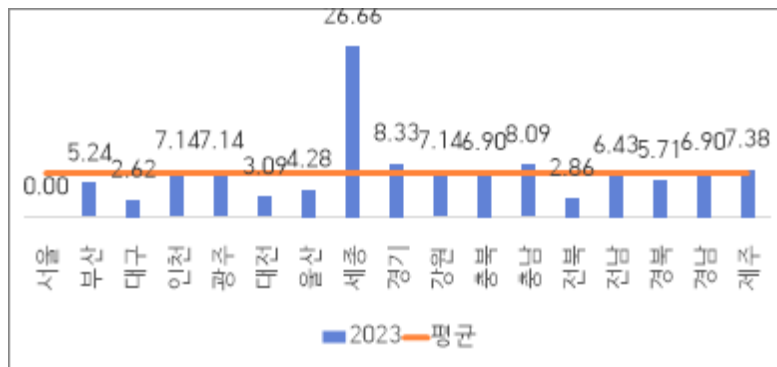
2023년 일자리 증감 지표는 세종, 경기, 충남 순을 나타냈으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을 보였다.

한편 전북지역 시군 일자리 증감 지표는 완주와 진안지역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주,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부안 등 6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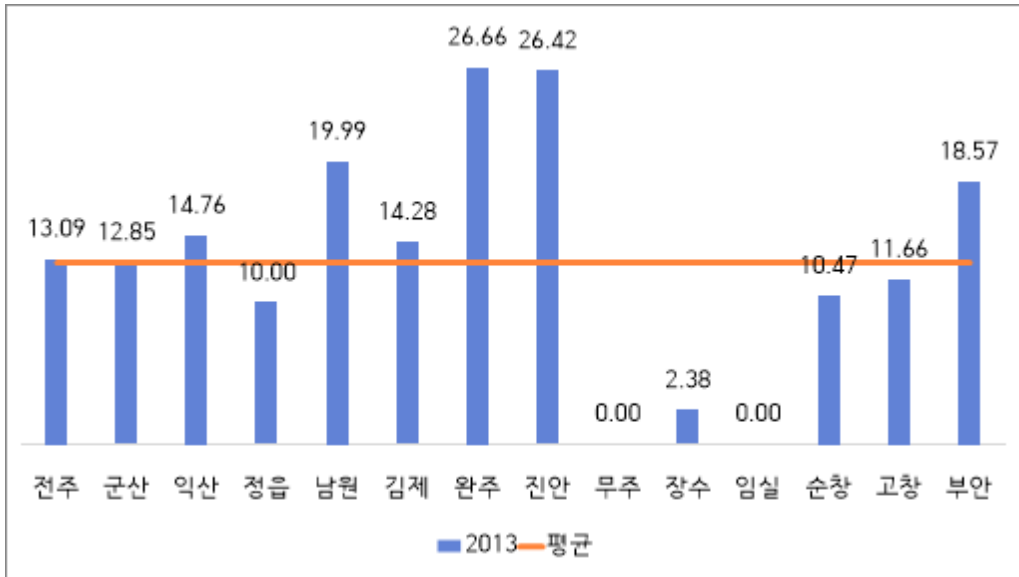
2023년에는 임실, 완주, 진안, 정읍, 부안 순으로 나타났고, 이 지역들의 경우 지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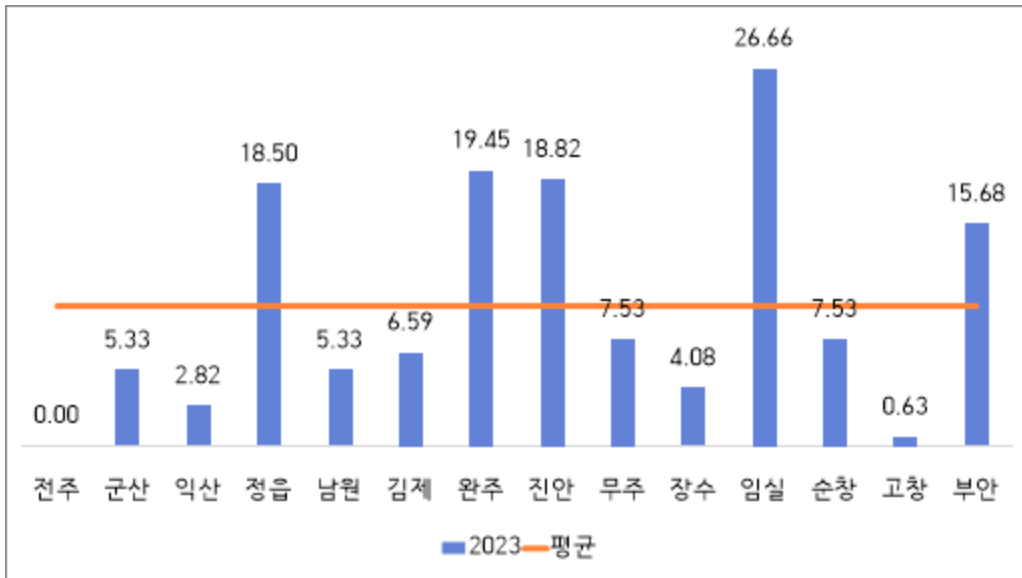
[그림 4-13] 2013년 시도별 일자리 증감 지표 비교



[그림 4-14] 2023년 시도별 일자리 증감 지표 비교



[그림 4-15] 201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증감 지표 비교



[그림 4-16] 202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증감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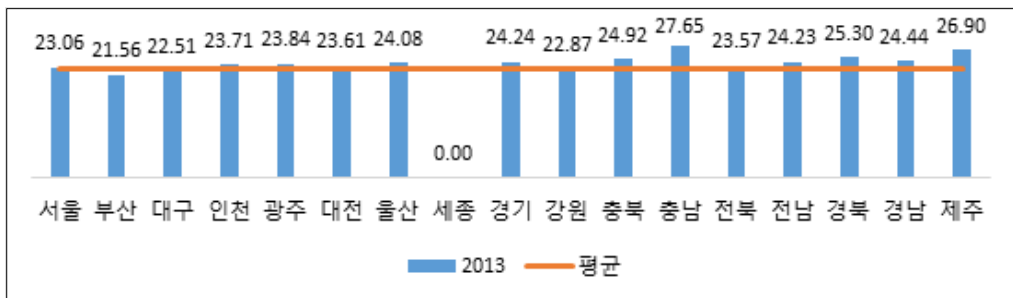
### 3) 일자리 참여

2013년 시도별 일자리 참여 지표를 비교해보면 충남지역이 가장 높고, 제주, 경북의 순으로 나타났고, 부산, 대구,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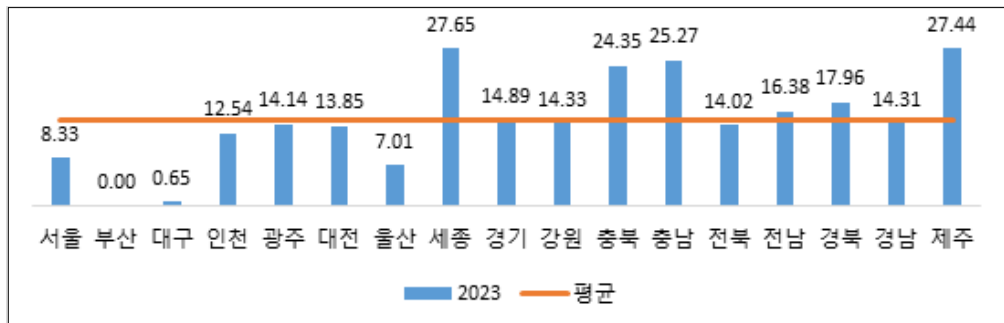
2023년 시도별 일자리 참여 지표는 세종, 제주, 충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지역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전북 시군별 일자리 참여 지표를 비교해보면 2013년에는 장수군이 가장 높고, 무주, 남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남원, 김제, 무주, 장수, 부안으로 주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참여 지표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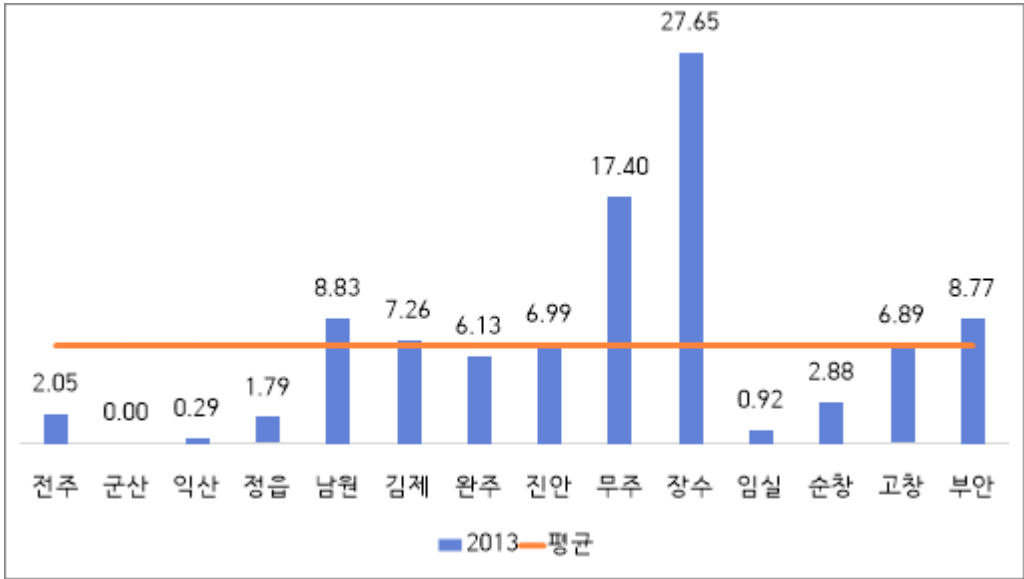
2023년 일자리 참여 지표가 높은 지역은 장수, 무주, 완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평균치보다 높은 지역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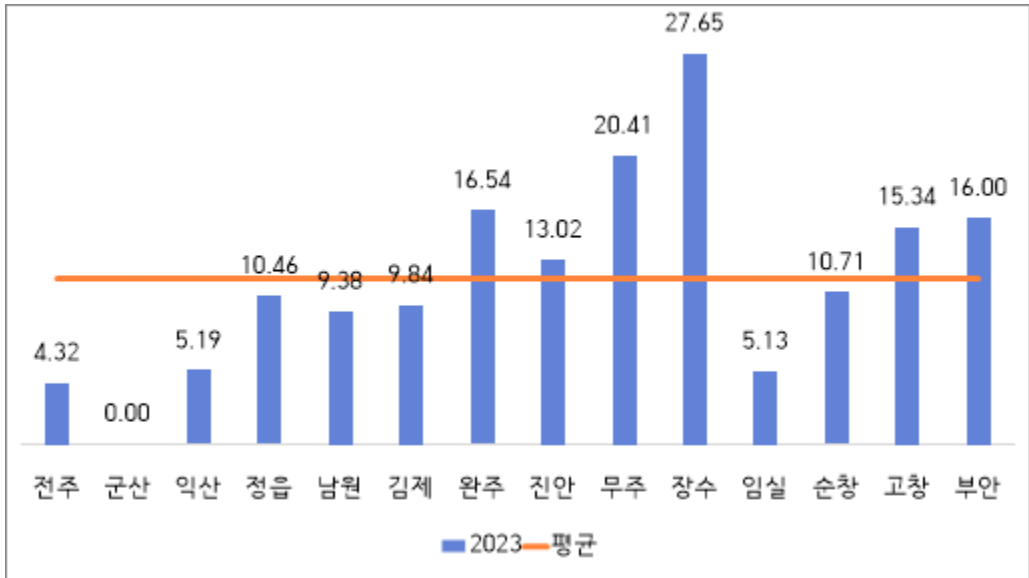
[그림 4-17] 2013년 시도별 일자리 참여 지표 비교



[그림 4-18] 2023년 시도별 일자리 참여 지표 비교



[그림 4-19] 201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참여 지표 비교



[그림 4-20] 202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참여 지표 비교

---

## 라. 일자리 질 지표

### 1) 일자리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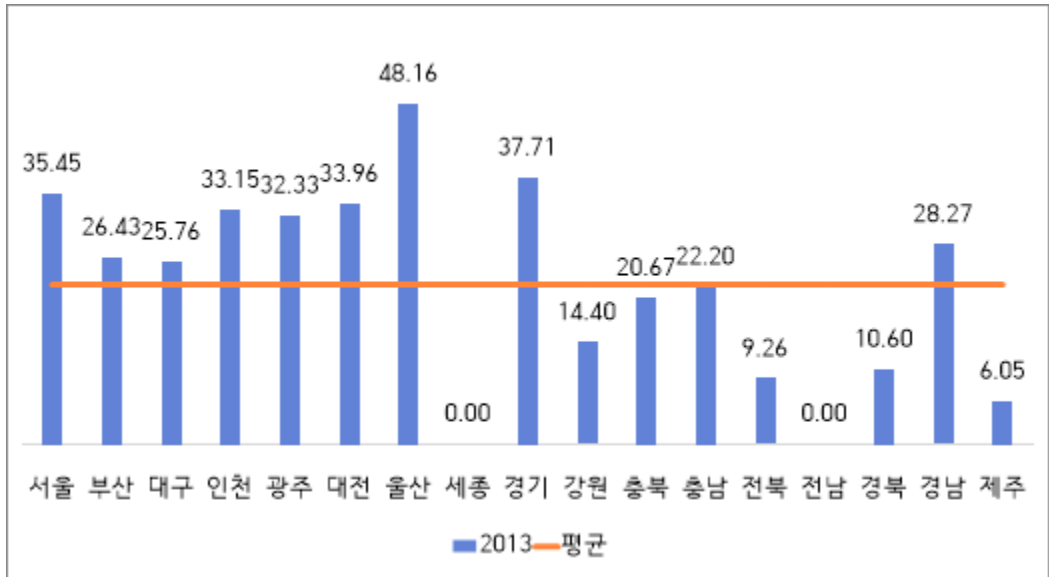
2013년 시도별 일자리 안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울산, 경기, 서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일자리 안정성 지표는 세종, 울산,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주로 대도시권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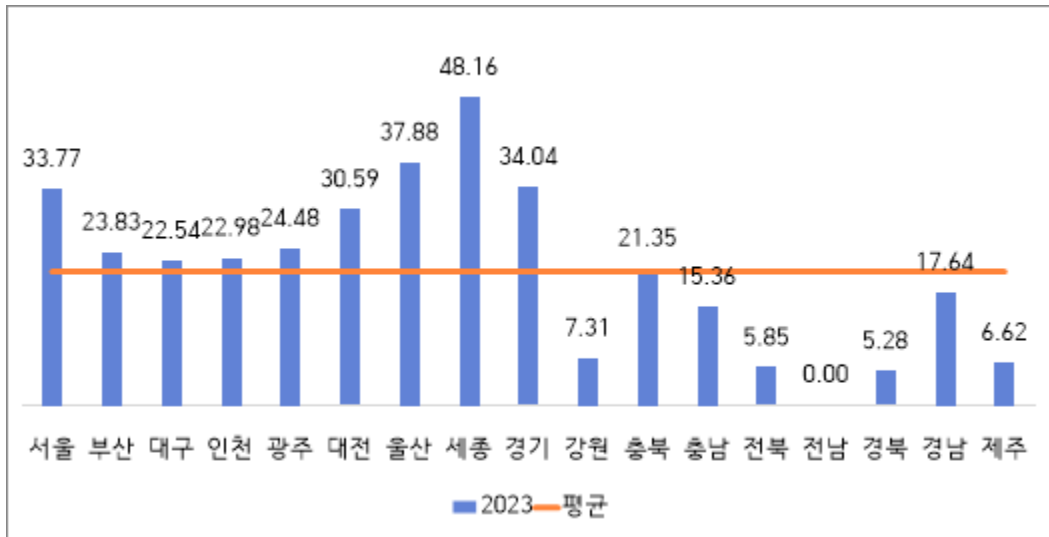
전북 시군별 일자리 안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군산, 익산, 전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5개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시군 일자리 안정성 지표는 전주가 가장 높고, 군산, 익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지역으로 일자리 안정성 지표는 농촌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는 관공서, 산업단지 및 기업의 분포도가 높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13년에 비해 일자리안정성 지표가 상승한 전주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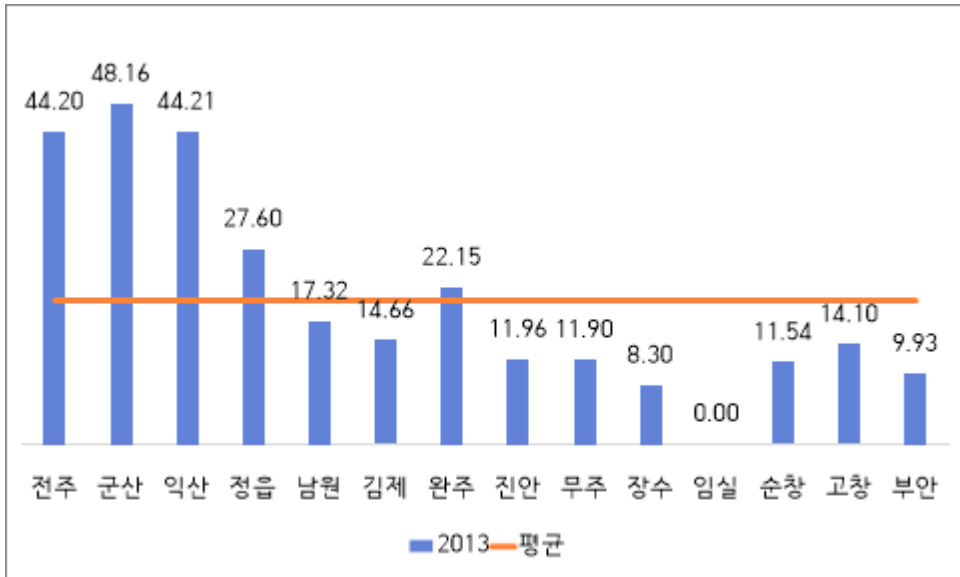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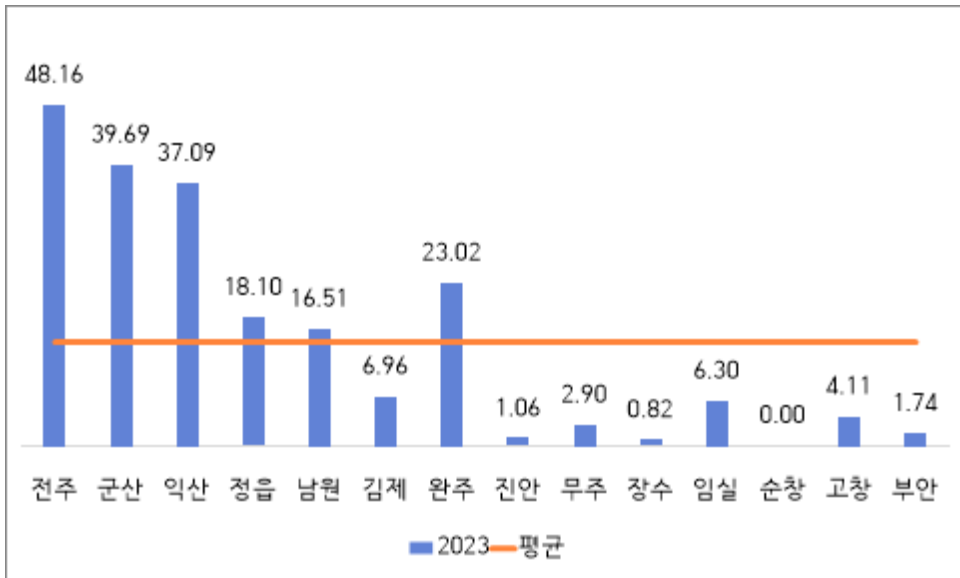
[그림 4-21] 2013년 시도별 일자리 안정성 지표 비교



[그림 4-22] 2023년 시도별 일자리 안정성 지표 비교



[그림 4-23] 201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안정성 지표 비교



[그림 4-24] 2023년 전북 시군별 일자리 안정성 지표 비교

## 2) 임금보상

2013년 임금보상 지표를 비교해보면 전남, 경북, 충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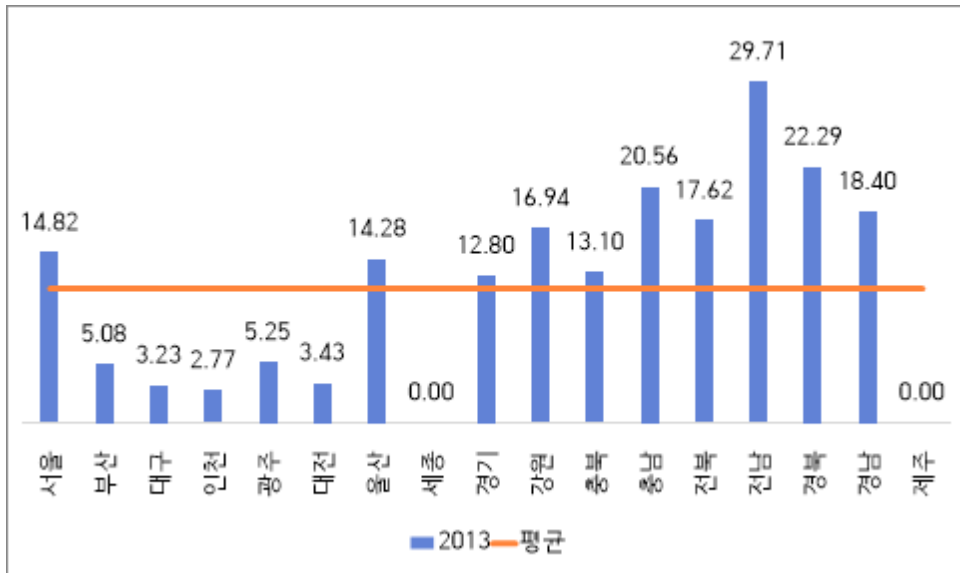
2023년에는 세종의 지표가 가장 높고, 전남, 충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나타났다.

임금보상 지표는 주로 도시권보다는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의 임금보상 지표가 2013년에 비해 2023년에는 감소한 것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이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북 지역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23년에는 큰 폭으로 임금보상 지표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지역 산업·고용위기(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대우 군산공장 철수, 넥솔론 부도 등)의 여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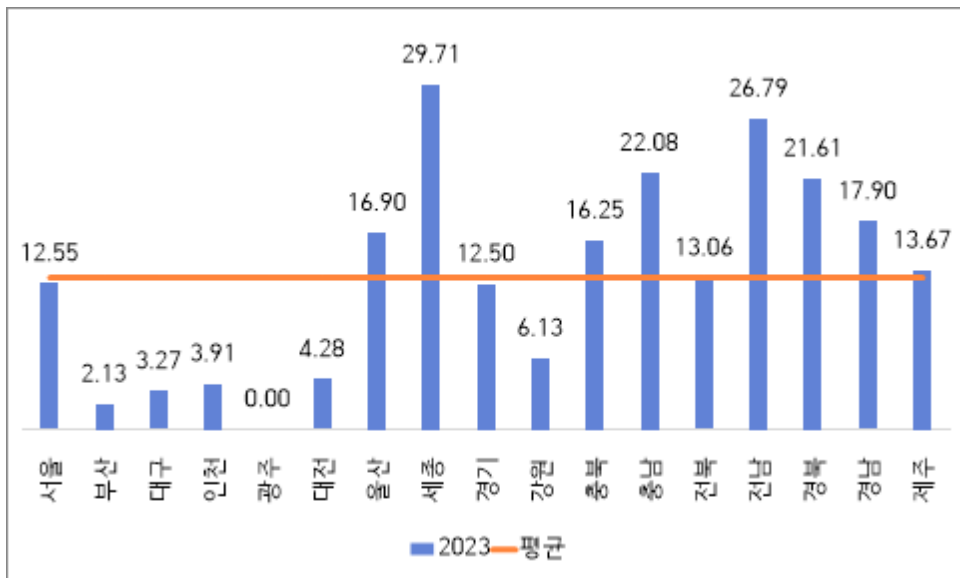
임금보상 지표를 전북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2013년에는 임실, 순창, 고창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지역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순창지역이 가장 높고, 고창, 부안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김제,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지역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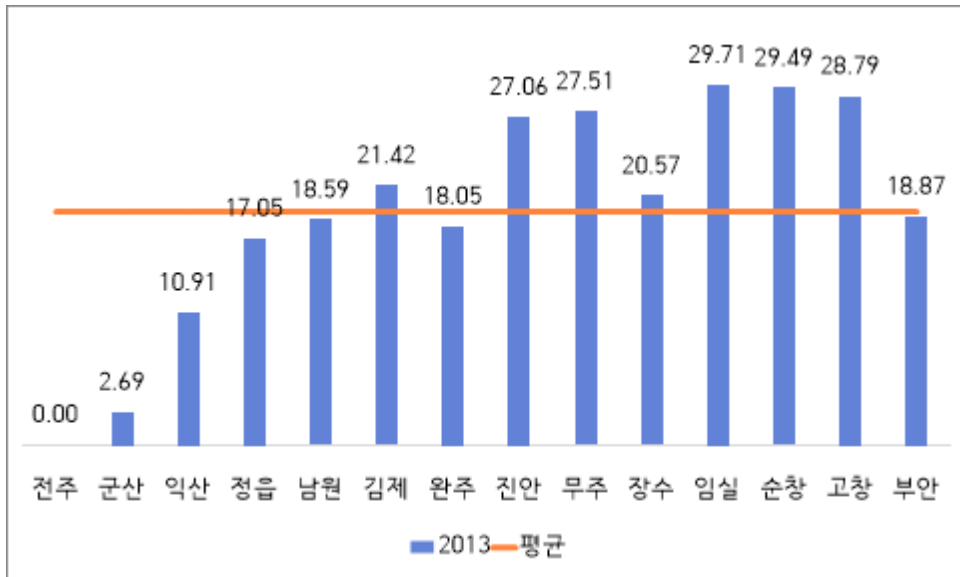
임금보상 지표는 전국적인 경향과 비슷하게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주와 장수지역의 경우 임금보상 지표가 2013년에 비해 2023년에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특화작목(천마, 오미자, 사과 등)의 부진의 영향일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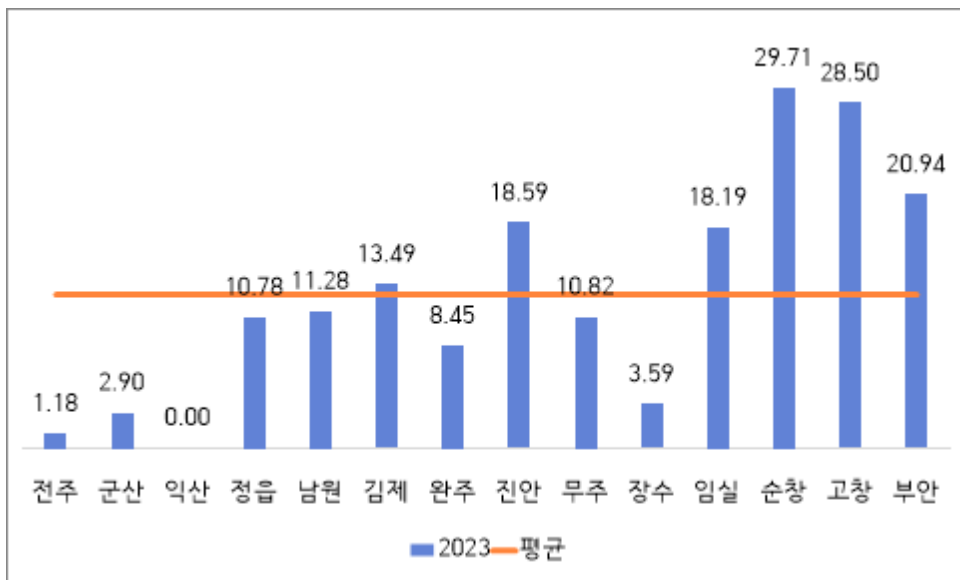
[그림 4-25] 2013년 시도별 임금보상 지표 비교



[그림 4-26] 2023년 시도별 임금보상 지표 비교



[그림 4-27] 2013년 전북 시군별 임금보상 지표 비교



[그림 4-28] 2023년 전북 시군별 임금보상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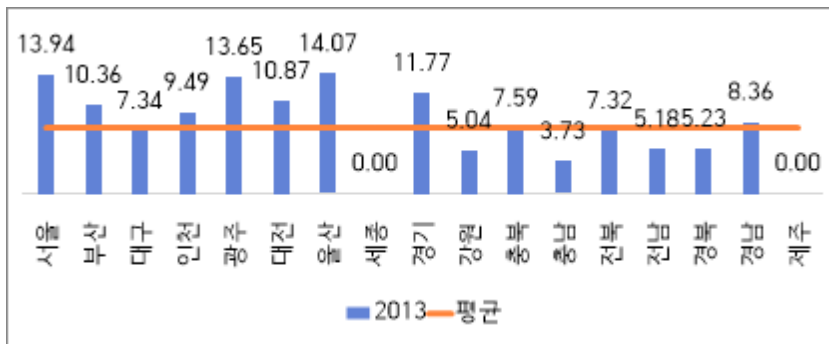
### 3) 적절한 노동시간

2013년 적절한 노동시간 지표를 비교해보면 울산이 가장 높고, 서울,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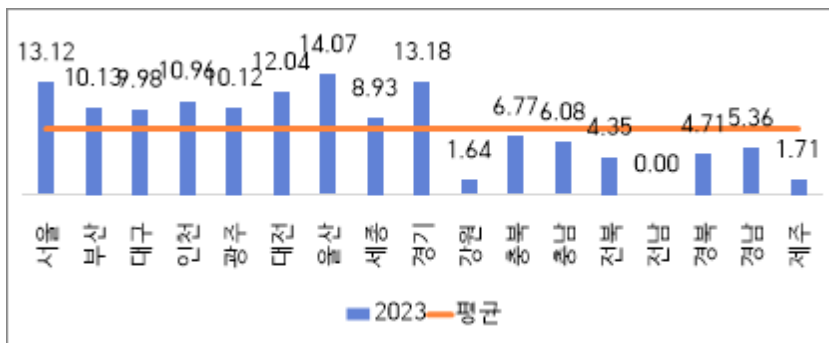
2023년은 울산, 경기, 서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역으로 광역대도시가 주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안정성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도시의 경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어 고용안정성이 높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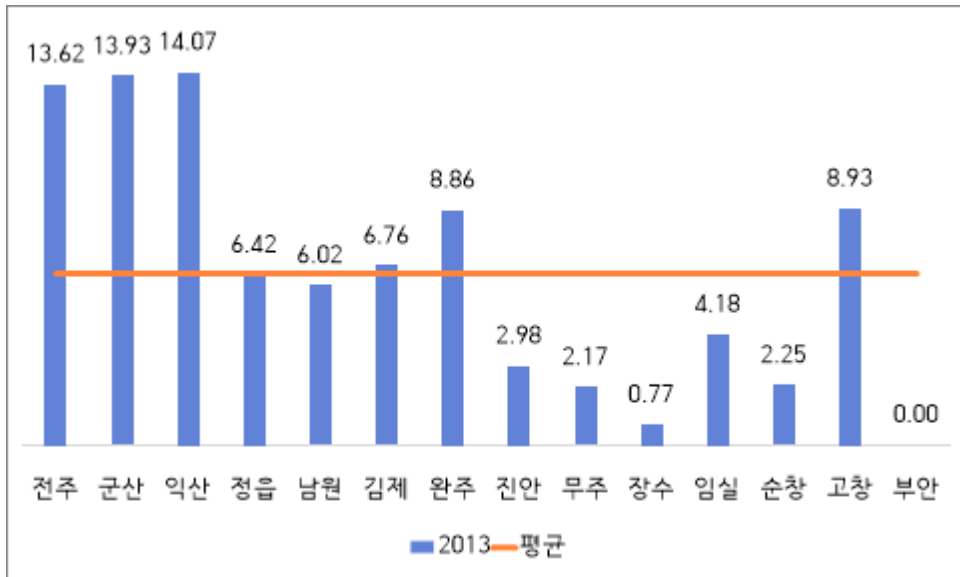
한편 세종시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23년 노동시간 지표가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행정수도의 이전(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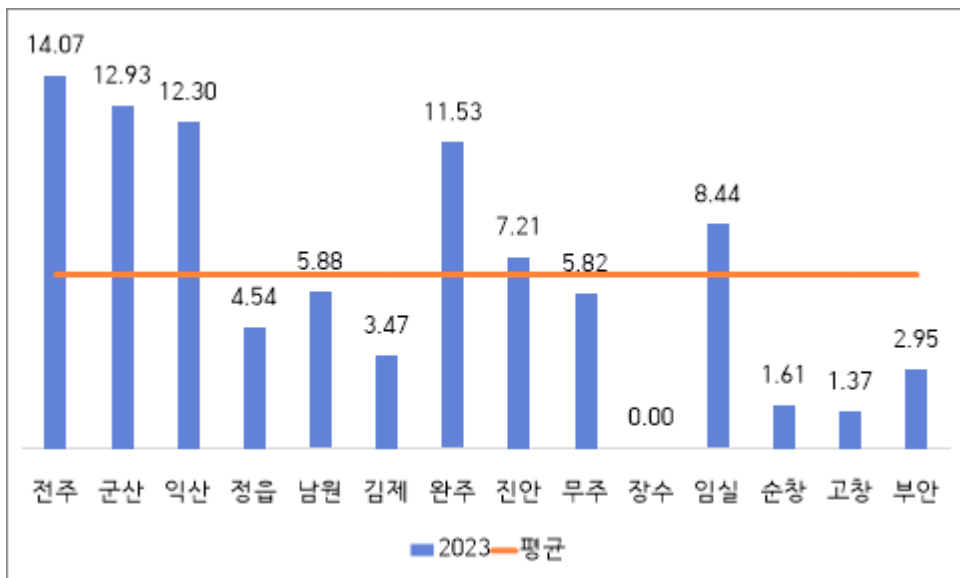
[그림 4-29] 2013년 시도별 노동시간 지표 비교



[그림 4-30] 2023년 시도별 노동시간 지표 비교



[그림 4-31] 2013년 전북 시군별 노동시간 지표 비교



[그림 4-32] 2023년 전북 시군별 노동시간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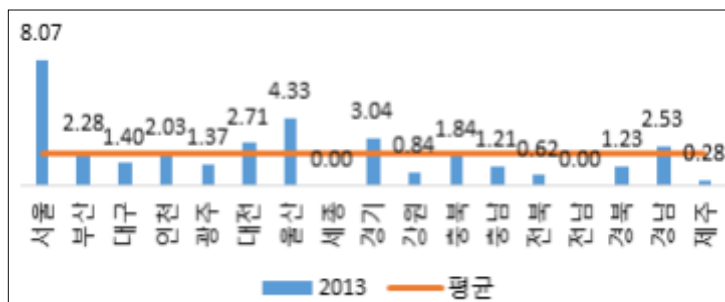
#### 4) 사회적 안전망

2013년 시도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울산,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도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 역시 2013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가장 높고 울산, 대전, 경기, 부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지역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지역의 사회적 안전망 수준은 2013년 전남, 제주에 이어 하위권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국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전북지역 시군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를 살펴보면 2013년에 지표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진안이고, 그 다음으로 익산, 정읍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진안 등 5곳만 해당된다.

2022년 사회적 안전망 지표는 완주가 가장 높고 군산, 전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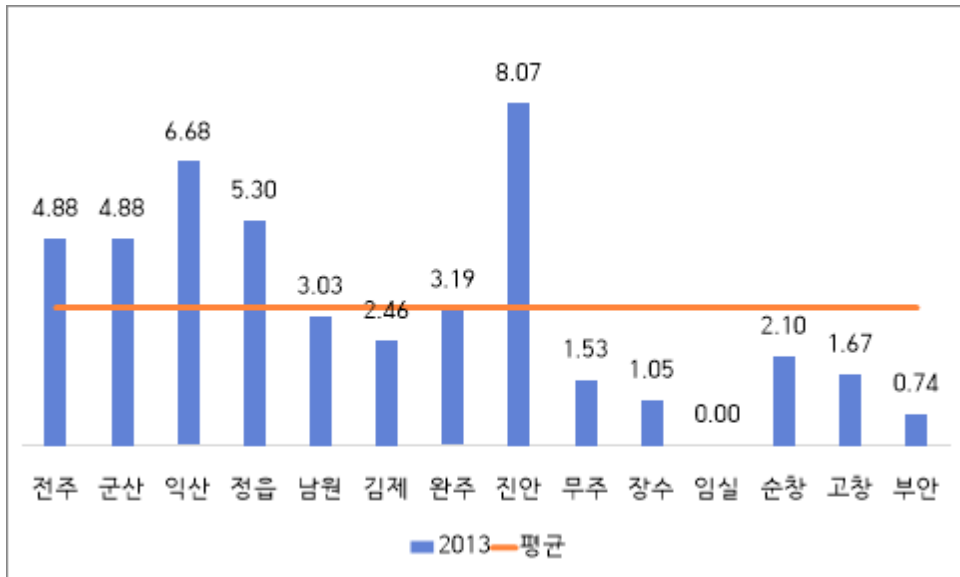


[그림 4-33] 2013년 시도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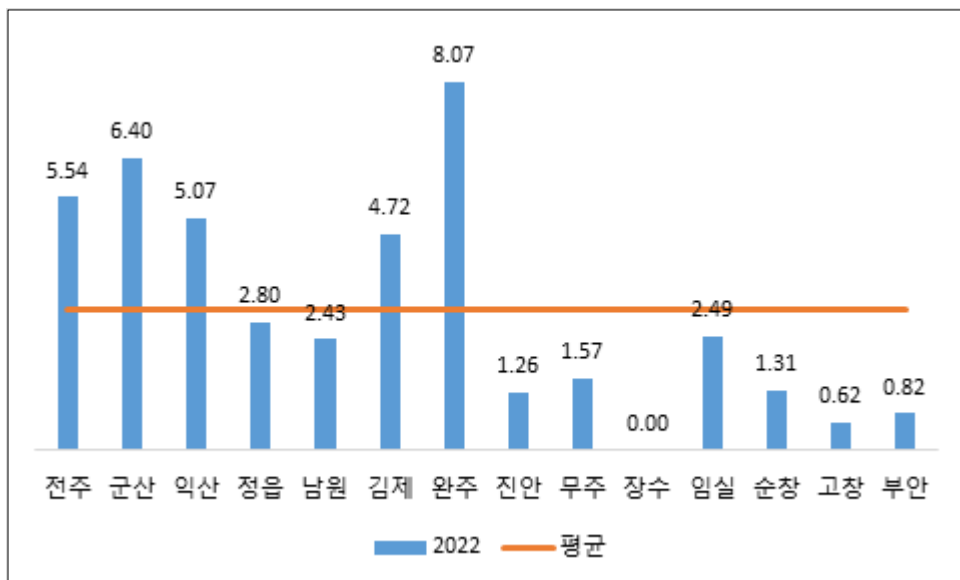


[그림 4-34] 2022년 시도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 비교





[그림 4-35] 2013년 전북 시군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 비교



[그림 4-36] 2022년 전북 시군별 사회적 안전망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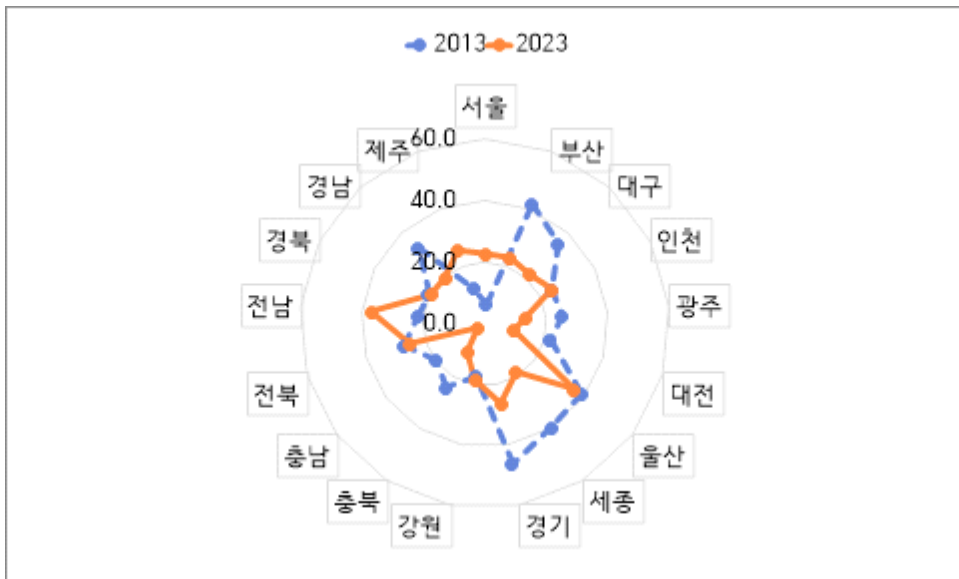
### 3. 지역일자리종합지수 분석결과

#### 가. 일자리 정책지수

시도별 일자리 정책지수를 살펴보면 2013년 정책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이며, 부산, 세종의 순서로 나타났고, 2023년 정책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며, 울산, 경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책지수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충북, 전남, 제주지역으로 서울은 2013년 17위에서 2023년 8위로 상승, 전남은 동기간 11위에서 1위로 상승, 제주는 16위에서 5위로 상승한 반면 충북은 2013년 8위에서 2023년 15위로 하락하였다.

전북의 일자리 정책지수는 2013년 27.9에서 2023년 25.6으로 하락하였으나 전국 순위는 오히려 7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다.



[그림 4-37] 시도별 일자리 정책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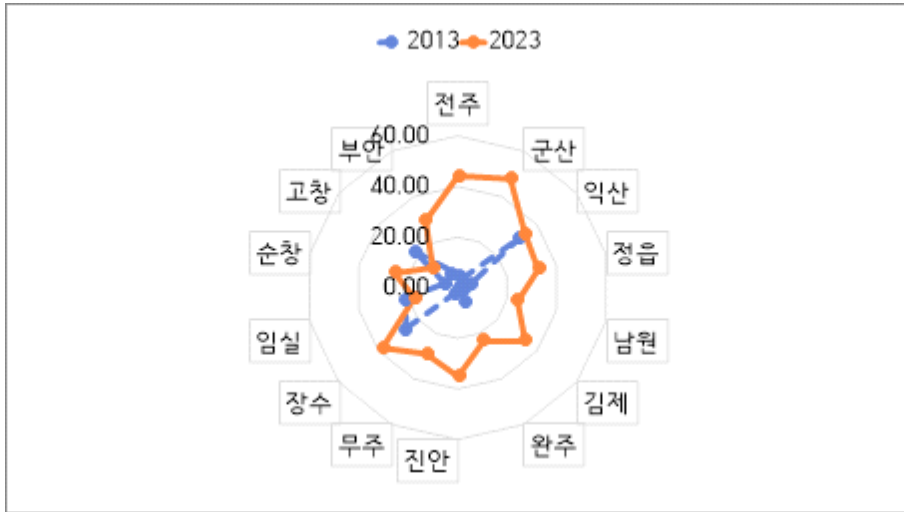
[표 4-27] 시도별 일자리 정책지수 변화

| 구분 | 2013년 | 순위 | 2023년 | 순위 |
|----|-------|----|-------|----|
| 서울 | 5.6   | 17 | 22.2  | 8  |
| 부산 | 41.1  | 2  | 22.4  | 7  |
| 대구 | 34.6  | 5  | 21.1  | 9  |
| 인천 | 23.7  | 10 | 24.1  | 6  |
| 광주 | 24.7  | 9  | 12.8  | 14 |
| 대전 | 21.8  | 12 | 9.6   | 16 |
| 울산 | 38.7  | 4  | 36.0  | 2  |
| 세종 | 40.0  | 3  | 19.1  | 12 |
| 경기 | 46.9  | 1  | 26.9  | 3  |
| 강원 | 18.0  | 15 | 19.1  | 12 |
| 충북 | 24.8  | 8  | 11.3  | 15 |
| 충남 | 20.5  | 14 | 3.1   | 17 |
| 전북 | 27.9  | 7  | 25.6  | 4  |
| 전남 | 22.3  | 11 | 37.3  | 1  |
| 경북 | 20.7  | 13 | 19.9  | 10 |
| 경남 | 32.8  | 6  | 19.5  | 11 |
| 제주 | 11.7  | 16 | 25.0  | 5  |

전북 시군별 일자리 정책지수를 비교해보면 2013년에 비해 2023년에는 도내 시군 대부분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일자리 정책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 장수, 고창 순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군산의 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주, 장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책지수 순위 변동이 높은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 지역인데, 전주, 군산, 김제, 진안의 경우는 순위가 개선된 반면 익산, 완주, 임실, 고창 지역은 퇴보하였다.



[그림 4-38] 전북 시군별 일자리 정책지수 비교

[표 4-28] 전북 시군별 일자리 정책지수 변화

| 구분 | 2013년 | 순위 | 2023년 | 순위 |
|----|-------|----|-------|----|
| 전주 | 4.65  | 9  | 44.24 | 2  |
| 군산 | 3.62  | 10 | 47.74 | 1  |
| 익산 | 31.12 | 1  | 33.95 | 6  |
| 정읍 | 5.01  | 8  | 32.52 | 7  |
| 남원 | 2.93  | 11 | 24.17 | 11 |
| 김제 | 1.42  | 13 | 33.97 | 5  |
| 완주 | 6.78  | 5  | 23.42 | 12 |
| 진안 | 0.08  | 14 | 35.07 | 4  |
| 무주 | 2.63  | 12 | 29.01 | 9  |
| 장수 | 26.77 | 2  | 38.18 | 3  |
| 임실 | 21.17 | 4  | 17.65 | 13 |
| 순창 | 5.60  | 7  | 25.67 | 10 |
| 고창 | 22.00 | 3  | 12.73 | 14 |
| 부안 | 5.93  | 6  | 29.34 | 8  |

## 나. 일자리 양 지수

시도별 일자리 양 지수를 살펴보면 2013년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는 지역은 세종이며, 울산,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2023년에도 일자리 양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 충북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양 지수 순위 변동이 큰 지역은 광주, 울산, 전남, 경남지역으로 광주는 2013년 4.4에서 4.1로 감소하였지만 전국 순위는 10위에서 6위로 개선되었고 전남의 경우는 지수와 순위 모두 개선되어 2013년 15위에서 2023년 8위를 기록하였다. 울산의 경우는 2013년 7.0에서 2023년 3.3으로 순위는 2위에서 13위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경남의 경우는 4.9에서 3.5로 지수와 순위(7위에서 11위) 모두 하락하였다.

전북의 경우 일자리 양 지수가 2013년 3.5에서 2023년 2.5로 하락하였지만 전국 순위 변동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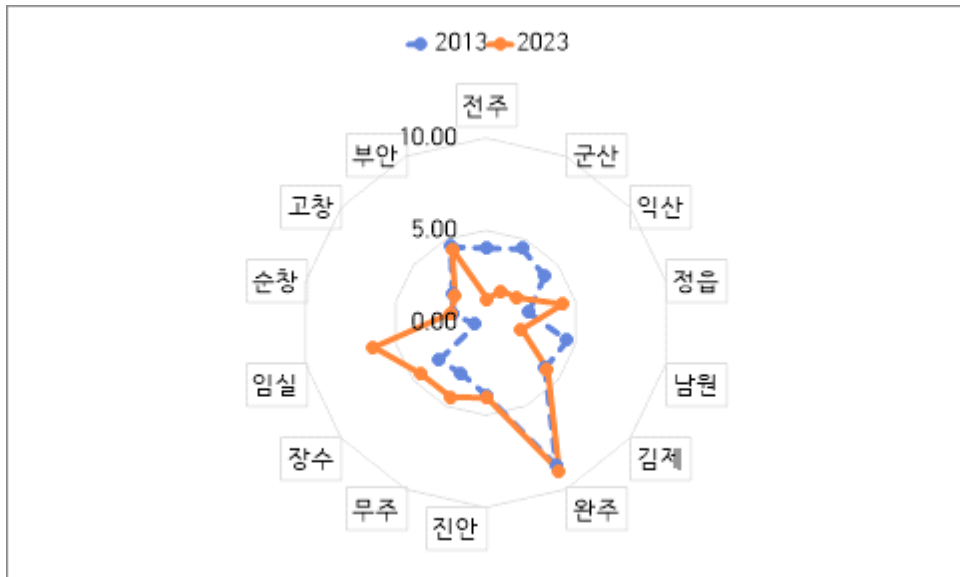
[그림 4-39] 시도별 일자리 양 지수 비교

[표 4-29] 시도별 일자리 양 지수 비교

| 구분 | 2013년 | 순위 | 2023년 | 순위 |
|----|-------|----|-------|----|
| 서울 | 6.2   | 3  | 5.9   | 5  |
| 부산 | 3.7   | 13 | 1.5   | 16 |
| 대구 | 3.3   | 15 | 0.4   | 17 |
| 인천 | 2.9   | 17 | 2.2   | 15 |
| 광주 | 4.4   | 10 | 4.1   | 6  |
| 대전 | 4.1   | 12 | 3.6   | 9  |
| 울산 | 7.0   | 2  | 3.3   | 13 |
| 세종 | 8.0   | 1  | 7.4   | 1  |
| 경기 | 4.5   | 9  | 3.6   | 9  |
| 강원 | 4.3   | 11 | 3.5   | 11 |
| 충북 | 5.0   | 6  | 6.1   | 3  |
| 충남 | 5.5   | 5  | 6.5   | 2  |
| 전북 | 3.5   | 14 | 2.5   | 14 |
| 전남 | 3.3   | 15 | 3.8   | 8  |
| 경북 | 4.6   | 8  | 3.9   | 7  |
| 경남 | 4.9   | 7  | 3.5   | 11 |
| 제주 | 6.2   | 3  | 6.0   | 4  |

전북지역 시군별 일자리 양 지수를 비교해보면 2013년에 가장 높은 지역은 완주이고, 부안, 남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완주, 임실, 장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양 지수 순위 변동이 큰 지역은 군산, 남원, 임실 지역이며, 군산과 남원은 각각 4위에서 13위로, 3위에서 12위로 하락하였고, 임실은 14위에서 2위로 큰 폭 개선되었다.



[그림 4-40] 전북 시군별 일자리 양 지수 비교

[표 4-30] 전북 시군별 일자리 양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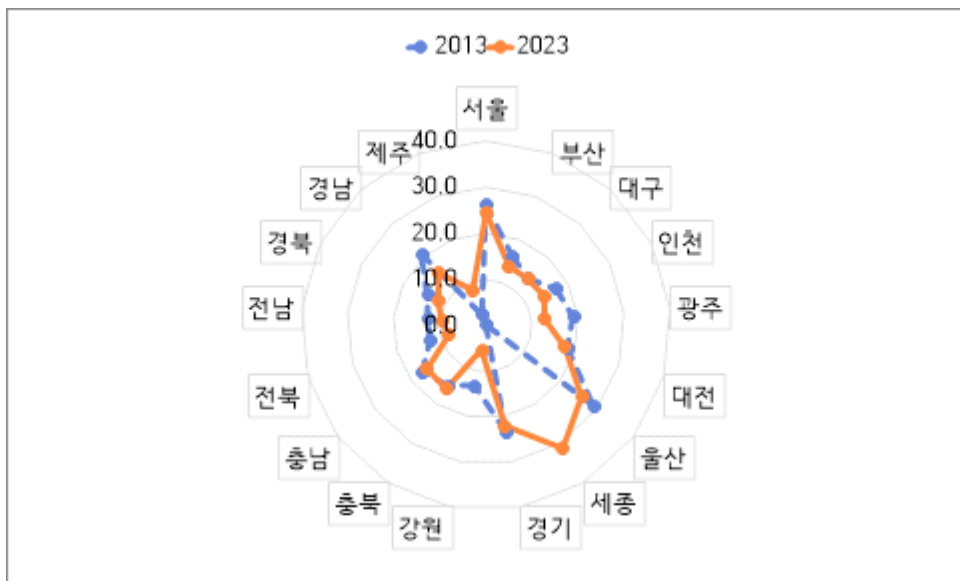
| 구분 | 2013년 | 순위 | 2023년 | 순위 |
|----|-------|----|-------|----|
| 전주 | 3.98  | 8  | 1.24  | 14 |
| 군산 | 4.40  | 4  | 1.84  | 13 |
| 익산 | 3.99  | 7  | 2.06  | 10 |
| 정읍 | 2.29  | 12 | 4.20  | 6  |
| 남원 | 4.47  | 3  | 1.93  | 12 |
| 김제 | 4.01  | 5  | 4.20  | 7  |
| 완주 | 8.63  | 1  | 8.98  | 1  |
| 진안 | 4.00  | 6  | 4.14  | 8  |
| 무주 | 3.12  | 10 | 4.54  | 4  |
| 장수 | 3.30  | 9  | 4.57  | 3  |
| 임실 | 0.62  | 14 | 6.28  | 2  |
| 순창 | 1.87  | 13 | 2.01  | 11 |
| 고창 | 2.40  | 11 | 2.22  | 9  |
| 부안 | 4.52  | 2  | 4.36  | 5  |

## 다. 일자리 질 지수

시도별 일자리 질 지수를 살펴보면 2013년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서울, 경기지역의 순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세종의 일자리 질 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울산,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질 지수 순위 변동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2013년 전국 17위에서 2023년 1위를 기록하였으며, 광주 2013년 5위에서 2023년 12위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일자리 질 지수는 12.5에 8.4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순위는 15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1] 시도별 일자리 질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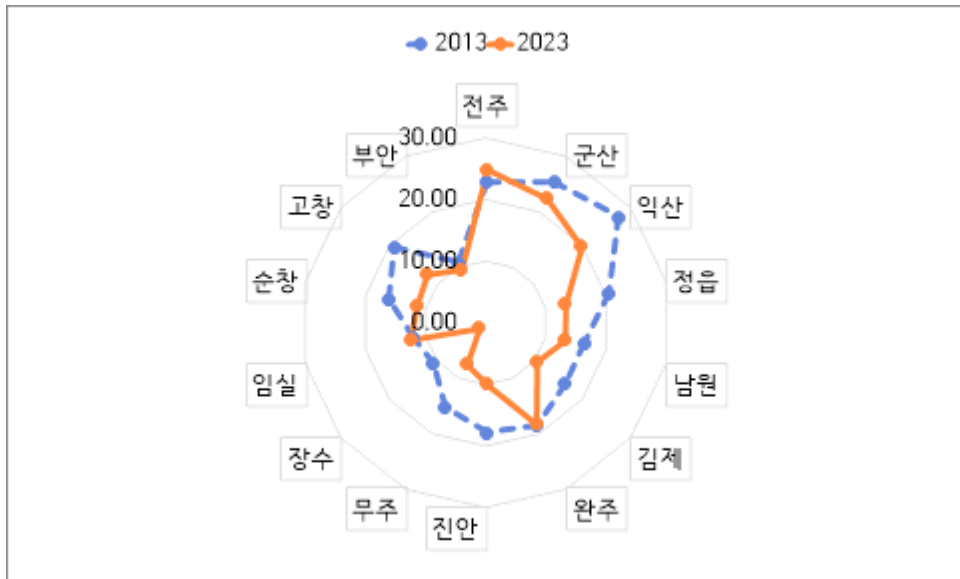
[표 4-31] 시도별 일자리 질 지수 변화

| 구분 | 2013년 | 순위 | 2023년 | 순위 |
|----|-------|----|-------|----|
| 서울 | 26.0  | 2  | 24.3  | 3  |
| 부산 | 15.9  | 9  | 13.6  | 10 |
| 대구 | 13.6  | 12 | 13.3  | 11 |
| 인천 | 17.1  | 8  | 14.0  | 9  |
| 광주 | 18.9  | 5  | 12.7  | 12 |
| 대전 | 18.3  | 6  | 17.7  | 5  |
| 울산 | 29.1  | 1  | 25.9  | 2  |
| 세종 | 0.0   | 17 | 31.6  | 1  |
| 경기 | 23.5  | 3  | 22.3  | 4  |
| 강원 | 13.4  | 13 | 5.5   | 17 |
| 충북 | 15.6  | 10 | 16.4  | 6  |
| 충남 | 17.2  | 7  | 16.0  | 7  |
| 전북 | 12.5  | 15 | 8.4   | 15 |
| 전남 | 12.6  | 14 | 9.7   | 14 |
| 경북 | 14.2  | 11 | 11.6  | 13 |
| 경남 | 20.7  | 4  | 15.1  | 8  |
| 제주 | 2.3   | 16 | 7.9   | 16 |

전북 시군별 일자리 질 지수는 2013년에는 익산시가 가장 높고 군산, 전주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전주가 가장 높고 군산, 익산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일자리 질 지수 순위 변동이 큰 지역은 남원, 임실로 남원은 10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고, 임실은 12위에서 7위로 상승하였다.

한편 일자리 질 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전주와 임실이고 일자리 질 지수가 급격히 악화된 지역은 진안, 무주, 장수로 나타났다.

일자리 질 지수는 산업단지가 주로 입지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지역이 높은 수준이고 산업단지 등 혁신인프라가 부족한 진안, 무주, 장수지역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42] 전북 시군별 일자리 질 지수 비교

[표 4-32] 전북 시군별 일자리 질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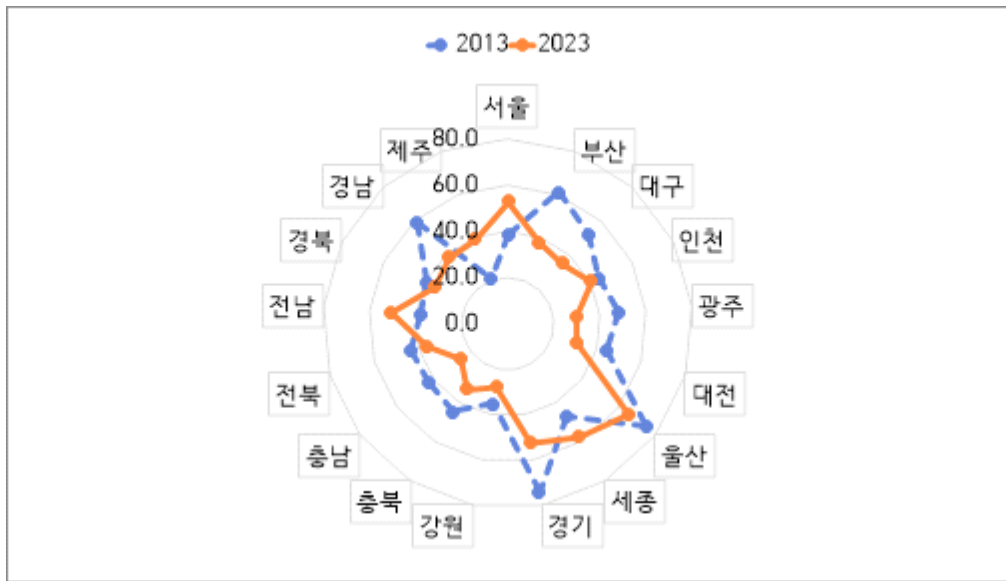
| 구분 | 2013년 | 순위 | 2023년 | 순위 |
|----|-------|----|-------|----|
| 전주 | 22.57 | 3  | 24.82 | 1  |
| 군산 | 25.08 | 2  | 22.29 | 2  |
| 익산 | 27.31 | 1  | 19.60 | 3  |
| 정읍 | 20.29 | 4  | 13.04 | 5  |
| 남원 | 16.19 | 10 | 13.00 | 6  |
| 김제 | 16.31 | 9  | 10.32 | 10 |
| 완주 | 18.81 | 6  | 18.38 | 4  |
| 진안 | 18.03 | 7  | 10.12 | 11 |
| 무주 | 15.52 | 11 | 7.60  | 13 |
| 장수 | 11.05 | 13 | 1.59  | 14 |
| 임실 | 12.20 | 12 | 12.75 | 7  |
| 순창 | 16.33 | 8  | 11.75 | 9  |
| 고창 | 19.25 | 5  | 12.45 | 8  |
| 부안 | 10.63 | 14 | 9.52  | 12 |

## 라. 일자리 종합지수

일자리 종합지수 측정 결과 서울, 세종, 전남, 제주의 경우 지난 10년간 개선되었으나 그 외 지역의 경우 대부분 퇴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일자리 종합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이며, 울산,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울산이 가장 높고, 세종, 경기,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종합지수 순위 변동이 큰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제주지역으로 서울은 2013년 15위에서 4위, 전남은 14위에서 5위, 제주는 17위에서 7위로 크게 개선된 반면, 부산은 3위에서 9위, 대구는 5위에서 12위, 광주는 6위에서 15위로 하락하였다.

전북지역 일자리 종합지수는 2013년 43.9에서 2023년 36.4로 하락하였으나 순위는 10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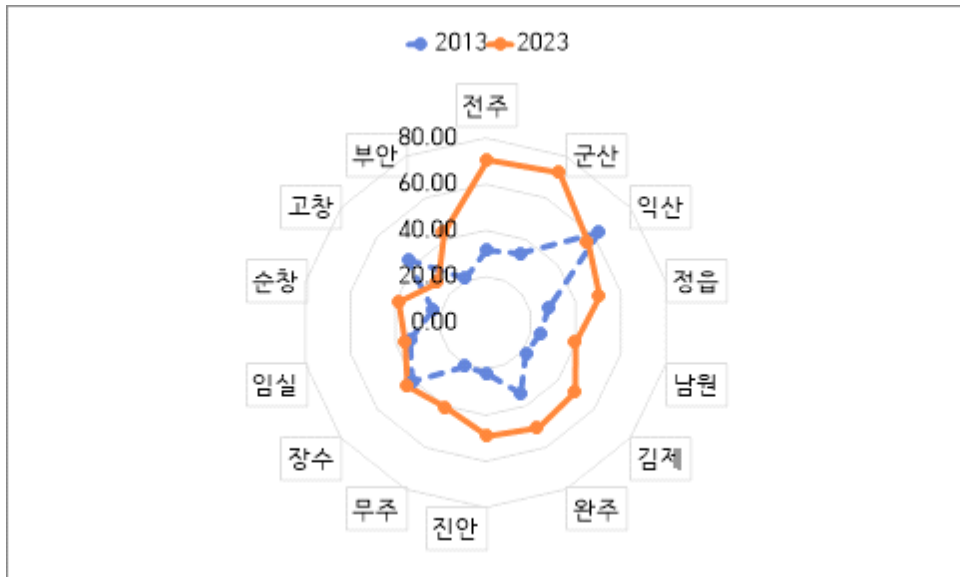
[그림 4-43]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전국 비교

[표 4-33] 시도별 일자리 종합 지수 변화

| 구분 | 2013년 | 순위 | 2023년 | 순위 |
|----|-------|----|-------|----|
| 서울 | 37.9  | 15 | 52.4  | 4  |
| 부산 | 60.7  | 3  | 37.5  | 9  |
| 대구 | 51.5  | 5  | 34.8  | 12 |
| 인천 | 43.6  | 11 | 40.3  | 6  |
| 광주 | 48.0  | 6  | 29.6  | 15 |
| 대전 | 44.3  | 9  | 30.9  | 14 |
| 울산 | 74.8  | 2  | 65.3  | 1  |
| 세종 | 48.0  | 6  | 58.0  | 2  |
| 경기 | 74.9  | 1  | 52.8  | 3  |
| 강원 | 35.7  | 16 | 28.1  | 16 |
| 충북 | 45.4  | 8  | 33.8  | 13 |
| 충남 | 43.2  | 12 | 25.6  | 17 |
| 전북 | 43.9  | 10 | 36.4  | 10 |
| 전남 | 38.1  | 14 | 50.8  | 5  |
| 경북 | 39.5  | 13 | 35.4  | 11 |
| 경남 | 58.5  | 4  | 38.1  | 8  |
| 제주 | 20.1  | 17 | 38.9  | 7  |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일자리 종합지수를 살펴보면 익산, 고창을 제외한 12개 지역의 경우 지난 10년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 2013년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 고창, 장수, 완주 순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군산, 전주, 익산, 완주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종합지수 순위 변동이 큰 지역은 전주, 군산, 진안, 고창 등이다. 전주, 군산, 진안의 경우 일자리 종합지수 순위가 각각 2013년 7위, 6위, 11위에서 2위, 1위, 6위로 상승하였는데, 세 지역 모두 일자리 정책지수가 월등히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창의 경우 2013년 종합지수가 43.65에서 2023년 27.4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일자리 정책지수가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고, 일자리의 질 지수도 상당히 하락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4]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도내 시군 비교

[표 4-34] 전북 시군별 일자리 종합 지수 변화

| 구분 | 2013년 | 순위 | 2023년 | 순위 |
|----|-------|----|-------|----|
| 전주 | 31.21 | 7  | 70.30 | 2  |
| 군산 | 33.10 | 6  | 71.87 | 1  |
| 익산 | 62.42 | 1  | 55.62 | 3  |
| 정읍 | 27.60 | 8  | 49.76 | 5  |
| 남원 | 23.58 | 10 | 39.10 | 12 |
| 김제 | 21.74 | 12 | 48.49 | 7  |
| 완주 | 34.22 | 4  | 50.79 | 4  |
| 진안 | 22.10 | 11 | 49.33 | 6  |
| 무주 | 21.27 | 13 | 41.15 | 10 |
| 장수 | 41.12 | 3  | 44.33 | 8  |
| 임실 | 33.99 | 5  | 36.68 | 13 |
| 순창 | 23.80 | 9  | 39.42 | 11 |
| 고창 | 43.65 | 2  | 27.40 | 14 |
| 부안 | 21.08 | 14 | 43.23 | 9  |

---

## 마. 소결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정책 및 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역주도 일자리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를 측정하였다.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는 일자리 정책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일자리 정책지수는 정책 의지와 정책목표 달성의 2개 하위 지표, 일자리 양 지수는 일자리 규모, 일자리 증감, 일자리 참여의 3개 하위 지표, 일자리 질은 일자리 안정성, 충분한 임금보상, 적당한 노동 시간, 사회적 안전망의 4개 하위 지표의 체계로 구성하였다.

일자리 종합지수 측정결과 2023년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세종, 경기,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경우 대도시권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며, 대기업, 공공기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3-2023년 동안 일자리 종합지수가 상승한 시도는 서울, 세종,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으로 서울의 경우 일자리 정책지수(특히 정책의지)에서 상당수 진전이 있었으며, 세종의 경우 정책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일자리 질 지수에서 개선도가 높았다. 전남과 제주의 경우 일자리 정책지수와 일자리 질 지수에서 개선효과가 높았다.

반면 일자리 종합지수가 급락한 지역은 부산, 광주 등이 있는데, 부산지역의 경우 2023년 정책지수가 2013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광주의 경우 정책지수와 일자리 질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북지역 일자리 종합지수는 2013년 43.9에서 2023년 36.4로 하락하였으나 순위는 10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2023년 일자리 종합지수를 살펴보면 군산, 전주, 익산, 완주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북지역 산업단지, 혁신 기관,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우수한 지역이다.

지난 10년간 일자리 종합지수 순위가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전주, 군산, 진안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일자리 정책지수가 급격히 개선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주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유일하게 개선된 지역이다.



# 제 5 장

##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제5장 결론

### 1. 연구의 요약

지역일자리정책의 공간이 지역 즉, 기초자치단체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지역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여건이나 일자리 성과를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세부적으로 정책목표를 수립하기 보다는 지역행정의 총괄 책임자, 즉 지자체의 장에 의해 정책의 중요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지역일자리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제안하기 위해 일자리 지수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일자리 지수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일자리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일자리 지수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일자리 지수를 측정하고 지역별로 비교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지역일자리에 대한 여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술적 정의에 기반하여 논의하거나 일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 단적인 면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 및 평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정책 및 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역주도 일자리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를 측정하였다.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는 일자리 정책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일자리 정책지수는 정책의지와 정책목표 달성의 2개 하위 지표, 일자리 양 지수는 일자리 규모, 일자리 증감, 일자리 참여의 3개 하위 지표, 일자리 질은 일자리 안정성, 충분한 임금보상, 적당한 노동시간, 사회적 안전망의 4개 하위 지표의 체계로 구성하였다.

가중치 산정 결과 평가자들은 지역일자리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자리 질, 일자리 양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일자리 정책의 하위 지표인 정책의지와 정책노력 중에서는 정책의지가 정책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양 지수의 하위지표에 대한

---

평가는 지역의 일자리창출력을 나타내는 일자리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고용률, 일자리 창출잠재력인 일자리 증감률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질 지수의 하위지표에 대한 평가는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임금수준, 노동시간, 안전망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일자리 종합지수 측정결과 2023년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세종, 경기,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경우 대도시권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며, 대기업, 공공기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3-2023년 동안 일자리 종합지수가 상승한 시도는 서울, 세종,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으로 서울의 경우 일자리 정책지수(특히 정책의지)에서 상당수 진전이 있었으며, 세종의 경우 정책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일자리 질 지수에서 개선도가 높았다. 전남과 제주의 경우 일자리 정책지수와 일자리 질 지수에서 개선효과가 높았다.

반면 일자리 종합지수가 급락한 지역은 부산, 광주 등이 있는데, 부산지역의 경우 2023년 정책지수가 2013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광주의 경우 정책지수와 일자리 질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북지역 일자리 종합지수는 2013년 43.9에서 2023년 36.4로 하락하였으나 순위는 10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2023년 일자리 종합지수를 살펴보면 군산, 전주, 익산, 완주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북지역 산업단지, 혁신기관,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우수한 지역이다.

전북의 일자리 정책지수는 2013년 27.9에서 2023년 25.6으로 하락하였으나 전국 순위는 오히려 7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다. 2013년 일자리 정책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 장수, 고창 순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군산의 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주, 장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일자리 양 지수가 2013년 3.5에서 2023년 2.5로 하락하였지만 전국 순위 변동은 없었다. 시군별 일자리 양 지수를 비교해보면 2013년에 가장 높은 지역은 완주이고, 부안, 남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완주, 임실, 장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일자리 질 지수는 12.5에 8.4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순위는 15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일자리 질 지수는 2013년에는 익산시가 가장 높고 군산, 전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전주가 가장 높고 군산, 익산 순

---

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일자리 질 지수 순위 변동이 큰 지역은 남원, 임실로 남원은 10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고, 임실은 12위에서 7위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차원에서 일자리정책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 및 지역인구 유출방지 차원에서도 지역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도구이며, 지역일자리 평가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도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지역일자리종합지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 전주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일자리 정책지수 및 종합지수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직접일자리 창출 보다는 지역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일자리 창출도구로 창업이나 기업유치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기업유치의 경우 지역 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유치된 대기업의 경우 기술수명주기에서 쇠퇴기에 있거나 기업의 중점분야가 아닌 부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 및 경기변동에 따라 이들 기업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산업 및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창업의 경우 일자리창출력이 크지 않고 기업유치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창업이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역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지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일자리 종합지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량화 했다는 점이다. 즉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구성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지수를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지역일자리 성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과 질, 그리고 지역일자리 정책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는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정책(예산, 달성도), 일자리 양(취업자 수, 고용률 등), 일자리 질(상용일자리 수 등)을 계획서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지역간 객관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자리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역일자리 지수 및 종합지표를 산출함에 있어서 지표별·지수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객관화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AHP분석 통해 경쟁되는 요소의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비교가능성,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종합지수를 지역차원에서 측정하고 적용하여 향후 지역일자리정책 기획, 추진, 평가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광역차원에서의 시군일자리 평가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평가하는 정성적인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경우 실제 데이터의 내용보다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의 충실성, 노력도와 전문가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일자리종합지수는 정량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정성적 점수는 전문가의 평가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 지수와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한계이다. 일자리정책의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일자리목표공시 상에 나오는 예산대비 일자리 예산을 활용하였다. 시군이 일자리목표공시 작성에 예산지표는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지역별로 순수 일자리예산에 대한 검토와 자료 획득의 과정이 있다면 이 부분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인한 광역시도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광역도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고용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한 경우에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고용조사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가 비임금조사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에는 농가소득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통계의 경우 조사표본이 매우 적어 농업비중이 높은 지역의 소득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역고용조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표본의 비중이 크고, 그동안 많은 유사연구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인정된다. 향후 농가소득통계 조사가 안정되고 농가소득의 자료로써 범용적인 활용성이 인정될 정도로 표본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지역고용조사 자료 외에 농가소득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자리 지표와 지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이 이루어졌지만 일자리 정책, 양,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제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의 질 지표 관련 선행에서 논의되어 온 지표 중 고용평등, 산업안전, 능력개발 등은 시군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통계조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 시군자료를 풍부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지표를 포함하여 일자리 종합지수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자리 지표 및 지표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하였지만, 지수별·지표별 중요도 값은 지역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향후 일자리 종합지수를 세분화,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REFERENCE

- Anker, R., Chernyshev, I., Egger, P., Mehran, F., & Ritter, J. (2002).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Working paper no.2. ILO, Geneva.
- Eurofound. (2023). Who we are. <https://www.eurofound.europa.eu/about-eurofound/who-we-are>
- Eurofound. (2021), Working conditions and sustainable work: An analysis using the job quality framework, Challenges and prospects in the EU serie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ILO. (2013a). Decent work indicators : guidelines for producers and users of statistical and legal framework indicators: ILO manual: second version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Geneva.
- ILO. (2013b). Report II. Statistics of work, employment and labour underutilization: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2-11 October 2013).
- ILO. (2023). About the ILO.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lang-en/index.htm>
- OECD. (2023). Job quality. [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job-quality\\_e357cddf-en](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job-quality_e357cddf-en)
- 고용노동부. (2022. 10. 7).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보도자료]. [https://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4057](https://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4057)
- 고용노동부. (2023. 1. 3). 2023년 일자리 예산 30.3조원,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 편성 [보도자료]. [https://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4478](https://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4478)
- 김수은 & 안동신. (2015). 전라북도 일자리의 질 지표구축 및 분석 연구. 전북연구원.
- 김수진. (2022. 5. 26.). 지역 일자리 맵에 대한 소개 [발표자료]. 한국능률협회 2022년 상반기 지역고용아카데미.
- 김영민. (2014). 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 및 추이 분석. 산업연구원.
- 김을식. (2011). 경기도 지역고용종합지수 개발 및 분석. 경기연구원.

- 김을식, 박경진 & 조무상. (2009).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경기연구원.
- 노용환 & 신종각. (2007).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용의 질' 추이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0권(제3호). 45-65.
- 방하남 & 이상호. (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40집(1호). 93-126.
- 심재현,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 노승철. (2014). 지역 일자리 지수 개발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호. (2019).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2019년 봄호.
- 이순국 & 정주연. (2020). 제주지역 기업의 고용창출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 이예리 & 문수성. (2022).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고용의 질 평가 [보도자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800/view.do?nttId=10071938&menuNo=201087&pageIndex=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5). '좋은 일자리' 지표 OECD 국제비교. <http://file.ltoss.co.kr/updata/newout/upload/185/151008114758000001989/%EB%AF%BC%EC%A3%BC%EB%85%B8%EC%B4%9D%EC%9D%B4%EC%8A%88%ED%8E%98%EC%9D%B4%ED%8D%BC-%EC%A2%8B%EC%9D%80%EC%9D%BC%EC%9E%90%EB%A6%AC%EC%A7%80%ED%91%9COECD%EA%B5%AD%EC%A0%9C%EB%B9%84%EA%B5%90151007.pdf>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2023). 전라북도 2023년도 지역일자리대책 추진계획. [https://reis.or.kr/disclosureDetail/view.do?idx=2384&reffer\\_sido=SIDO\\_0000013&minsun=8&year=2023&selectMinsun=4%2C8%2C2023](https://reis.or.kr/disclosureDetail/view.do?idx=2384&reffer_sido=SIDO_0000013&minsun=8&year=2023&selectMinsun=4%2C8%2C2023)

## SUMMARY

---

# The Development of Jeollabuk-do's Composite Job Creation Index and Related Analytical Research

Soo-Eun Kim · Sae Hyun Park

##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s

### ■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Regional job creation support policies have expanded their geographical scope to include basic local governments and are becoming increasingly prevalent 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 Regional job creation should not just be viewed as a demand derived from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but as a high-priority task requiring proactive policy intervention to address critical issues such as population outflow and regional extinction. An analytical tool must be developed to effectively plan and evaluate job creation support policies in this context.
- This study aims to leverage the newly developed composite index to ascertain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region-specific job creation support policies while facilitating policy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 ■ 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

- Targeting Jeollabuk-do (a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we analyzed the respective job creation progress of its 14 cities and counties between 2013 and 2023. For comparative analysis, we also examined 17 other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 We utilized a literature review, an expert review, and an expert advisory council to select and analyze the composite index's sectoral indices and detailed indicators.
- The composite index comprises three sectoral indices: the job creation policy index, the job quantity index, and the job quality index, with two, three, and four detailed indicators, respectively.
- We conducted an expert survey an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determine the weight of each index and indic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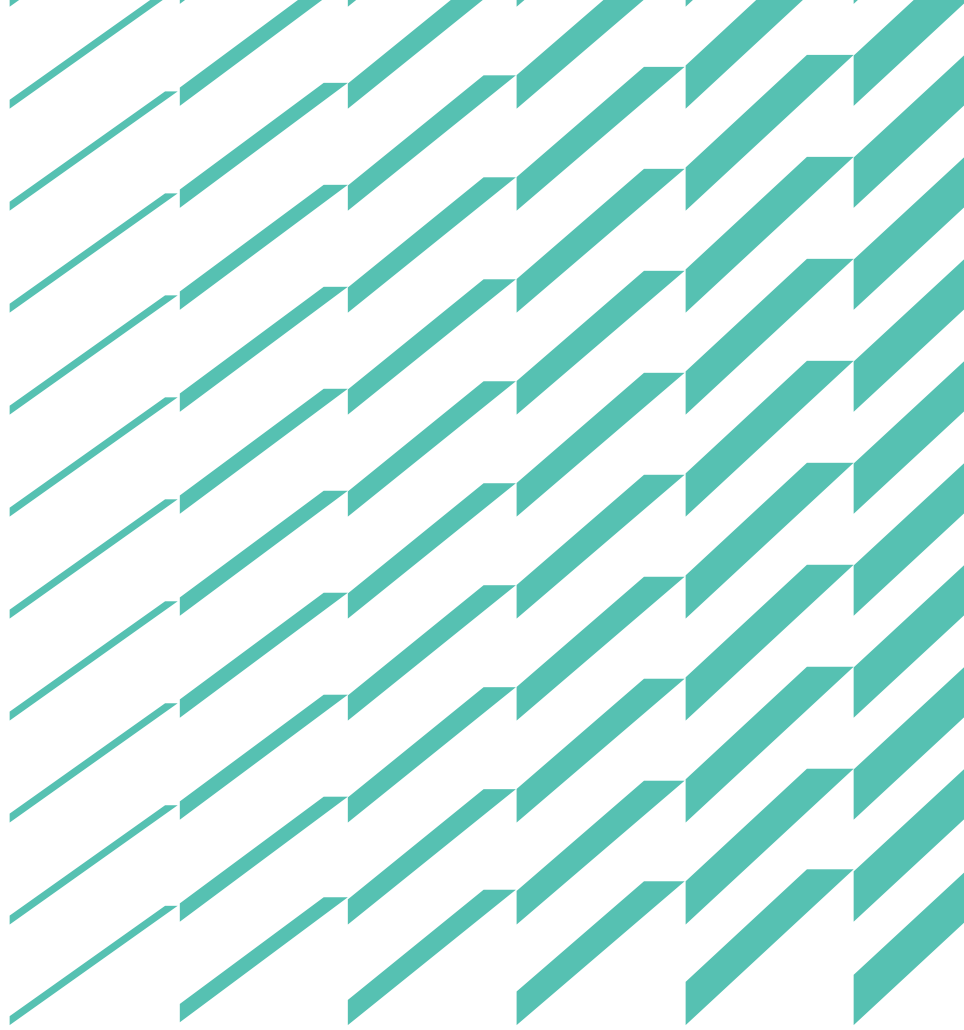
## 2.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 Research summary

- Jeollabuk-do's composite index has sharply declined over the past ten years. All sectoral indices have fallen, with the job quality sector leading the decline. Nevertheless, its ranking remains unchanged (tenth nationwide).
- Among Jeollabuk-do's 14 cities and counties, Gunsan boasts the highest composite index, followed by Jeonju, Iksan, and Wanju, in which industrial complexes, innovative institutions, and large-sized companies are concentrated, providing high-quality jobs.
- Jeonju, Gunsan, Gimje, and Jinan significantly improved their composite indices thanks to a remarkable turnaround in their job creation policy index.

**Key Words** Job Creation Support Policy, Job Creation Policy Index, Composite Job Creation Index





## 부록

1. 전문가대상 일자리지표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설문지
2. 지역일자리 지수별 지표분석 결과





## 부 록

### APPENDIX

## 1. 전문가 대상 일자리지표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설문지

### <전북 일자리 종합지수 개발 및 지표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전북 일자리 종합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설문지 작성요령 ◆

1. 평가항목 간 비교는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2. 다음 그림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의 세부지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 일자리 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AHP 평가항목 요약>

| 구성 항목  | 세부지표     | 내용                             |
|--------|----------|--------------------------------|
| 일자리 정책 | 정책 의지    | 당해연도 지역총예산 중 일자리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        | 정책추진 노력  | 당해연도 지역일자리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
| 일자리 양  | 일자리 규모   | 해당지역 인구대비 사업체종사자수 비중           |
|        | 일자리 증감   | 전년도 사업체종사자수 당해연도 사업체종사자수 증감율   |
|        | 고용참여     | 해당지역 고용률                       |
| 일자리 질  | 고용안정성    | 전체취업자 수 중 상용직 고용자 비중           |
|        | 충분한 임금보상 | 임금종사자 중 중위소득의 150% 이상 비중       |
|        | 적정한 노동시간 | 전체 근로자 중 주 근로시간 36~52시간 종사자수   |
|        | 사회적 안전망  | 전체 취업자 중 사회보험 가입자수 비중          |

※ 설문지 작성 예시

다음 설문은 한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한 숫자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척도 | 정의       | 설명                                      |
|----|----------|---|
| 1  | 동등하게 중요  | 두 개의 요인이 똑같이 중요함                        |
| 3  | 약간 더 중요  | 한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약간 더 중요함                  |
| 5  | 더욱 더 중요  | 한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더욱 더 중요함                  |
| 7  | 대단히 더 중요 | 한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대단히 더 중요함                 |
| 9  | 절대적으로 중요 | 한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함 |

【질문】

○ 귀하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재산과 명예 중에서 무엇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평가 항목 | ⑨ | ⑧ | ⑦ | ⑥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평가 항목 |
|-------|---|---|---|---|---|---|---|---|---|---|---|---|---|---|---|---|---|-------|
| 부     | ✓ |   |   |   |   |   |   |   |   |   |   |   |   |   |   |   |   | 명예    |

【해석】

○ 부가 명예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입니다.

## 지역일자리 평가항목별 중요도 평가를 위한 질문

※ 다음은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개발에 있어서 구성항목 및 세부지표의 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각 항목 및 지표의 중요도 순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1.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개발에 있어서 다음 평가항목별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부지표   | 순위       |
|--------|----------|
| 일자리 정책 | (      ) |
| 일자리의 양 | (      ) |
| 일자리의 질 | (      ) |

2.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구성항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정책(Employment Policy) 세부지표별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부지표    | 순위       |
|---------|----------|
| 정책 의지   | (      ) |
| 정책추진 노력 | (      ) |

3.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구성항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양(Job Quantity) 세부지표별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부지표   | 순위       |
|--------|----------|
| 일자리 규모 | (      ) |
| 일자리 증감 | (      ) |
| 고용참여   | (      ) |

4.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구성항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질(Job Quality) 세부지표별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부지표     | 순위  |
|----------|-----|
| 고용안정성    | ( ) |
| 충분한 임금보상 | ( ) |
| 적정한 노동시간 | ( ) |
| 사회적 안전망  | ( ) |

###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가중치 평가를 위한 질문

※ 다음 설문은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들 간에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장의 중요도 순위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관점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개발에 있어서 다음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평가 항목  | ⑨ | ⑧ | ⑦ | ⑥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평가 항목 |
|--------|---|---|---|---|---|---|---|---|---|---|---|---|---|---|---|---|---|-------|
| 일자리 정책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양 |
| 일자리 정책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질 |
| 일자리 양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질 |



2.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구성항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정책”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평가 항목 | ⑨ | ⑧ | ⑦ | ⑥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평가 항목 |
|-------|---|---|---|---|---|---|---|---|---|---|---|---|---|---|---|---|---|-------|
| 정책 의지 |   |   |   |   |   |   |   |   |   |   |   |   |   |   |   |   |   | 추진 노력 |

3.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구성항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양”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평가 항목  | ⑨ | ⑧ | ⑦ | ⑥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평가 항목  |
|--------|---|---|---|---|---|---|---|---|---|---|---|---|---|---|---|---|---|--------|
| 일자리 규모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증감 |
| 일자리 규모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참여 |
| 일자리 증감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참여 |

4. 지역일자리 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구성항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질”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평가 항목    | ⑨ | ⑧ | ⑦ | ⑥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평가 항목    |
|----------|---|---|---|---|---|---|---|---|---|---|---|---|---|---|---|---|---|----------|
| 고용 안정성   |   |   |   |   |   |   |   |   |   |   |   |   |   |   |   |   |   | 충분한 임금보상 |
| 고용 안정성   |   |   |   |   |   |   |   |   |   |   |   |   |   |   |   |   |   | 적당한 노동시간 |
| 고용 안정성   |   |   |   |   |   |   |   |   |   |   |   |   |   |   |   |   |   | 사회적 안전망  |
| 충분한 임금보상 |   |   |   |   |   |   |   |   |   |   |   |   |   |   |   |   |   | 적당한 노동시간 |
| 충분한 임금보상 |   |   |   |   |   |   |   |   |   |   |   |   |   |   |   |   |   | 사회적 안전망  |
| 적당한 노동시간 |   |   |   |   |   |   |   |   |   |   |   |   |   |   |   |   |   | 사회적 안전망  |

---

※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응답자 정보를 요청하오니,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
| 성 명 :       |          |
| 소 속 :       |          |
| 직 위 :       |          |
| 연락처 : (H.P) | (E-mail) |

## 2. 지역일자리 지수별 지표분석 결과

### 가. 일자리정책 지수

[표 1] 전국 일자리정책지수 결과

| 구분 | 2013년 |       |       | 2023년 |       |       |
|----|-------|-------|-------|-------|-------|-------|
|    | 정책지표  | 정책의지  | 정책노력  | 정책지표  | 정책의지  | 정책노력  |
| 서울 | 10.40 | 10.40 | 0.00  | 41.87 | 1.47  | 40.39 |
| 부산 | 84.19 | 58.60 | 25.59 | 42.23 | 8.69  | 33.54 |
| 대구 | 76.89 | 53.19 | 23.70 | 39.77 | 4.99  | 34.78 |
| 인천 | 40.75 | 14.37 | 26.39 | 45.44 | 5.06  | 40.38 |
| 광주 | 46.67 | 25.29 | 21.37 | 24.16 | 11.75 | 12.41 |
| 대전 | 39.53 | 12.56 | 26.97 | 18.08 | 3.16  | 14.92 |
| 울산 | 55.97 | 34.54 | 21.43 | 68.02 | 58.60 | 9.42  |
| 세종 | 80.90 | 52.59 | 28.32 | 35.96 | 0.00  | 35.96 |
| 경기 | 83.50 | 57.21 | 26.28 | 50.76 | 9.36  | 41.40 |
| 강원 | 31.40 | 3.08  | 28.32 | 35.99 | 9.25  | 26.75 |
| 충북 | 48.03 | 6.63  | 41.40 | 21.34 | 1.79  | 19.55 |
| 충남 | 32.67 | 5.26  | 27.41 | 5.92  | 5.92  | 0.00  |
| 전북 | 47.37 | 10.89 | 36.48 | 48.24 | 10.08 | 38.16 |
| 전남 | 37.84 | 8.37  | 29.47 | 70.46 | 29.12 | 41.34 |
| 경북 | 35.16 | 7.85  | 27.31 | 37.53 | 3.71  | 33.81 |
| 경남 | 57.31 | 27.69 | 29.62 | 36.80 | 13.21 | 23.59 |
| 제주 | 19.38 | 0.00  | 19.38 | 47.13 | 6.37  | 40.76 |

[표 2] 전북 시군별 일자리정책지수 결과

| 시군 | 2013  |       |       | 2023  |       |       |
|----|-------|-------|-------|-------|-------|-------|
|    | 정책지표  | 정책의지  | 정책노력  | 정책지표  | 정책의지  | 정책노력  |
| 전주 | 12.35 | 12.26 | 0.09  | 83.47 | 58.60 | 24.87 |
| 군산 | 9.57  | 9.37  | 0.19  | 90.07 | 54.86 | 35.21 |
| 익산 | 0.53  | 0.42  | 0.12  | 64.06 | 27.56 | 36.50 |
| 정읍 | 13.28 | 13.08 | 0.19  | 63.14 | 26.33 | 36.81 |
| 남원 | 7.76  | 7.68  | 0.09  | 45.61 | 8.66  | 36.95 |
| 김제 | 3.69  | 3.44  | 0.25  | 64.10 | 26.30 | 37.80 |
| 완주 | 17.97 | 17.72 | 0.25  | 44.20 | 3.36  | 40.84 |
| 진안 | 0.15  | 0.00  | 0.15  | 54.37 | 12.97 | 41.40 |
| 무주 | 6.91  | 6.65  | 0.26  | 54.73 | 18.26 | 36.47 |
| 장수 | 54.27 | 12.87 | 41.40 | 72.04 | 40.95 | 31.09 |
| 임실 | 56.41 | 56.39 | 0.02  | 33.30 | 0.00  | 33.30 |
| 순창 | 14.91 | 14.88 | 0.03  | 48.43 | 13.87 | 34.56 |
| 고창 | 58.62 | 58.60 | 0.02  | 24.03 | 24.03 | 0.00  |
| 부안 | 15.80 | 15.80 | 0.00  | 55.37 | 19.04 | 36.32 |

## 나. 일자리 양 지수

[표 3] 전국 일자리양 지수 결과

| 구분 | 일자리양<br>지표 | 규모    | 증감    | 참여    | 일자리양<br>지표 | 규모    | 증감    | 참여    |
|----|------------|-------|-------|-------|------------|-------|-------|-------|
| 서울 | 56.47      | 33.41 | 0.00  | 23.06 | 54.02      | 45.69 | 0.00  | 8.33  |
| 부산 | 33.37      | 10.94 | 0.88  | 21.56 | 13.88      | 8.64  | 5.24  | 0.00  |
| 대구 | 29.93      | 6.29  | 1.13  | 22.51 | 3.27       | 0.00  | 2.62  | 0.65  |
| 인천 | 25.96      | 0.00  | 2.25  | 23.71 | 19.78      | 0.09  | 7.14  | 12.54 |
| 광주 | 40.01      | 15.17 | 1.00  | 23.84 | 36.91      | 15.63 | 7.14  | 14.14 |
| 대전 | 37.33      | 11.34 | 2.38  | 23.61 | 32.28      | 15.34 | 3.09  | 13.85 |
| 울산 | 63.87      | 30.90 | 8.89  | 24.08 | 30.34      | 19.05 | 4.28  | 7.01  |
| 세종 | 72.35      | 45.69 | 26.66 | 0.00  | 66.92      | 12.62 | 26.66 | 27.65 |
| 경기 | 41.16      | 11.42 | 5.51  | 24.24 | 32.45      | 9.22  | 8.33  | 14.89 |
| 강원 | 39.31      | 10.31 | 6.13  | 22.87 | 32.14      | 10.67 | 7.14  | 14.33 |
| 충북 | 45.15      | 16.60 | 3.63  | 24.92 | 55.80      | 24.55 | 6.90  | 24.35 |
| 충남 | 50.30      | 17.90 | 4.76  | 27.65 | 58.94      | 25.58 | 8.09  | 25.27 |
| 전북 | 31.60      | 4.78  | 3.25  | 23.57 | 22.56      | 5.69  | 2.86  | 14.02 |
| 전남 | 29.67      | 2.19  | 3.25  | 24.23 | 34.14      | 11.34 | 6.43  | 16.38 |
| 경북 | 41.95      | 13.02 | 3.63  | 25.30 | 35.60      | 11.93 | 5.71  | 17.96 |
| 경남 | 44.50      | 18.81 | 1.25  | 24.44 | 31.93      | 10.72 | 6.90  | 14.31 |
| 제주 | 56.28      | 21.62 | 7.76  | 26.90 | 54.64      | 19.82 | 7.38  | 27.44 |

[표 4] 시군 일자리 양 지수 결과

| 시군 | 일자리양<br>지표 | 규모    | 증감    | 참여    | 일자리양<br>지표 | 규모    | 증감    | 참여    |
|----|------------|-------|-------|-------|------------|-------|-------|-------|
| 전주 | 36.21      | 21.07 | 13.09 | 2.05  | 11.26      | 6.94  | 0.00  | 4.32  |
| 군산 | 39.99      | 27.13 | 12.85 | 0.00  | 16.70      | 11.37 | 5.33  | 0.00  |
| 익산 | 36.23      | 21.18 | 14.76 | 0.29  | 18.76      | 10.74 | 2.82  | 5.19  |
| 정읍 | 20.82      | 9.04  | 10.00 | 1.79  | 38.19      | 9.22  | 18.50 | 10.46 |
| 남원 | 40.61      | 11.78 | 19.99 | 8.83  | 17.51      | 2.80  | 5.33  | 9.38  |
| 김제 | 36.42      | 14.88 | 14.28 | 7.26  | 38.15      | 21.72 | 6.59  | 9.84  |
| 완주 | 78.48      | 45.69 | 26.66 | 6.13  | 81.68      | 45.69 | 19.45 | 16.54 |
| 진안 | 36.35      | 2.94  | 26.42 | 6.99  | 37.61      | 5.77  | 18.82 | 13.02 |
| 무주 | 28.37      | 10.97 | 0.00  | 17.40 | 41.26      | 13.32 | 7.53  | 20.41 |
| 장수 | 30.03      | 0.00  | 2.38  | 27.65 | 41.50      | 9.78  | 4.08  | 27.65 |
| 임실 | 5.64       | 4.72  | 0.00  | 0.92  | 57.08      | 25.29 | 26.66 | 5.13  |
| 순창 | 16.96      | 3.61  | 10.47 | 2.88  | 18.24      | 0.00  | 7.53  | 10.71 |
| 고창 | 21.78      | 3.23  | 11.66 | 6.89  | 20.14      | 4.17  | 0.63  | 15.34 |
| 부안 | 41.06      | 13.72 | 18.57 | 8.77  | 39.63      | 7.94  | 15.68 | 16.00 |

## 다. 일자리 질

[표 5] 전국 일자리질 지수 결과

| 구분 | 질     | 고용안정성 | 임금보상  | 근로시간  | 사회적<br>안전망 | 질     | 고용안정성 | 임금보상  | 근로시간  | 사회적<br>안전망 |
|----|-------|-------|-------|-------|------------|-------|-------|-------|-------|------------|
| 서울 | 72.28 | 35.45 | 14.82 | 13.94 | 8.07       | 67.51 | 33.77 | 12.55 | 13.12 | 8.07       |
| 부산 | 44.15 | 26.43 | 5.08  | 10.36 | 2.28       | 37.84 | 23.83 | 2.13  | 10.13 | 1.75       |
| 대구 | 37.73 | 25.76 | 3.23  | 7.34  | 1.40       | 37.06 | 22.54 | 3.27  | 9.98  | 1.27       |
| 인천 | 47.45 | 33.15 | 2.77  | 9.49  | 2.03       | 38.90 | 22.98 | 3.91  | 10.96 | 1.05       |
| 광주 | 52.59 | 32.33 | 5.25  | 13.65 | 1.37       | 35.35 | 24.48 | 0.00  | 10.12 | 0.76       |
| 대전 | 50.96 | 33.96 | 3.43  | 10.87 | 2.71       | 49.21 | 30.59 | 4.28  | 12.04 | 2.30       |
| 울산 | 80.83 | 48.16 | 14.28 | 14.07 | 4.33       | 71.93 | 37.88 | 16.90 | 14.07 | 3.09       |
| 세종 | 0.00  | 0.00  | 0.00  | 0.00  | 0.00       | 87.67 | 48.16 | 29.71 | 8.93  | 0.87       |
| 경기 | 65.32 | 37.71 | 12.80 | 11.77 | 3.04       | 61.95 | 34.04 | 12.50 | 13.18 | 2.23       |
| 강원 | 37.21 | 14.40 | 16.94 | 5.04  | 0.84       | 15.37 | 7.31  | 6.13  | 1.64  | 0.29       |
| 충북 | 43.19 | 20.67 | 13.10 | 7.59  | 1.84       | 45.44 | 21.35 | 16.25 | 6.77  | 1.07       |
| 충남 | 47.70 | 22.20 | 20.56 | 3.73  | 1.21       | 44.49 | 15.36 | 22.08 | 6.08  | 0.98       |
| 전북 | 34.81 | 9.26  | 17.62 | 7.32  | 0.62       | 23.25 | 5.85  | 13.06 | 4.35  | 0.00       |
| 전남 | 34.89 | 0.00  | 29.71 | 5.18  | 0.00       | 26.98 | 0.00  | 26.79 | 0.00  | 0.19       |
| 경북 | 39.35 | 10.60 | 22.29 | 5.23  | 1.23       | 32.10 | 5.28  | 21.61 | 4.71  | 0.50       |
| 경남 | 57.57 | 28.27 | 18.40 | 8.36  | 2.53       | 42.00 | 17.64 | 17.90 | 5.36  | 1.10       |
| 제주 | 6.33  | 6.05  | 0.00  | 0.00  | 0.28       | 22.06 | 6.62  | 13.67 | 1.71  | 0.06       |

[표 6] 시군 일자리질 지수 결과

| 시군 | 질     | 고용안정성 | 임금보상  | 근로시간  | 사회적<br>안전망 | 질     | 고용안정성 | 임금보상  | 근로시간  | 사회적<br>안전망 |
|----|-------|-------|-------|-------|------------|-------|-------|-------|-------|------------|
| 전주 | 62.70 | 44.20 | 0.00  | 13.62 | 4.88       | 68.94 | 48.16 | 1.18  | 14.07 | 5.54       |
| 군산 | 69.66 | 48.16 | 2.69  | 13.93 | 4.88       | 61.93 | 39.69 | 2.90  | 12.93 | 6.40       |
| 익산 | 75.86 | 44.21 | 10.91 | 14.07 | 6.68       | 54.46 | 37.09 | 0.00  | 12.30 | 5.07       |
| 정읍 | 56.37 | 27.60 | 17.05 | 6.42  | 5.30       | 36.22 | 18.10 | 10.78 | 4.54  | 2.80       |
| 남원 | 44.97 | 17.32 | 18.59 | 6.02  | 3.03       | 36.10 | 16.51 | 11.28 | 5.88  | 2.43       |
| 김제 | 45.31 | 14.66 | 21.42 | 6.76  | 2.46       | 28.65 | 6.96  | 13.49 | 3.47  | 4.72       |
| 완주 | 52.25 | 22.15 | 18.05 | 8.86  | 3.19       | 51.07 | 23.02 | 8.45  | 11.53 | 8.07       |
| 진안 | 50.07 | 11.96 | 27.06 | 2.98  | 8.07       | 28.12 | 1.06  | 18.59 | 7.21  | 1.26       |
| 무주 | 43.12 | 11.90 | 27.51 | 2.17  | 1.53       | 21.11 | 2.90  | 10.82 | 5.82  | 1.57       |
| 장수 | 30.69 | 8.30  | 20.57 | 0.77  | 1.05       | 4.41  | 0.82  | 3.59  | 0.00  | 0.00       |
| 임실 | 33.88 | 0.00  | 29.71 | 4.18  | 0.00       | 35.43 | 6.30  | 18.19 | 8.44  | 2.49       |
| 순창 | 45.37 | 11.54 | 29.49 | 2.25  | 2.10       | 32.63 | 0.00  | 29.71 | 1.61  | 1.31       |
| 고창 | 53.48 | 14.10 | 28.79 | 8.93  | 1.67       | 34.59 | 4.11  | 28.50 | 1.37  | 0.62       |
| 부안 | 29.54 | 9.93  | 18.87 | 0.00  | 0.74       | 26.45 | 1.74  | 20.94 | 2.95  | 0.82       |



기본연구 2023-15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지수 개발 및 분석 연구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16-6 953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